

기본연구

2022-27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김승보·유한구·김안국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RIVET



기본연구

—  
2022-27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  
김승보·유한구·김안국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VOCATIONAL

EDUCATION & TRAINING

K R I V E T



## 머 리 말

창의와 혁신을 위한 비기업·비경제 부문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 그리고 기업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도입 움직임을 포괄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화와 탄소중립화, 그리고 글로벌 차원의 공급망 재편 등 내외적 도전을 극복할 새로운 힘으로 사회적경제 부문이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오랜 도전 과제인 저출산·고령화라는 위기 상황과, 코로나19를 통해 더욱 커진 계층적 양극화, 실업문제 등으로 허약해진 사회적 체질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회적 해법이 필요하다. 수익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가치 확장과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소유관계와 지배구조(governance)를 동시에 추구하는 사회적경제는 이러한 질문에 몇 가지 실마리를 던져 주고 있다. 특히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도시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우리나라의 사회서비스 부문을 중심으로 새로운 발전 동력으로서 사회적경제라는 대안이 강조되고 있다. 해외의 사례에서 보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가 독과점 등 시장 지배력 횡포나, 비대칭 정보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에 새로운 문제 해결의 열쇠로 작용할지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교육·인재육성 관련 이론과 접근모형, 중앙 및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추진 현황과 이슈,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교육의 상황 등 분석을 토대로, 제4차 사회적경제 5개년 계획을 염두에 둔 발전방향과 전략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에 향후 정부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지

방자치단체, 지역현장의 사회적경제 관계자들, 그리고 대학 및 학교, 일반시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 추진 및 논의에 있어 주요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

아울러 본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김승보 박사가 책임을 맡고, 유한구 박사, 김안국 박사가 공동으로 참여하였다. 성실히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 또한 본 연구를 위해 간담회와 의견조사에 자문과 도움을 준 사회적경제의 현장 관계자 여러분, 중간지원조직의 담당자, 대학연구자 및 지자체 관계자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분석이나 정책 대안, 제안 사항 등은 연구자들의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힌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원장 류 장 수

# 차례

## 제1장 서론\_1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	3
제2절 연구의 내용 .....	6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	6

## 제2장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_9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 .....	11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요건 .....	24
제3절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	34

## 제3장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실태와 과제\_49

제1절 중앙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과제 .....	51
제2절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70
제3절 민간 부문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	104
제4절 소 결 .....	128

## 제4장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역할\_133

제1절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인력양성 형태 .....	135
제2절 대학의 인력양성 실태 .....	145
제3절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	157
제4절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 .....	164

**제5장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_173**

제1절 델파이 조사 개요 ..... 175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 182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 194

**제6장 결론 및 정책 제안\_201**

제1절 요약 및 결론 ..... 203  
제2절 정책 제안 ..... 214

**참고문헌\_228**

**부 록\_241**



## 표 차례

〈표 2-1〉 영국, 일본의 공익 활동 규정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13
〈표 2-2〉 COPNI(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 ……………	14
〈표 2-3〉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모형 ……………	17
〈표 2-4〉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 ……………	26
〈표 2-5〉 사회적경제에 대한 OECD 각료이사회 의 기본 인식(2022. 6.) …	35
〈표 2-6〉 사회적경제의 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사항 ……………	36
〈표 2-7〉 상업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차이 ……………	39
〈표 3-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정책 영역과 과제 ……………	56
〈표 3-2〉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현황(2016~2020) ……………	58
〈표 3-3〉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	59
〈표 3-4〉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수행 사업 현황(2022년) ………	61
〈표 3-5〉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사업 중 교육인재육성 관련 내용(2022년) …	65
〈표 3-6〉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정책 사업 수행 요소(2022년) ……………	68
〈표 3-7〉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계획수립 추진 현황 ……………	70
〈표 3-8〉 광역단위 종합계획의 전략적 과제로 반영된 항목 ……………	72
〈표 3-9〉 전국 조례 운용 현황(규칙 제외) ……………	80
〈표 3-10〉 사회적경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	81
〈표 3-11〉 광주광역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비교 ………	86
〈표 3-12〉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지역 분포 ……………	88

〈표 3-1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현황(마을기업 제외) .....	90
〈표 3-1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 .....	91
〈표 3-1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과 현황(2022. 11. 현재) .....	92
〈표 3-16〉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전국 분포 .....	96
〈표 3-17〉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량 .....	100
〈표 3-18〉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	101
〈표 3-19〉 사회적경제와 비영리 섹터의 비교 .....	107
〈표 3-20〉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	108
〈표 3-21〉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별 현황(2022년 9월 기준) .....	109
〈표 3-22〉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유형 .....	111
〈표 3-23〉 비영리조직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	113
〈표 3-24〉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	114
〈표 3-25〉 국내 주요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2020년 기준) .....	114
〈표 3-26〉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예시) .....	115
〈표 3-27〉 공익활동가 활동력 제고를 위한 교육 주제 .....	116
〈표 3-28〉 중소기업 비영리단체의 중견 관리자를 위한 단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안) .....	116
〈표 3-29〉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	118
〈표 3-30〉 전통적 비영리 및 자원봉사 섹터의 교육내용 사례 .....	119
〈표 3-31〉 KOICA 사회적경제 X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무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2022년) .....	121
〈표 3-32〉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 커리큘럼(2021년) .....	121
〈표 3-33〉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접점 사례(창업 등) .....	127

〈표 4-1〉 ESG 경영의 핵심요소 .....	136
〈표 4-2〉 주요 상장기업 ESG 종합 등급부여 현황 .....	137
〈표 4-3〉 사회적경제의 특징에 따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	138
〈표 4-4〉 비정부·비영리기구에 관한 정규 학위과정 .....	140
〈표 4-5〉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전략 .....	143
〈표 4-6〉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 현황 .....	147
〈표 4-7〉 NGO, 시민 관련학과 개설현황 .....	149
〈표 4-8〉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재적생 현황 .....	150
〈표 4-9〉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지역별 재적생 현황 .....	151
〈표 4-10〉 2020년 대학의 비학위과정 운영실적 .....	153
〈표 4-1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현황 .....	157
〈표 4-1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내용 .....	159
〈표 4-1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 및 학과개설 현황 .....	160
〈표 4-14〉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분류 .....	162
〈표 5-1〉 델파이조사 대상자 .....	177
〈표 5-2〉 1차 델파이조사 설문 내용 .....	180
〈표 5-3〉 2차 델파이조사 설문 내용 .....	181
〈표 5-4〉 2018년 핵심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	184
〈표 5-5〉 2018년 하위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	185
〈표 5-6〉 향후 5년간의 비전과 목표의 유효성(9점 만점) .....	187
〈표 5-7〉 2018년과 2023년의 비전 비교 .....	196
〈표 5-8〉 2018년과 2023년의 전략 목표 비교 .....	196
〈표 5-9〉 2018년과 2023년의 핵심전략 비교 .....	197

〈표 5-10〉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된 하위전략 .....	198
〈표 5-11〉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	199
〈표 6-1〉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	211

## 그림 차례

[그림 2-1]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과 지형 .....	22
[그림 2-2] 사회적경제의 인적자원개발 과제 .....	43
[그림 3-1]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전국) .....	93
[그림 3-2]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8개 광역시) .....	94
[그림 3-3]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9개 광역도) .....	94
[그림 3-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변화 .....	112
[그림 3-5] 사회적경제 대상별 필요역량 .....	117
[그림 4-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우수사례 .....	161
[그림 4-2] 경상국립대학교(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계전공 커리큘럼 ·	165
[그림 4-3] 이화여대 사회혁신 리더 양성과정 .....	167
[그림 4-4]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량 .....	168
[그림 5-1] 2018년 비전의 하위 요소별 향후 5년 유효성 .....	183
[그림 5-2] The Locus for Focus 요구분석 모델 적용 분석 결과 .....	186
[그림 5-3]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핵심전략 .....	188
[그림 5-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의 하위전략 .....	189
[그림 5-5]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의 하위전략 .....	190
[그림 5-6]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의 하위전략 .....	191
[그림 5-7]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의 하위전략 .....	192

[그림 5-8]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의 하위전략 .....	193
[그림 6-1] 사회적경제 교육 인재육성 생태계 .....	212
[그림 6-2] 사회적경제 양성 단계별 구상 가안 .....	214

# 제1장

## 서론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제2절 연구의 내용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 제1장 | 서론

### 제1절 연구 필요성 및 목적

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을 극복하고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를 혁신할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 부문이 주목받고 있다.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과 시행을 통해,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출현과 각 분야 활동을 통해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sup>1)</sup> 이제 윤석열 정부는 110대 국정과제에서 ‘사회서비스 혁신을 통한 복지·돌봄서비스 고도화’와 관련하여 ‘복지-고용-성장의 선순환’의 주요 고리로서 사회적경제를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도화가 복지, 고용, 지역 등 사회적 문제해결의 새로운 실마리로서 김영삼 정부, 이명박 정부 등에서 수립·추진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새 정부에서도 관련 정책 추진은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요인이 있다.

---

1) 이미 1996년의 5개 시범사업으로부터 비롯된 자활기업, 2010년의 육성계획 수립 후 추진된 마을기업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일환으로 볼 수 있음(본문 상세 기술).

#### 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고용노동부는 ‘저성장 시대의 따뜻한 성장동력’이라는 모토로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2018~2022년까지 5년간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부터 제4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과는 별도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2018년 7월 3일에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연장선에서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정책을 반영하고자 한다.

현재 사회적경제 추진 체계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를 중심으로 상당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에 참여한 중앙부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에 이르고, 전국 지자체에는 810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운영(2022. 4. 현재)되고 있다. 현재 전국에 260개 지자체(광역시·기초지자체, 시도교육청 포함)가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한 지자체당 평균 3.1개의 조례가 운영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자체에는 관련 조례를 뒷받침하기 위한 담당부서와 다양한 사업이 전개되고 있으며, 중앙부처별로 흩어져 추진되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을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역할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그 중요성이 작지 않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부문은 이미 해당 부문의 규모가 크고 경제활동도 활발한 EU 등 국가와 비교하여 경제적 비중, 고용 창출, 자생력 있는 모델 창출 등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노정하고 있다. 여전히 사회적경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도가 그리 높지 않으며, 사회적경제 관련 매출액 중 많은 부분이 공공구매에 의존되는 등 사업 영역과 구매층도 매우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운영재원 역시 정부 재정지원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을 뿐만 아니라 적자 상태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많으며, 사회적경제 조직의 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도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의 사회적경제가 한 차원 높은 성장 탄력을 받기 위해 지적되는 일반적인 논의를 종합하면, 사회적경제 생태계에서의 교육·인재 등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새로운 정책 수립이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사회 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동 기반 및 생태계가 작동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관련 조직 종사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을 함양해야 한다. 이의 범주에는 사회공헌 활동 차원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의 참여까지 포괄하는 폭넓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 관련 역량 제고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생산한 제품·서비스 구매를 강제하는 ‘공공적 규제’가 적정 유지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며, 이를 위해서는 규제 저항이 최소화되고 수용력 및 확산성을 제고하는 차원에서 사회적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 형성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지나친 공공적 규제가 사회적경제 조직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적정 수준의 공공적 규제를 통해 사회서비스 등 시장 공급 부문의 효율적 자원배분 메커니즘을 작동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한편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사회적경제를 통해 제공되는 양질의 산출물과 매력도 제고를 통해 다양한 인재가 사회적경제 부문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와 토대 마련 요구는 광범위한 공감대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편으로 사회적경제 종사자 및 지도자의 전문성과 리더십을 고양하여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 전반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는 교육과 인재양성 과정을 촘촘히 형성하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 제2절 연구의 내용

이에 따라 본 연구는 경쟁력 있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 문제 해결력 증대를 위해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핵심동력이 되는 교육·인재 등의 효과적인 인적자원개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또한 사회적 공감대와 인식 제고를 위한 초·중등 및 대학 과정에서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광범위한 콘텐츠 공유 방안과, 성인교육 차원에서의 평생 교육 등 각종 전달체계를 활용한 교육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그리고 종사자 및 경영자의 전문성과 리더십 역량 고양을 위해 중앙부처 및 지자체 등에 산재해 있는 관련 교육기관 및 프로그램의 연계·통합 방안과 OJT가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방안 등을 찾아볼 것이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접근가능성을 지원할 수 있는 근접 플랫폼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진입 장벽을 낮추고, 참여가 용이한 생태계를 구축함으로써 대학, 중소기업, 지역 주민 등의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참여를 가속화하는 방안도 모색할 것이다.

## 제3절 연구 추진 방법

사회적경제 및 인적자원개발 관련 자료 분석 등 국내외의 다양한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관련 자료를 분석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에서의 인적자원개발 정책 등 선행연구 검토를 토대로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 한다. 이에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사회적경제의 인적자원개발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며,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을 수행하는 기업, 대학, 중간지원기구, 현장 조직의 종사 인력이나 조직 현황, 지원예산 및 매출액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본다.

또한, 주요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의 지역별 분포와 현황, 업종별 분포 등을 분석하며, 사회적 공헌 내지 임팩트 극대화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이들 조직의 지역입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등 통계적 도구를 활용한다.

그리고 선행연구 및 자료분석을 기초로 도출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과 관계망에 터하여 유형별 사회적경제 조직, 기업 CSR, 지자체 등 기관 및 조직의 관계자에 대한 심층면담과 사회적경제 교육 관련 기관·기구 담당자 면담 및 간담회를 실시한다.

한편, 향후 사회적 경제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하여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한다. 이에선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 전문가, 관련 학자, 현장 전문가, 종사자 등 현장 활동가와 대학 및 연구기관 21명이 참여하며 두 차례 조사를 통해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의 성과 평가 및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방향과 전략 수립에 대한 의견을 도출한다.

끝으로, 국내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적자원개발 사례 발굴 및 면담, 인터뷰 등을 위한 국내 출장, 해외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적자원개발의 사례 발굴을 위한 인터뷰 등을 토대로 보고서에서 제안하는 정책 리뷰, 보고서 전반의 연구 성과 논의 등을 피드백하기 위한 세미나 등을 개최한다.



## 제2장

#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요건

제3절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 제2장 |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 제1절 사회적경제의 배경과 개념

#### 1. 사회적경제 대두의 배경

우리 사회는 이제 코로나19 사태의 상흔을 회복하기도 전에 글로벌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공급망 재편과 디지털화 및 탄소중립화라는 외적 도전, 그리고 저출산·고령화라는 내적 도전을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기간을 통해 계층적 양극화와 실업문제 등 사회적 갈등 양상은 더욱 커졌고, 이를 제어할 사회적 기제는 매우 허약한 상황에서 소멸의 위기에 직면한 지방 도시들은 새로운 발전 동력을 쉬이 찾아내지 못하고 있다.

사실, 이 같은 도전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만의 대응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며, 사회적·문화적 시각을 포괄하는 보다 근원적이고 총체적인 접근이 요구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각 부문의 경제적 참여의 폭을 확장함으로써 경제적 기반과 토대를 넓혀야 하는 필요성도 동시에 제기된다. 각 사회 부문 및 구성원들의 경제적 사고방식과 태도를 전환하는 일은 우리 사회의 생산성 기반을 확충하고 혁신적 역동성을 장착하는 일과 깊게

연관되기 때문이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사회 부문의 폭과 기반을 넓히는 일은 경제 정책의 대상이 경제 부문의 주력 단위라 할 수 있는 ‘기업’ 분야에만 그치지 않고, 공공 및 민간의 ‘비기업’ 분야 및 ‘비경제’ 부문으로도 확장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이는 기업적·비기업적 성격이 혼재된 협동조합이나, 비정부·비영리 부문의 각종 사회단체 및 민간 재단·법인과 지역모임들, 그리고 공공 부문의 공익법인과 대학, 학교 등에도 경제적 접근과 기업 활동에서 접목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한다. 창의와 혁신은 비단 기업 및 경제 부문뿐만 아니라 사회·문화 등 비기업·비경제 부문까지 포함하는 전반적 영역에서 실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한편 비기업, 비경제 부문에는 경제적 논리와 접근에 의해 정의되는 ‘경제적 가치’만으로 해소되기 어려운 차원의 가치가 숨어 있다. 이른바 ‘사회적 가치’라는 사회적·문화적 필요와 요구가 그것이다. 사회적 가치는 인간의 존엄성과 합리성, 개성과 평등, 참여와 민주주의 등 다양한 가치를 포함하며, 한두 가지의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사회 구성원 간의 상호관계와 통합성,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창출하는 무형의 자산으로서 사회적 가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다. 영국, 일본 등 각 나라는 이 같은 사회적 가치를 ‘공익활동’의 범주로 법률화하기도 한다(〈표 2-1〉 참조). 경제학에서는 이들 사회적 가치를 이른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이라는 개념으로 정립하여, 경제·사회 전반의 역동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긴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우천식·김태종, 2007).

〈표 2-1〉 영국, 일본의 공익 활동 규정과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영국	1. 빈곤의 예방 또는 구제, 2. 교육의 증진, 3. 종교의 증진, 4. 보건과 생명구호의 증진, 5. 시민권·지역공동체 개발 증진, 6. 예술·문화·전통·과학 증진, 7. 아마추어 스포츠 정신, 8. 인권 갈등 해결·조정 증진, 종교·인종 화합 증진, 9. 환경보호나 개선 증진, 10. 청소년, 고령, 건강악화, 장애, 재정적 곤경 등 취약층 구호, 11. 동물복지 증진, 12. 군대, 경찰, 소방, 구호 서비스, 응급서비스 효율성 증대, 13. 기타 공익의 목적
일본	1. 보건 의료, 복지 증진, 2. 사회교육 추진, 3. 마을 만들기 추진, 4. 관광 진흥, 5. 농산어촌·중산간 지역 진흥, 6. 학술·문화·예술·스포츠 진흥, 7. 환경보전, 8. 재해구원활동, 9. 지역안전활동, 10. 인권옹호, 평화추진, 11. 국제협력활동, 12. 남녀공동참여사회 촉진, 13. 어린이 건전육성, 14. 정보화사회의 발전, 15. 과학기술 진흥, 16. 경제활동 활성화, 17. 직업능력 개발·고용기회창출, 18. 소비자 보호
UN (SDGs)	1. 빈곤 종식, 2. 기아해결, 3. 건강과 복지, 4. 양질의 교육, 5. 성평등, 6. 깨끗한 물과 위생, 7. 지속가능한 청정에너지, 8. 좋은 일자리와 경제성장, 9. 산업혁신과 사회기반 시설, 10. 불평등 해소, 11. 지속가능한 도시와 공동체, 1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13. 기후변화 대응, 14. 해양생태계 보존, 15. 육상생태계 보존, 16. 정의·평화와 포용적 제도, 17. 글로벌 파트너십

출처: 주성수(2020),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우리 정부에서는 비영리단체의 유형을 국제분류 체계에 따라 보건, 사회 복지, 교육, 사회보호, 환경보호 등 9가지 유형을 행정규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을 보면, 이들 목적 대부분은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에서 제시하는 과제와 중복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2〉 COPNI(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의 목적 분류)

국제분류	통계청(지역소득계정)	한국은행
01. 주택	1. 주택	-
02. 보건	2. 보건	1. 의료보건
03. 오락문화	3. 오락문화	2. 오락문화
04. 교육	4. 교육	3. 교육
05. 사회보호	5. 사회보호	4. 사회복지
06. 종교	6. 종교	5. 기타
07. 정당·노동 및 전문단체	7. 정당·노동 및 전문단체	
08. 환경보호	8. 환경보호	
09. 기타 서비스	9. 기타 서비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통계청고시 제2019-228호]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및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목적 분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는 최근 경제 부문의 주력인 기업 분야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가치’ 참여 흐름과 맞물리면서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기업 분야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혹은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al),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강조하는 ESG 경영 등 ‘사회적 가치’ 요소가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김봄이 외, 2019). 이에 따라 기업 및 경제 부문이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는 비기업·비경제 부문에서의 사회적 가치와도 점차 수렴(convergence)되고 있다. 이는 2015년 유엔정상 회의에서 채택된 SDGs(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17개 목표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빈곤퇴치, 기아종식, 건강과 웰빙, 양질의 교육, 성평등, 위생, 환경과 에너지, 불평등감소, 평화, 지속가능한 공동체 등 SDGs 목표로 제시된 사회적 가치 실현의 실행주체를 광범위하고 포괄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표 2-1〉 참조). 이는 그 이전의 MDG(Millennium Development Goals)<sup>2)</sup>에 비해, 정부와 시민단체는 물론 민간기업 등 다양

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도록 권장하여 비영리·비정부 기구는 물론 기업 및 경제조직의 참여와 기여를 중요한 요소로 보고 있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창의와 혁신을 위한 비기업·비경제 부문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이 한편으로 있다면,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도입 움직임을 포괄하는 새로운 흐름이 존재한다는 것도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는 이들 흐름을 포괄하고 총칭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비영리조직이 본래의 목적인 ‘공익적 가치’를 달성하기 위해 기업가적인 사업 방식을 도입하거나 수익적 기반을 확장하는 일, 공공서비스나 사회서비스 니즈가 높은 부문에서 수익성을 제고하는 일 등은 전자의 흐름에서 파악할 수 있다. 그리고 경제 섹터와 기업 부문에서 비경제적 가치를 추구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관계를 창출하고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통한 내재적 동기를 부여하는 등의 활동은 후자의 흐름에서 이해할 수 있다.

## 2. 사회적경제 개념 정의

사회적경제 영역이 확장되기 위해서는 기업·경제 부문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이해와 비기업·비경제 부문 관계자들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숙련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접근방식의 동시적 구현은 각 섹터와 조직의 내부 ‘혁신’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어렵다. 사회적경제로의 혁신을 통해 기업·경제 부문 조직의 사회적 기여가 확장될 수 있고, 비기업·비경제 부문 조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우리 사회가 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 극복과 경쟁력 있는

---

2) UN에서 2000년에 채택된 의제로서 절대빈곤 및 기아의 근절, 지속가능한 환경 확보,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의 고양 등 8대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사회서비스 부문의 성장과 일자리 창출, 그리고 지역사회의 혁신으로 다가갈 수 있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 사회적경제를 주목하고 있는 이유를 여기에서 찾을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통적인 비영리조직(NPO: Nonprofit Organization) 및 비정부기구(NGO: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등 비기업·비경제 부문<sup>3)</sup>과 전통적 영리기업의 양 특성을 동시에 지닌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영리기업과는 달리, 사회적기업<sup>4)</sup>은 사회적 사명을 동시에 추구한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의 운영은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한다. 사회적 영향력(impact)과 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사회적기업은 모든 자원을 투입하게 된다(Yang et al., 2014).

한편 전적으로 이해관계자(stakeholders)의 의사를 반영하고, 사회적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며, 수익 분배를 금지하는 등 많은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일반적 비영리조직의 연장선에서 이해가 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적 프로그램을 위한 자금 조달 규모를 키우고, 사회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조직 성장을 적극적인 수익사업에 의존하는 정도에 따라 사회적기업은 전통적·일반적 비영리조직과 차별성을 보인다. Wijaya & Pangeran(2020)은 사회적기업의 하이브리드 스펙트럼 모형에서 전통적 비영리와 전통적 영리기업의 중간에 사회적기업을 위치시키고 있다(〈표 2-3〉 참조). 다만 이들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기업보다는 비영리에 가깝다고 보고 있다. 사회적기업의 미션 동기나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수익분배의 특성 등 측면에서 영리기

---

3) 이 부문을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 섹터 등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불리고 있음 (주성수, 2020).

4)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은 현행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범주로서 좁게 규정할 수도 있지만, 사회적경제 조직 일반을 뜻하는 넓은 범주로서 사용될 수 있음. 본 보고서는 맥락에 따라 두 가지 범주를 혼용하여 사용함.



본적 사회질서의 개편보다는 특정 이슈나 사안에 대해 기능적으로 보완하는 ‘개량주의적 전통’에 서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비관’적 관점으로 신자유주의 동원전략의 일환이라는 시각을 보이고 있다. 이 관점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민영화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하위 파트너 내지 신자유주의의 대리인으로 ‘전략’하게 되는 한계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 같은 분류 방식은 다분히 첫 번째 대안적 관점과 두 번째 보완적 관점이 세 번째 관점보다 우위에 있다는 전제를 가진 시각이라는 점에서 채택하기는 어렵다. 예컨대, 정부의 일자리위원회나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등에서 사용하는 사회적경제 개념이 위의 세 가지 관점으로 환원되지는 않는다. 일자리위원회는 사회적경제를 “사회 구성원 간 협력과 자조를 바탕으로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민간의 모든 경제활동”이라고 설명한다(일자리위원회, 2017). 또한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는 사회적경제를 “경제의 양극화, 개인의 고립을 가져오는 자본주의의 부정적 측면을 극복하고 합리적인 호혜주의를 바탕으로 하면서도 자원배분에 있어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장점인 효과적 자원 배분을 동시에 추구하는” “호혜와 연대의 경제활동”으로 설명(이정현·박현수, 2022)한다. 이들 정부의 개념 규정을 굳이 장원봉 외(2021)의 세 가지 관점과 연결 지으려면, 정부가 규정하는 개념은 혼합적 관점이라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장원봉 외(2021)<sup>6)</sup>의 논의에서도 강조하고 있듯이, 이념적 측면보다는 실천적 측면이 중요함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사회적 소유, 대안적 자원 배분, 호혜적인 참여경제 등의 다분히 이념적·가치경도적

6) 장원봉 외(2021)에서는 실천적 관점에서 사회적경제를 “사회적 목적, 사회적 소유, 그리고 사회적 자본을 구성요소로 하여 자본과 권력을 핵심자원으로 하는 시장 및 국가에 대한 대안적 자원 배분을 목적으로 삼고, 시민사회 혹은 지역사회 이해당사자들이 그들의 다양한 생활세계의 필요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실천하는 자발적이고 호혜적인 참여경제 방식”으로 정의함.



해석이 가능한 요소는 최소화하고, 실천적(practical)·가치중립적인 용어(value-neutral term)를 적극화할 필요가 있다.

EC & OECD(2016) 등 문헌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주요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 차원, 즉 ① 기업 차원(공공계약을 통한 것을 포함하여 시장에서 상품·서비스 판매로 인해 발생하는 근로 소득 포함), ② 사회적 차원(명백한 사회적 목표의 추구 및 사회적 의미를 지닌 제품·서비스 전달), ③ 거버넌스 차원(책임, 참여 및 투명성) 등을 강조하고 있다. OECD(2022)에서는 이에 대한 지침을 한층 명확히 제시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① 시장 지향성을 갖추어 거래 발생률이 최소 25%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회적 목표에 대한 우선적인 지향점이 국가 법률, 사회적기업의 법령 또는 기타 관련 문서에 의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어야 한다. ③ 사회적기업의 의사결정 지배구조는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자의 이익이 적절히 대표될 수 있도록 보장되어야 한다. 위 세 가지가 최소한의 요건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본 보고서에서는 “투명하고 책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을 사회적경제의 개념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 3.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주

사회의 모든 개인과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든 사회적 가치와 연결되며, 동시에 경제활동을 영위하거나 경제생활에 직간접으로 참여하고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나 경제조직도 사회적 가치 측면을 조직 내부로 내면화하고 있으며,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개인이나 조직은 그 가치의 효과적·효율적 실현을 위해 경제활동을 통한 시장 영역으로의 진

입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 순수하게 기부 또는 자선활동에 의존하는 비영리단체가 경제적 가치·방식을 수용하는 일, 그리고 순수하게 상업적인 기업 조직이 자선적 혹은 기부적 활동에 참여하는 일까지를 포함하는 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는 것을 뜻한다.

실제로 상업적(commercial) 이익과는 관련이 없어 보이는 각종 비영리단체나 조직도, 최근 비즈니스적 활동방식의 도입을 통해 사회적 가치와 문제해결을 효율적·효과적으로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sup>7)</sup> 또한 상업적 이익 확보와 경제활동에 특화된 기업 조직도 영리적 비즈니스만이 아닌 사회적 가치 추구를 통해 사회적 책임을 나누려 하고 있다(Porter & Kramer, 2011). 사회적경제의 범주가 확장되고 있는 것이다. Hansmann(2012)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특수한 형태 혹은 “지엽적·부수적이거나 문화적으로 제한된 형태의 조직”이 아니라, 오히려 “현대화된 형태의 사업”으로서 개념화하고 있다. 그는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이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선진 시장 경제에서 경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또 기본적인 농산물 공급처럼 중요한 산업을 지배하고 있으며, 사업 용품이나 부동산, 주택, 은행, 보험 등 용역 시장의 생산, 도매, 유통과 같은 영역에서 큰 시장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사실, 사회적 가치의 추구 및 경제적·비즈니스적 접근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영역은 그 폭이 매우 제한적일 수 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적정한 수준의 사회적 목표를 경제적 접근을 통해 성취하는 일, 그리고 경제적 이윤을 추구하면서 동시에 사회적 책임 혹은 공유가치창출(CSV)을 추구하는 일까지를 모두 사

7) ‘세이브더칠드런’과 같은 비영리단체는 전 세계 모금 총규모가 2014년 현재 약 2.3조 원에 이를 정도이며, 모금활동을 위한 체계적인 조직을 운영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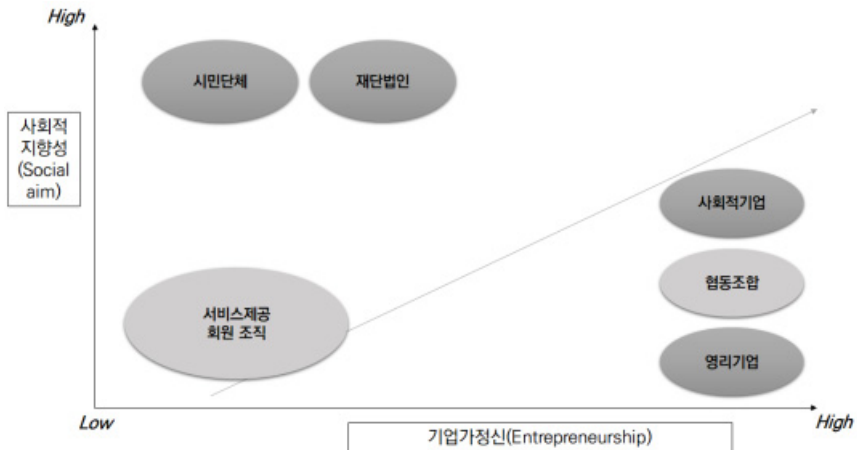
회적경제의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포함한다면, 사회적경제의 범주는 보다 넓게 확장될 수 있다. 비단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통적 핵심이라 할 사회적기업(협회의 개념에서) 및 협동조합만을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놓고 정책을 펼치기보다는, 사회적 가치 추구의 특성이 강한 재단, 시민단체 및 공제회 등 조직과 함께 경제적·비즈니스적 추구 특성이 강한 일반 영리기업까지도 사회적경제의 범주로 포섭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OECD(2007)는 사회적경제의 분화·발전 과정을 설명하면서, 아래 [그림 2-1]과 같이 사회적 지향성과 기업가정신의 두 축으로 형성된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적경제는 전통적으로 ① 사회적 지원활동(advocacy role)에 전력하는 시민단체, ② 소득 재분배(re-distribution)에 특화된 사회복지기관 등의 재단(foundations)과 협회(association), ③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등 생산활동에 참여하는 협동조합과 일반기업, 그리고 1980년대에 본격 도입된 ‘사회적 기업’ 등으로 지형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다.<sup>8)</sup> OECD(2007)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의 전통적 범주에 속한 이들 조직이 모두 경제적 접근이나 방식을 취했던 것은 아니다. 예컨대, 높은 사회적 지향성을 보이는 사회적 지원활동(시민단체)이나 복지·소득재분배 사업(재단)에 기업가정신 혹은 비즈니스 마인드가 요구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적경제 차원에서 ‘재화·용역의 생산과 제공’에 접근한 협동조합, 일부 영리기업은 생산활동의 역동적 특성(dynamism)으로 인해 높은 기업가정신과 비즈니스 마인드가 형성되었다. 특히 기업 부문에서 분화되어, 공익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기업 형태인 사회

8) ① 시민옹호활동, ② 소득 재분배 사업, ③ 재화·서비스의 생산 및 제공 활동은 사회적경제를 구성하는 조직의 주요한 기능과 역할이지만, 특정 조직이 반드시 한 가지 기능이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아님(같은 글 31쪽).

적기업은 높은 비즈니스 마인드에 기반하면서도, 동시에 높은 사회적 지향성(social aim)을 갖추게 되었다.

[그림 2-1] 사회적경제의 조직 유형과 지형



출처: OECD(2007).

한편 사회적 이슈가 다양하게 분화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요구되는 기능도 다원화하면서, 불가피하게 사회적경제 조직의 전통적인 지형은 변화를 맞이하였다. 무엇보다 재화의 직접적인 생산과 서비스 제공 활동으로부터 파생되는 ‘역동성’이 이들 조직에 점차 스며들게 되었다(Schmitter & Trechsel, 2004). 이에 따라 협회나 재단 중에는 구호활동 등 복지적 지원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재화와 서비스의 직접적인 생산·제공에 뛰어드는 조직이 생겨났고, 경제적 약자의 자조적 성격이 강했던 협동조합도 점차 조직 외부의 사회적 이슈와 문제 해결 사안에 참여하게 되었다. 또한 주요 동기가 주주들의 직접적 이익에 종속되어 있던 영리기업조차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

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제 재화의 생산과 서비스 제공이라는 생산활동이 각 조직에 수용되면서, 재단(복지기관)과 협동조합 간 그리고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 간의 간극은 점차 좁아지고 사회적경제 생태계 역시 생동성 있게 확장된다.

이 같은 일반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형과 성장 과정은 사회적경제의 범주화에도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사회적경제의 범주에는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비영리·비정부단체<sup>9)</sup>로부터 민간기업<sup>10)</sup> 등 영리조직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의 조직을 포괄하는 설정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둘째, 이 같은 사회적경제 범주의 확장은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체계로 규정된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국한된 조직 형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도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이 같은 범주 설정이 이루어질 때 사회혁신과 활력을 도모하는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큰 그림이 완성될 수 있다. 예컨대, 비영리기관, 영리기업 등 사회적경제와의 관련성이 적은 조직에 사회적경제의 메커니즘이 적용·확장되면, 사회적경제 전반의 인적·물적 토대가 확장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역동성과 스케일링(규모화)으로 이어질 수 있다.

9) 시민단체 등 비영리기관은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조직적 특성이나 존립 목적, 활동 영역이나 범위에서 유사성이 높으며, 나아가 이로 인해 인재의 육성과 활용에서도 적지 않은 역할이 주어지고 있음.

10) 사회적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SK이노베이션이 대표적으로, 사회적경제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회적 비즈니스 모델의 다양화 등 여러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음.

## 제2절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본 요건

### 1. 수익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경제 조직은 특정한 사회적 목적(objectives)을 추구하며, 이들 목적 실현에 투입·환원될 수 있는 자원의 확보가 중요하다. 규모에 맞는 적절한 자원의 확보는 목적 사업의 효과적·효율적 실현에 기초가 된다. 그리고 이 같은 자원의 핵심적 요소의 하나로서 재정의 확보가 요구된다. 일정한 재정의 확보는 사실 조직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는 데 필수적 요소이기도 하다. 재원 확보를 위한 수익(profits) 활동이 비단 영리 기업 형태에만 고유하게 적용되지는 않는 이유이다. 재정확보를 위한 수익사업은 또한 영리·비영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뿐만 아니라 비영리조직과 같은 전통적인 민간 단체와 협회, 공제회 등에도 보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활동이기도 하다.<sup>11)</sup>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사업이 갖는 의미는 조직의 지속가능성 측면과 사회적 가치의 확장 차원에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경제의 수익사업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속과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조직 역시 일반적인 회사와 마찬가지로 임대료, 직원 급여, 사업 경비 등 운영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비록 일반적인 기업과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 내용은 긍정적인 사회적 영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지만, 그렇다고 조직의 모든 활동이 사회적 서비스 제공이나 혁신 등 사회적 가치 추구활동에만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특히 정부나 대기업, 시민들로부터의 재원이나 기부금 조달 등이 이루어지는 비영리단체와는

---

11) YMCA와 같은 민간단체의 부동산 임대업이나 한국교직원공제회의 호텔사업 등은 대표적임.

달리, 사회적경제 조직은 대개 조직 자체 내에서 자급자족되어야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이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스스로 이익을 창출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의 수익사업은 해당 조직이 사회적 사명으로 내세우는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목적 달성에 더 많은 투자와 투입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더 큰 효과를 창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대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환경적·재정적·문화적 문제에 대한 나름의 장기적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에 기반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게 된다. 비즈니스 모델에는 수익성이 발생하는 장치를 포함한다. 모델에 따른 수익성 증대는 곧 사회적 솔루션이 적용되는 범위의 확장으로 이어지거나 이들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금의 증대, 혹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기부금의 확대로 연결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출자한 투자금을 보상한(pay back) 나머지 이익은 사업의 추가 확장을 위해 재투자된다.

이 같은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가치의 확장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전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과 유사하면서도 고유의 독자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은 수익사업과 동시에 사회적가치 추구라는 양면적 성격을 내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채택하는 비즈니스 모델은 <표 2-4>에서 제시되는 범위를 포함한다.

〈표 2-4〉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모델 유형

모델 유형	내 용	사례 및 특징
1. 고용 <sup>12)</sup> (Employment)	고객에게 고용 기회와 직업 훈련을 제공하며, 공개 시장에서 제품·서비스 판매	카페, 인쇄소 등 사업체에서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장애인·청소년 단체
2. 무료 서비스 <sup>13)</sup> Free-for-Service	고객 또는 제3의 지불인(후원자)에게 직접 소셜 서비스 판매	회원 기관이나 박물관, 진료소 등의 유료 서비스 사업
3. 서비스 보조금 <sup>14)</sup> Service Subsidization	특정 사회적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외부 시장에 제품이나 서비스를 판매	컨설팅, 임대업, 상담사업 등 비즈니스 활동과 비영리 지원 사업을 동시 진행
4. 저소득 고객 지원 <sup>15)</sup> Low-income Client	고객에게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저소득층에게는 별도의 지원 체계를 갖춘	의료, 안경 등 각종 생활편의 프로그램
5. 시장 중개자 <sup>16)</sup> Market Intermediary	서비스·제품 공급업체가 확장된 시장에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유통업체나 중개자 역할)	공정 무역, 농업 및 수공예 조직과 같은 공급 협동조합
6. 시장 연계 <sup>17)</sup> Market Linkage	새로운 시장과 고객 간의 거래·교역 연결을 지원, ESG 투자 유도 등	수입 및 수출, 시장 조사사업이나 중개 서비스 등 연결 사업
7. 협력적 활동 <sup>18)</sup> Cooperative	집단적인 서비스를 통해 회원에게 혜택을 제공	공동구매, 단체교섭(노조), 농협, 신용협동조합 등
8. 기업가 지원 <sup>19)</sup> Entrepreneur Support	비즈니스 기회가 필요한 이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판매	소액 금융 기관, 컨설팅, 기술 지원

출처: Canada's MaRS Discovery District.

- 12) 직업훈련의 적절성 및 사업의 상업적 성공가능성 등
- 13) 혜택에 대한 적절한 수수료 구조 수립 등
- 14) 유형자산(건물 등), 무형자산(전문지식 등)의 활용 등
- 15) 창의적인 유통 시스템, 효율적인 생산·마케팅·운영 비용 등
- 16)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의 서비스·제품을 직접 제공 등
- 17) 기업의 ESG 경영 컨설팅, 투자 정보 등
- 18) 이해관계자이자 투자자인 회원의 공통 관심사·요구사항 반영 등
- 19) 기업가를 위한 적절한 교육 등



## 2. 사회적 가치 확장과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사회적경제 조직이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여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궁극적 목표는 사회적 가치의 확산과 이를 통한 사회적 임팩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과 개성, 형평성과 참여 민주주의 정립 등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일반시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인 사회적 임팩트를 확보하는 데 사회적경제 조직의 존립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적 가치를 확장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scaling)가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는 일반적으로 새로운 고객(customers)이나 클라이언트 유치, 신규 제품·서비스 런칭(launching), 새로운 시장으로의 다각화, 새로운 지역 진출, 신규 투자 유치 등 다양한 방면의 노력을 통해 시도된다. 영국의 경우 대규모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부분적으로나마 프랜차이즈나 인수합병까지도 부분적이거나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EU & OECD, 2016). 이는 이익 극대화를 도모하는 일반적인 기업과 크게 다르지 않은 양상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비즈니스 모델을 채택하지 않거나, 채택하더라도 의존도가 높지 않은 사회적경제 조직(시민단체, 재단 등)과 비교할 때 그 차이는 두드러진다.

또한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와 타 조직과의 관계 양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일반적인 영리기업이 생산과 제공이 용이한 제품군이나 서비스군에 집중하기 위해 제품·서비스의 ‘표준화된 형태’에 집중되는 양상이라면, 사회적경제 조직의 제품·서비스 유형은 이와 달리 ‘개별화된 형태’에 집중하게 된다. 이는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의 산업 분야가 공중의 이익을 우선시함에 따라 노동 집약적이거나 개인적·관계적 유형의 제품·서비스 형태가 많기 때문

이다. 그리고 일반기업이 동종 업계에서의 타 기업과 무한 경쟁의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데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은 동종 업계에서의 타 조직과 고도의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scaling) 양상이 일반기업과는 사뭇 다른 형태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규모화 양상에서 가장 큰 특징은 일반 영리기업이 시도하는 조직 자체의 확장보다는 자기 사업의 복제, 타 조직과의 협력, 그리고 지식 및 노하우의 공유 등에서 두드러진다. EC & OECD(2016)는 이를 다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정리하고 있다.

#### 가. 조직 자체의 확장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일단 사회적 통용성이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보유한 사회적기업은 조직의 성장(organizational growth), 인수합병(M&A), 시장 다각화 등을 통해 더 많은 수의 수혜자에게 다가가거나, 서비스·제품의 품질 개선·조정을 통해 ‘동일한 혹은 유사 사업의 확장’을 꾀하게 된다(Weber, Kröger & Lambrich, 2015). 조직의 성장은 일반적인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는 동시에 운영 및 프로세스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동반하게 된다. 인수합병이나 다각화를 통해 사업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방식도 소셜 임팩트를 지속·확장하는 방안이 된다.

#### 나. 복제 증식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사회적 통용성이 입증된 비즈니스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는, 조직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새로운 브랜치(branches)를 설립하거나 소셜 프

랜차이징(social franchising)을 구축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양한 브랜치를 거느린 조직 본사는 브랜치 중의 성공 모델을 본사가 관할하는 각지의 브랜치에 유사한 모델을 이식하는 방식도 이 유형에 속한다. 사회적경제 조직 본사의 운영모델과 질 관리 등 각종 노하우를 이식받은 브랜치나 프랜차이즈 조직은 새로운 지역에서 새로운 사회적 임팩트를 일으킬 수 있게 된다.

#### 다. 파트너십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조직 자체의 확장이나 모델이나 사업의 복제 증식을 통한 사회적 영향력 제고 방안과 다르게, 공공이나 민간 혹은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예컨대, 공공 혹은 민간 파트너의 인프라를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공동 입찰 등 협력을 들 수 있으며, 사회적 평판의 공유도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가능한 방식이다.

#### 라. 지식공유를 통한 사회적 영향력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지식 공유 및 이전은 사회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된다. 특정 사회적경제 조직의 비즈니스 관리와 운영, 수익 창출 등 지식과 노하우는 다른 사회적경제 조직의 중요한 형식지(explicit knowledge) 혹은 암묵지(tacit knowledge) 형태의 자산이 될 수 있고, 이는 새로운 사회적 영향력 확산의 중요한 토대가 될 수 있다.

### 3. 소유관계와 지배구조(governance)

기업소유권 이론의 새 지평을 열었다고 평가되는 헨리 한스만(2017)은 사회적경제 조직 역시 기업의 ‘소유권’ 맥락에서 파악하였다. 예컨대, 생산자협동조합(producer cooperative)이 생산요소를 해당 조합(기업)에 제공하는 이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라면, 소비자협동조합(consumer cooperative)은 조합(기업)의 제품과 용역을 소비하는 이들이 기업을 소유하는 형태라는 것이다.<sup>20)</sup> 그리고 이러한 소유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으로 계약비용(costs of market contracting)과 기업 소유비용(costs of ownership)의 총합인 총거래 비용(total transaction costs)의 최소화<sup>21)</sup>를 제시한다. 헨리 한스만(2017)은 시장 계약비용으로 ① 독과점 등 시장 지배력(market power), ② 고착효과<sup>22)</sup>(lock-in effect), ③ 비대칭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등의 비용을, 그리고 기업 소유비용으로는 ① 경영진의 기회주의 등을 제어하기 위한 모니터링(monitoring) 비용, ② 집단 의사결정 비용(cost of collective decision-making), ③ 위험 부담 비용(costs of risk-bearing) 등을 들고 있다.

예컨대, 농산물 유통에서의 독과점을 행사하는 기업 횡포로부터 벗어나는

20) 헨리 한스만(2017)은 기업에 자본을 공급하는 사람들이 소유한 일반적인 기업(investor-owned business corporations) 역시 대출자 협동조합 혹은 자본 협동조합(a lenders' cooperative, or capital cooperative)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함. 그리고 일반적으로 기업을 소유하는 그룹은 자본을 대여하는 투자자, 생산요소를 제공하는 공급자, 유통과 소비에 참가하는 소비자뿐만 아니라 생산과정에 참여하는 노동자, 프랜차이즈에 참여하는 프랜차이즈 점주(franchisees) 등을 포함한 '거래 관계자(patron)' 중의 특정 그룹에 의해 '소유'된다고 함.

21)  $\min \left( CO_i + \sum_{i=1}^n CC_i \right)$  \* 여기서, CO<sub>i</sub>는 기업 소유비용, CC<sub>i</sub>는 시장 계약비용임.

22) 특정 재화를 한 번 구입하고 나면, 호불호와 무관하게 해당 재화를 계속적으로 이용하도록 고객을 가두는 효과임.

유리한 방식의 하나로 농산물 공급업자인 농민들이 아예 농업협동조합과 같은 기업을 만들어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다. 농산물 유통과정을 담당하는 기업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시장에서의 독과점 발생 원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기업에 채용된 근로자들이 기업으로부터의 고착효과(lock-in effect)를 회피하기 위해서도 근로자 소유 기업(노동자협동조합과 같은)이 나타나기도 한다는 것이다. 농민에 의해 소유된 기업(농업협동조합)은 소유주인 농민들을 대상으로 독과점 횡포를 부리기 어렵게 되며, 근로자에 의해 소유된 노동자 기업에서 근로자들은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고정효과를 부리고자 하는 기업의 횡포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다만 이 같은 이점을 누리기 위해 농민이나 노동자와 같은 특정 그룹이 기업을 소유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지려면, 모니터링 비용이나 집단 의사결정 비용 혹은 위험 부담비용 등 기업소유 비용을 감안해야 한다. 기업 소유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상의 이점이 시장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비용상의 이점보다 더 커야 한다는 것이다. 만약 기업을 소유하려는 그룹<sup>23)</sup>의 입장에서, 경영진 모니터링 비용이나 관계자들의 지배구조(집단의사결정) 비용 등 기업 소유비용이 독과점 등 시장계약 비용에 비해 지나치게 높아 기업 소유의 이점을 상쇄한다면, 이 시장에서 해당 거래관계자에 의한 기업 소유 현상은 발생하지 않게 된다.

헨리 한스만(2017)의 소유권 이론이 사회적경제 조직에 던지는 중요한 시사점의 하나는 소유관계에 따른 지배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다. 헨리 한스만(2017)은 이 같은 소유관계를 규정짓는 여러 요인 중에서도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즉 지배구조 비용)이 매우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

23) 헨리 한스만(2017)은 기업과 제품과 용역 생산, 공급, 소비 등 형태로 거래에 관계하는 모든 이들을 '거래 관계자(patron)'라는 개념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고 있음.

고 있다. 지배구조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아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조건이 중요하다. 첫째, 소유하려는 그룹에서의 구성원 간 이해관계가 매우 동질적<sup>24)</sup>이어서 기업이 어떤 의사결정을 내리든 유사한 영향을 받아야 한다. 둘째, 어떤 의사결정이 특정 구성원에게는 이익이 되고 다른 구성원에게는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해당 결정이 구성원 모두에게 광범위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객관적 기준이 존재해야 한다(같은 글 142쪽).

이를 적용하면, '1인 1표'라는 협동조합의 오래된 원칙과 '1주 1표'라는 자본(투자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주식회사를 비교할 수 있다. '1인 1표'가 구성원에게 쉬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 업종이나 영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발생이 보다 용이할 뿐만 아니라, 같은 업종이나 영역이라 하더라도 '1인 1표'가 작동할 수 있는 조직 환경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는가에 따라 집단적 의사결정 비용은 낮아지고, 사회적경제 조직도 활성화될 수 있게 된다. 조직 구성원들이 조직의 정책이나 의사결정 과정에 활발하게 참여하고, 구성원이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행사하며 민주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더라도, 이해관계에서의 갈등이 크지 않은 영역 그리고 조직에서 사회적경제 원리가 더 용이하게 적용될 수 있게 된다.

한편 헨리 한스만(2017)은 '기업운영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사람들(회원, 직원, 경영자, 이사, 신탁관리인 등)이 기업의 이윤을 가져가지 못하도록' 하는 배당금지의 원리가 적용되는 비영리기업을 소유자가 없는 기업으로 분류

24) 한스만은 기업 소유권 확립에 있어서 거래 관계자(patrons)의 관심의 동질성(homogeneity of interest) 문제가 중요함을 지적하고 있음. 예컨대, 우유를 공급하는 낙농업자들과 같이, 구성원들 사이의 제품 가격에 대한 의견 불일치를 불러올 가능성이 적은 경우(즉 제품 동질성이 높은 경우), 동일한 동종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수의 개인 또는 기업이 있는 경우 낙농업자들은 기업을 협동조합 형태로 소유하게 된다고 함.

하고 있다. 이는 ‘누가 그 기업을 소유하더라도 심각한 비효율을 피할 수 없어서’ 비소유의 형태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경영자가 고객을 위해 운영하는 기업’인 비영리기업은 본질적으로 ‘경영에서 수탁의 의무가 잘 지켜지도록 하기 위해 완전한 소유권에 따른 장점을 포기’한 것이며, 수탁의 의무는 대체로 과도하게 낮은 제품·서비스의 질과 관련이 된다.<sup>25)</sup>

이렇게 보면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 투자자 소유기업 방식만이 아닌, 다양한 방식의 지배구조가 법률·의료·금융서비스 등 동질의 전문가 그룹뿐만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발견되는 상황을 일견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오랜 기간 사회적경제 조직이 뿌리를 내린 이면에는 이들 사회적경제 조직을 위한 별도의 특별한 정책적 배려 이전에, 시장 계약비용과 기업 소유비용의 함수관계가 자유롭게 작동할 수 있는 시장환경이 조성되어 있었다는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와 같은 조직 형태를 다양화·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고착효과 혹은 비대칭정보 등 시장실패나 독과점 혹은 시장 지배력이 발생하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시장 실패 등으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안게 되는 거래관계자들이 해당 영역에서 관련 기업을 설립·소유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추는 일 등이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 기업 소유권 확립을 위해 발생하는 경영진 모니터링 비용 제거, 집단 의사결정 비용 및 위험 부담비용의 감소 등도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려는 그룹의 시장환경에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다.

---

25) 이는 투자자 소유 기업이 독과점 등으로 과도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할 우려가 있는 분야에 협동조합과 같은 소유권이 형성되는 것과 비교됨.

### 제3절 사회적경제와 인적자원개발 정책

#### 1.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정책에 대한 OECD 권고안

2022년 6월, OECD는 지역고용 및 경제개발위원회<sup>26)</sup>(LEED)의 제안에 따라 사회적경제, 연대경제, 그리고 사회혁신에 대한 권고안(OECD 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을 발표하였다(OECD, 2022). 사회적경제에 관한 최초의 OECD 권고안으로서, 이 문건은 OECD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각료이사회(Ministerial Council)가 각 국가와 지역에서 합의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에 관한 권고안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을 포함하고 있다(〈표 2-5〉 참조).

---

26) the Local Employment and Economic Development Committee.



**〈표 2-5〉 사회적경제에 대한 OECD 각료이사회의 기본 인식(2022. 6.)**

1. 사회적경제는 포용적(inclusive) 사회와 건실한 지역사회의 건설, 경제성장에 대한 기여, 지속가능한 산업 여건 조성, 쌍둥이 전환(녹색 및 디지털)의 달성, 경제 순환성 강화의 초석 마련에 일익을 담당함.
2. 사회적경제는 의미 있는 일자리 창출, 청년층 참여 유도, 젠더 평등 증진, 비공식 부문 고용 문제 대응, 소외집단의 노동통합 지원, 노동의 미래 뒷받침 등에 강력한 수단임.
3. 사회적경제는 활동과 사업모델의 성격상 충격에 대한 내성이 높아 경제와 사회의 복원력을 증진하며, 중요한 경제사회 부문과 보건·사회서비스 등 필수 부문에 적극적으로 개입함.
4.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방식으로 지역개발의 효과성을 현저히 개선하고, 지역의 사회적 자본 및 경제적 자본 강화, 공공복지 서비스 제공 등에 보탬이 됨.
5. 사회적경제는 사회의 필요에 부응하는 경제적 관행을 중심으로 지역에 뿌리를 둔 경제활동을 형성하며 공공 부문, 학계, 주민, 시민사회, 재계 등 관련 이해관계자와 긴밀히 협력하는 특징을 지님.
6. 사회적경제는 사회혁신을 추동하며, 사회혁신은 공정무역, 윤리적 금융, 순환경제, 플랫폼 협동조합과 같은 경제사회의 새로운 모델을 뒷받침함.

이 같은 인식을 토대로 OECD 각료이사회는 사회적경제를 위한 문화 조성, 제도 정비, 금융지원 활성화, 공공 및 민간 시장 진출 촉진, 기술 및 사업 개발 지원 강화, 영향 측정 및 모니터링 장려, 데이터 생산 지원, 사회혁신 촉진 등 9개항의 권고 사항을 결의하였다. 이들 권고안 중 첫 번째 항목인 ‘사회적경제를 위한 문화 조성’은 교육·인재육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를 위해 각료이사회가 각국이 이행할 조치 사항으로 제시한 내용은 〈표 2-6〉과 같다.

〈표 2-6〉 사회적경제의 문화 조성을 위한 세부 조치사항

<p>a. 경제·사회의 각종 과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u>시민사회와 모든 (공공 및 민간 부문) 이해관계자가 담당하는 역할을 인식하도록 함.</u></p> <p>b. <u>시민사회 모임의 활성화</u>, 이들 <u>시민사회 모임의 사회적경제 조직 전환을 위한 여건을</u> 각국 상황에 맞게 조성함.</p> <p>c. 다양한 사회적경제 접근방식을 통해 사회적 목표 달성의 기회가 있음을 <u>일반 대중이 인지하도록 함.</u></p> <p>d. <u>네트워크 구축, 부문 간 파트너십 개발, 지식 공유, 실천공동체를 촉진함.</u></p> <p>e. <u>초·중등교육과 직업교육, 성인교육에 이르는 전 단계에 걸친 공식·비공식 학습과정에 사회적경제 관련 활동을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함.</u></p>
--

\* 밑줄: 연구진 작성.

그리고 권고안의 마지막인 9번째 항목인 ‘사회적 혁신의 촉진’에서는 ‘c. 사회적경제의 실험과 확장(upscaling)을 위한 각종 육성기관(incubator), 역량센터, 훈련을 통한 사회혁신 증진, 그리고 공공당국 및 고등교육기관과 협업 제고’ 등을 세부 실천 사항으로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인재 육성에 대해 OECD 권고안은 사회적 공감대 형성과 기초교육을 강조한, 다분히 문화적 접근이라 할 수 있다.

## 2. 기업가정신과 사회적기업가 역량 개발

OECD가 강조한 문화적·기초교육적 차원에 더해, 사회적경제 교육·인재 육성에 있어서 주요 고려사항으로 사회적경제 및 관련 조직의 전문역량 강화 차원이 있다. 이는 실제 사회적경제 조직을 일으키고 운영하며, 조직이 지향하는 사회적 목표를 실현하는 역량을 어떻게 형성할 것인지에 대한 사항이다. 일반 경제와 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 많은 기업가와 기업가정신으로 무

장한 종사자가 필요하듯이, 사회적경제와 관련 조직(사회적기업)이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회적기업가(social entrepreneur)와 사회적 기업가 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으로 무장한 역량 있는 관계자(종사자, 창업자, 구직자, 이해관계자를 포함)가 동시에 요구된다.

사실, 앞 절에서 기술한 수익사업·비즈니스 모델 접근과 사회적 가치, 사회적 임팩트 접근 간의 긴장관계는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 혹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이라는 차원에서 통합적 조망이 가능하다. 기업가정신이라는 전통적인 용어에 ‘사회적’ 가치가 더해진 사회적 기업가정신 개념 안에는 두 접근이 강조하는 콘텐츠가 이미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기업가(entrepreneur) 혹은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는 ‘기업을 운영하는 이들의 혁신적 정신과 활동’이라는 19세기 프랑스 경제학자 장 바티스트 세(Jean Baptist Say)<sup>27)</sup>의 개념에서 출발하여 이제 ‘사회 각 부문에서의 혁신적 정신과 실천’이라는 확장된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20세기에 들어 조지프 슈페터(Joseph Schumpeter)는 기업가를 자본주의 체계에서 ‘창조적 파괴’(creative-destructive) ‘를 추진하는 혁신자로 정의하였고, 피터 드러커(1986)는 한걸음 더 나아가 ‘변화를 탐색하여 새로운 기회로 실천에 옮기려는 정신과 행동’이라는 보편적인 개념으로 기업가정신의 함의를 확장하고 있다. 기업가 혹은 기업가정신이라는 용어가 애초의 기업체 운영 및 종사자에 국한되는 개념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문화 전반의 부문에서 혁신과 창의성을 실천하는 정신으로 확장된 것이다.

27) 더 거슬러 올라가면, 리처드 칸틸롱(Richard Cantillon)이 1775년 발간한 글에서 이 개념이 처음 사용되었으며, 경쟁, 자유 무역의 활성화 및 경제적 규제 철폐를 주창한 Jean Baptist Say는 기업가를 ‘경제적 자원을 낮은 생산성 영역에서 높은 생산성 영역으로 이동시켜 더 큰 수확을 창출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함(최무현·고은주, 2019).

Dees(1998)는 이 같은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회적 기업가(social entrepreneur)’ 혹은 ‘사회적 기업가정신(social entrepreneurship)’을 정의하고 있다. 사회적 기업가란 ① 사회적 가치(사적 가치가 아닌)를 창출하고 지속하기 위한 미션을 채택하고, ② 이러한 미션에 봉사하는 새로운 기회를 인식하고 쉽 없이 추구하며, ③ 지속적인 혁신, 적용, 그리고 학습의 과정에 몰입하여, ④ 당장의 자원에 의해 제한됨이 없이 과단성 있게 행동함으로써 ⑤ 책임성(accountability)과 산출(outcomes)에 대한 뛰어난 감각을 보여주는 이로서, 사회 분야에서 변화의 역군의 역할을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Dees(1998)는 또한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확산되는 이유가 비영리조직을 포함한 사회활동에서 점차 상업적 기회를 찾는 빈도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분석하면서, 이는 ① 자본주의 진영의 우위에 의한 친기업적인 시대정신의 확산, ② 사업 수혜 대상자들의 자존감 훼손이나 무력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수익자 부담 방식 도입 분위기, ③ 비영리단체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도모 경향, ④ 비영리단체 지원 기관(정부, 기업, 재단 등)의 상업적 경쟁 선호도 증가, ⑤ 자원 소스에 대한 상업적 접근 선호 등의 분위기로 말미암은 것임을 제시하고 있다. 이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진입한 단체 혹은 조직의 지도자, 관계자에게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는 차원이 필수적인 덕목이 되었다는 것이다.

배종태·차민석(2009)은 일반적인 기업가정신과는 다른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다루면서, Austin et al.(2006)을 인용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일반적인 기업가정신에 비해 사회적 기업가정신은 미션과 자원동원, 성과측정 등에서 구별되는 특징이 있고, 사람과 자원, 환경여건, 협상력, 기회 등에서도 차이점을 보인다.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공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미션), 자원 확보의 철학과 방법(자원동원), 이해관계자 중심의 성과 사고(성과측정) 등을 다루면서 자원 확보를 위한 신뢰 형성(사람과 자원), 사회적 요구

와 문제의 정의(환경 여건), 장기적 관점에서 사회 유익(기회) 등에 대한 이해와 실행법을 포함하고 있다.

〈표 2-7〉 상업적 기업가정신과 사회적 기업가정신의 차이

구분	상업적 기업 정신(CE)	사회적 기업가정신(SE)
(a) 구별 요소		
시장 실패	상업적 시장의 힘은 공공재나 제약 실패와 같은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함	사회적 시장실패는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위한 다양한 기업가적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음
미션	수익성 있는 운영을 통해 사적 이익을 얻는 것을 목표로 함	공익을 위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함
자원 동원	시장 기반 보상을 통해 인적 및 재정적 자원에 접근할 수 있음	상업 시장에 접근하는 데 있어 더 많은 제약에 직면함
성과 측정	재무 지표와 같이 상대적으로 유형적이고 정량화할 수 있음(경제적 수익)	많은 이해관계자가 관여되어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관리하는 것이 더 복잡함(사회적 이익)
(b) PCDO의 차이점( People, Context, Deal and Opportunity)		
사람과 자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가의 산업 지식과 네트워킹 능력은 투자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함</li> <li>상업적 기업가는 인재를 채용하고 유지할 수 있는 재정적 자원과 인센티브가 있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업가의 산업 지식과 네트워킹 능력은 다른 사람들이 그와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신뢰를 얻는 데 중요함</li> <li>사회적 기업가는 주요 고용에 대해 시장 가격을 지불할 수 있는 경우가 거의 없음</li> </ul>
환경 여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시경제, 조세, 규제 및 사회환경</li> <li>영리 사업가는 성과지표 미달 시 교체되는 경우가 많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거시경제, 조세, 규제 및 사회환경</li> <li>경제가 어려운 시기에는 사회적 요구가 심화되고 새로운 사회적기업이 설립될 수 있음</li> </ul>
협상력	상업적 기업가는 경영활동에 자본을 사용할 수 있는 재량권이 부여됨	사회적기업 투자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사용제한 있음)만 자금을 제공
기회	돌파구와 새로운 아이디어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으며, 기회는 크거나 전체 시장 규모가 성장해야만 함	혁신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기본적으로 장기적인 니즈를 보다 효율적으로 충족시키는 데 중점을 둠(빠른 성장이 아닌 사회적 사명)

출처: Austin, Stevenson & Wei-Skillern(2006); 배종태·차민석(2009) 재인용.

그러나 사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업가정신 개념과 반드시 이분법적으로 구별할 필요는 없다. 사회적 기업가정신이 일반적인 기업가정신과 다르게 순수하게 이타적이어야 하는 것도, 일반 기업가정신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하거나 비윤리적 태도를 낳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혁신가에게 있어서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의 동시 추구는 기업가정신 발현의 새로운 국면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경제적 접근이 반드시 사회적 가치와 같은 동기를 배제하거나 부정하는 것은 아니며(Mair & Marti, 2006), 상황과 맥락에 따라 사회적 가치를 얼마든지 내재화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가정신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면 그것은 사회적 기업가정신이라고 단정하는 Acs & McNeely(2013)의 논의와 궤를 같이한다.

다만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에 가치 있는 것을 창출하는 동시에 자생적(self-sustaining)이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역량이 뒷받침되어야 조직과 사업의 유지·발전이 가능하다(Dart, 2004; Auerswald, 2009; Acs & McNeely, 2013). 따라서 사회적기업가에게는 일반적인 기업의 운영과 관리에 관한 역량도 필요하지만, 기업활동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사회적 임팩트를 촉진할 수 있도록 기업의 체질을 혁신하는 역량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새로운 차원의 기업가적 혁신 역량이 요구되는 것이다(Coleman, 1988: 98).

이렇게 보면, 사회적경제의 교육·인재육성 정책은 OECD의 문화적이고 기초교육 차원의 접근을 구축하는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가와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종사자 등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사안이라 할 수 있다.

### 3. 사회적경제 인적자원개발의 접근 모형

사회적경제가 제도적·정책적으로 도입된 지난 20여 년 동안, 사회적경제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였다. 2020년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기업 수는 약 3만 2,000개, 취업자는 31만 명을 넘고 있다. 이 중 취약계층 취업자 수도 3만 3,000명에 이른다.<sup>28)</sup> 2018~2020년 3년간 정부의 공공 구매는 4.5조 원을 넘어섰고, 2018년에서 2021년 상반기까지 공공 부문의 정책금융 규모도 1.5조 원을 넘어선다. 2017년 10월부터 4년간 정부 15개 부처는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등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였다. 정책 발표 건수로는 기획재정부 6건<sup>29)</sup>, 고용노동부 3건<sup>30)</sup>을 비롯하여 문화체육관광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행정안전부가 각 2건, 그리고 금융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각 1건 등 28건에 이른다. 대부분의 중앙부처가 정책적으로 관여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현장에서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회적경제 전반은 여전히 다양한 문제점과 과제를 안고 있다. 창업 후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 개별 기업의 성장이 정체되거나 지연되어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의 소규모 기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이나, 자생력 있는 기업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은 정부지원 대비 수익 창출을 통한 지속

28) 관계부처합동(2021. 12. 1.). 문재인 정부 4년 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29)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추진전략, 제3차 협동조합 기본계획(‘20~’22), 사회적경제 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방안 등.

30)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 사회적경제 기업 판로지원대책 등.

가능성 담보나 사회적 임팩트 창출 성과에 대한 의문과 불확실성을 여전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 주고 있다(기획재정부, 2020; 신명호, 2019; 고용노동부, 2015). 일각에서는 사회적기업 관련 예산의 지속적인 투입에도 불구하고 평균 고용인원의 증가 수가 미미하고, 공공기금의 투·용자에 대한 상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주장<sup>31)</sup>까지도 제기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혁신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전략을 고민하기보다는 정부보조금 등에 의지해서 근근이 꾸려 나간다는 문제 제기나, 공공기관 물품조달의 우선구매제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산출하는 제품의 낮은 만족도가 우선 구매실적의 저조함으로 이어진다는 지적도 있다(신명호, 2019; 정선희, 2020).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생산성이 높지 않고, 제품이나 서비스 질을 고도화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조직 자체의 문제보다는 직접지원 중심의 정부 지원정책 문제점을 강조하기도 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본 조달이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매우 불리한 상황에서, 기업이나 조직 자생력 확보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또한 공공조달에서 우선구매와 같은 제도가 현장에서는 제대로 작동하기 어려울 정도로 국민적인 공감대가 낮고, 이는 정부의 소극적인 정책에 기인한다는 지적도 있다.

사회적경제를 둘러싼 원론적인 이념에서의 충돌 부분도 있다. 한편으로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 정책이 자생적 시장원리 대신 인위적인 자원배분 방식을 채택하고 있지는 않은지, 현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시장경제의 단점 보완 수준이 아닌 정부 만능 시대와 광범위한 도덕적 해이를 낳을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다(강현철, 2015). 반면에 사회적경제는 ‘사회적 소유’, ‘대안적 자원 배분’, ‘호혜적인 참여경제’를 실천함으로써 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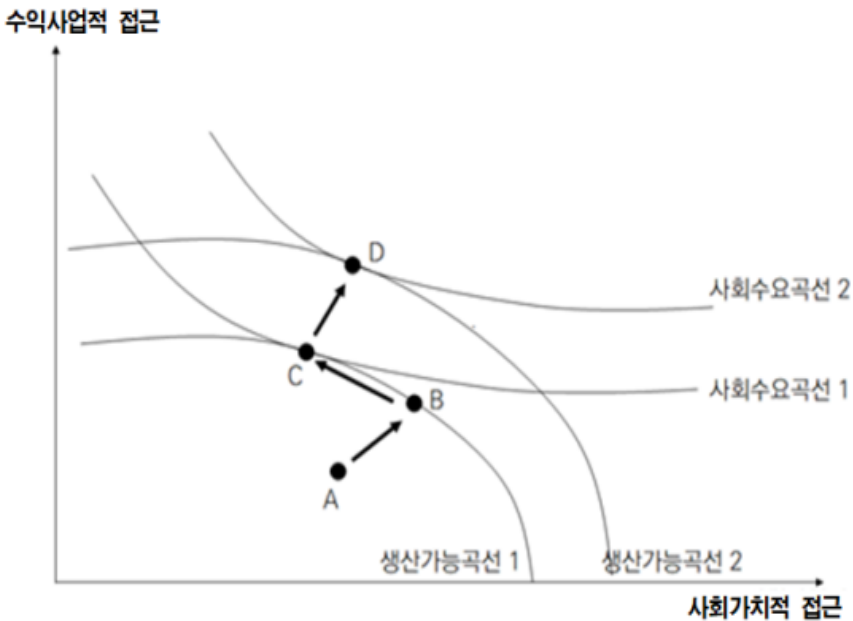
---

31) 세계타임즈(2021. 8. 27.)



리 경제를 ‘무한경쟁에서 따뜻한 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시도’ 혹은 ‘자본주의 4.0’으로서의 발전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다른 한 축의 주장도 존재한다(경기개발연구원, 2012. 11.). 또한 국가의 기본원리 측면에서 자유와 창의 대 협동과 연대의 충돌로 이해하는 발상과, 비록 헌법상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얼마든지 국가의 원리로서 사회연대를 수용할 수 있다는 주장도 대치하고 있다(강현철, 2015; 장우찬, 2019).

[그림 2-2] 사회적경제의 인적자원개발 과제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해당 조직의 결과물을 전통적인 영리기업의 특성인 수익성 추구하고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의 특성인 사회적 가치 추구의 두 가지 접근의 조합으로 파악하고자 한다(〈표 2-3〉 참조). 이들 두 가지 접근방식은 일종의 상충관계(trade-off)가 있으며, 이들 각각의 접근방식은 사회적경제 인적자원의 개발 방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앞서 논의했듯이, 전통적 영리기업도 이제 기업의 사회적 가치에 참여하면서 CSR 혹은 공유가치창출 및 비재무적 요소인 ESG 경영을 도입하고 있고, 전통적 비영리기업도 UN의 지속가능목표(SDGs) 달성을 위해 기업의 참여와 경제적 접근의 중요성을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공유가치창출 방식을 채택한 영리기업이나 수익사업 활동을 도입한 비영리기업 내에서도 사회가치적 접근과 수익사업적 접근의 조합방식은 기업별, 조직별로 차이가 있다. 교육 커리큘럼만 하더라도 수익사업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조직 리더의 기업경영적 역량 형성이나 HR, 마케팅, 회계 등 종업원 직무훈련 등 요소가 강조된다. 반면, 사회가치적 접근의 강화를 위해서는 인문학적 소양, 시민사회 및 각종 사회적 의제 이해 등의 요소가 커리큘럼에서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그림 2-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는 주어진 재원의 한계에서 산출할 수 있는 결과물(products)의 조합으로 설명된다. 생산가능곡선(production possibility curve)<sup>32)</sup>은 사회적경제가 수익사업에 방점을 둔 기업적 활동과 사회적 가치 및 임팩트 추구에 무게를 둔 조직의 활동이 산출하는 결과물(products)의 조합이다. 생산물 산출을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

32) [그림 2-2]에서 생산가능곡선 1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익사업적 접근과 사회가치적 접근의 두 방식의 조합으로 발생하는 결과로서 산출물을 나타내는 곡선임. 동일한 생산가능곡선상에 있는 모든 조합의 생산물 결과는 동일한 수준의 사회적 산출물을 생산하며, 수익사업적 접근과 사회가치적 접근 모두 사회적 생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고 가정할 때 이들 생산가능곡선은 통상적인 등량곡선(iso-quant curve)의 특성을 지니게 됨.

의 수익사업은 적합한 비즈니스 모델 채택과 사업 전개를 통해 조직 내부적으로는 서비스 또는 제품의 품질 개선, 비용 절감 및 관리와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강조하고 ‘규모의 경제’ 활용성도 강조한다. 조직 외부적으로는 시장 개척 및 외부 조직과의 인수합병(M&A), 프랜차이징 등의 시도가 이루어진다. 반면에 사회적 가치와 임팩트에 중점을 둔 사회적경제 조직의 주된 활동은 회원이나 거래고객(patron)과의 호혜적·협력적 관계 설정, 사회적 책임을 위한 연대활동 등에 무게를 신게 된다. 구성원의 의견 수렴이나 협력적 관계 형성, 사회적 파트너십 및 지식공유 등의 사회적 가치 확장을 염두에 둔 조직의 활동은 이들 범주에 속한다.

수익사업적 접근과 사회적가치 접근의 두 가지 시각은 사회적경제의 개별 기업 단위에서도, 그리고 사회적경제 전체의 수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다. 물론 사회적경제 조직의 업스케일링(upscaling)을 위해서는 수익사업과 사회적 가치 생산이 상충관계가 아닌 상호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 낮은 효율성과 생산성 저하를 보이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수익사업에서의 자생력 부족<sup>33)</sup> 등 요인이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비즈니스 효율성이나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높더라도 사회적 가치에 대한 구성원의 공감대가 취약하거나, 이에 대한 조직의 체질이 갖추어져 있지 못하여 사회적 가치 구현이나 임팩트가 낮은 결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론적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와 관련 조직이 두 가지 접근방식에 따라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 조합은 [그림 2-2]에서와 같이 우하향하는 생산가능곡선 1의 선상에 위치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사회적경제 생산은 그림의 A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

33) 이는 NPO 등 비영리조직의 사회적경제 활동에서 많이 목격됨.

다. 우리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수익사업적 접근과 사회가치적 접근의 균형에 도달하지 못하게 하는 사회적·인적 차원의 자원 활용 비효율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둘러싼 현재의 정책적 지원체계나 조직의 지배구조 등에서 비합리성이나 불필요한 각종 규제 등도 사회적경제와 해당 조직의 산출물을 생산가능곡선 1의 선상(B점 혹은 C점)보다는 생산가능곡선 1의 내부(A점)에 있게 한다.

한편 [그림 2-2]에서 사회수요곡선 1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제공하는 산출물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시장 수요 내지 선호를 나타내는 수요곡선이다. 동일한 수요곡선상에 있는 모든 생산 제품군의 조합은 우리 사회의 동일한 만족과 효용을 의미하며, 우리 사회(시장)가 선택에 있어서 차별을 두지 않는 재화의 조합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들 수요곡선은 통상적인 무차별곡선(indifferent curve)의 특성을 지닌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산출물에 대한 사회적 수요는 사회적 가치 위주 접근과 수익사업적 접근방식의 조합인 생산가능곡선 중간 지점에 위치하는 형태가 된다.<sup>34)</sup> 만약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요구가 커지면, 상황에 따라 수익사업적 접근 요구나 사회가치적 접근 요구 어느 한쪽으로 약간 기울어지는 형태를 가정해 볼 수 있다. [그림 2-2]에서 생산가능곡선 1이 현재의 시점을 상정한 것이라면, 생산가능곡선 2는 미래의 특정 시점을 상정한 것이다. 생산가능곡선 자체가 상향 이동(shift)하기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부문에서 같은 생산요소로 더 높은 산출물을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의 혁신이 일어나거나, 요소 비용의 감소 요인이 발생해야 한다. 공유경제의 확산이나 플랫폼 및 디

34) 앞서 NPO 등 비영리조직과 대기업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와 관련한 사례에서도 보듯이, 우리나라의 사회적경제 조직의 산출물에 대한 개인 수요의 총량인 사회수요는 기업적 접근을 통한 스케일링과 사회가치적 접근을 통한 스케일링 중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해법(corner solution)을 추구하지는 않는다고 판단됨.

지털 기반 경제로의 이행과 같은 외적 환경 변화는 사회적경제 내부적으로 새로운 기술혁신이 접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열 것이다. 그리고 이들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를 사회적경제에 접목함으로써 요소비용의 획기적 감소 여지도 열려 있다는 점에서 생산가능곡선의 상향 이동 가능성은 작지 않다. 또한 같은 자원의 한계 내에서도 시민사회의 성장이나 기업 및 시민사회의 참여와 협력적 분위기 조성, 규제의 획기적 감소 및 사회적 자본의 증대와 같은 외적 환경 변화, 그리고 이들 부문에 대한 과감하고 모험적인 투자의 증대, 내부 기업가적 정신의 확장 및 효율화 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생산성 증대의 변곡점을 통해 생산가능곡선은 상향 이동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보면 현재 우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는, 먼저 사회적경제 조직의 생산 지점이 생산가능곡선 아래 내부의 A점으로부터 생산가능곡선 선상인 B지점으로 옮기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는 사회적경제 자원 활용 방식의 비효율성과 사회적경제 활동 영역의 협소함 극복, 불필요한 정부 규제 해소 및 적극적인 스케일링 지원 등의 과제를 시사한다.

생산 지점이 B점에 이르더라도, 우리나라 사회적경제의 생산 지점이 동일한 생산가능곡선상의 왼쪽에 있는 C점으로 이동하는 경우를 가정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전반이 정부의 재정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거나 기업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미진한 상황, 혹은 자생력이나 재정 건전성이 부족한 사회적기업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경우를 상정하면, 사회가치적 접근보다는 수익사업적 접근이 강화될 수 있도록 각종 정책과 교육 프로그램을 가동하여 생산 지점을 이동할 필요가 생긴다.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에 기업가정신 및 수익사업에 대한 강력한 수단 확보를 장차함으로써 얻어지는 조직 혁신, 외부적으로 기업 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 분위기 조성, 정부의 규제 정책에 있어서의 획기적 변화 등도 B점으로부터 C점에서의 이동

(moving)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이 같은 사회적경제 조직 내외의 정비, 정부의 지원과 규제 등 환경적 요소가 정비된 경우, 기술 혁신과 요소비용 감소, 새로운 사회적 임팩트 기제의 도입 등을 통해 생산가능곡선의 상향 이동(D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 제3장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실태와 과제

제1절 중앙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과제

제2절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사업추진  
현황과 과제

제3절 민간 부문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제4절 소결





## 제3장 |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실태와 과제

### 제1절 중앙정부의 인재양성 정책 현황과 과제

#### 1.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 배경과 의의

1997년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사회가 3차 산업혁명(인터넷 기반 혁명)의 소용돌이에 본격적으로 진입한 시기인 2,000년대 초반에, 저출산·고령화 및 지방소멸 등 우리 경제의 위기 요인이 점차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특히 산업 경쟁력이 떨어지는 사회서비스 부문의 혁신과 구조화된 실업 양상 및 지역사회 공동화의 극복 등 각종 문제는 사회적 차원에서 새로운 계기가 요구되었다. 사회적경제는 지방소멸 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적 동력을 불어넣는 유력한 방안의 하나로서 주목받게 되었다.

당시 정부는 2007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이윤 극대화 논리를 통해 경제사회에 활력을 제공하는 일반적인 기업 문화에 더해, 사회적으로 필요한 혹은 결여된 사항을

새로운 형태의 기업활동 도입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완·극복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 육성법」은 특히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는 자활근로사업 및 장애인지원사업의 맥락에서도 탄력을 받았다. 1996년에 5개의 시범사업으로부터 출발한 자활사업<sup>35)</sup>은 1999년에 상설화되었으며, 2007년부터는 중간지원기구로서 ‘지역자활센터’를 설치하고 있었다(김수영, 2013).

한편 정부는 201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는 「협동조합기본법」을 제정하여, 금융 및 보험업을 제외한 모든 경제·사회 영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협동조합기본법」 제45조 제3항 참조).

당시까지의 협동조합은 「농업협동조합법」등 개별법 기반으로 법률 요건이 지나치게 까다로워 협동조합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다. 「협동조합기본법」은 일반 경제 및 사회 영역의 협동조합 접근성을 개방하는 측면에서 획기적 계기를 제공한 것이다. 5명 이상만 모이면 언제든지 협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되었고, 다양한 연합회 활동이 보장되었으며, 개별법으로 접근하기가 거의 불가능했던 노동자나 영세사업자도 협동조합에 참여하여 설립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일반 주식회사와 같이 법인격을 부여하고 배당 및 잔여재산 처리가 가능한 일반 협동조합과는 달리,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고 취약계층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비영리 법인으로서 ‘사회적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카테고리를 설정하기도 하였다.

35) 세계사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이 붕괴와 지식기반사회의 도래, 세계화 정책이 추구되었던 김영삼 정부 시기에 사회적경제의 단초라 할 수 있는 자활근로사업이 시작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음.

2007년의 「사회적기업 육성법」과 2012년 「협동조합기본법」 제정·시행 이래, 사회적경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들의 출현과 각 분야 활동을 통해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이 이루어졌다.

박근혜 정부 시기에 발표된 ‘제2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2013~2017년)에서는 정책의 초점을 사회적기업의 ‘육성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두었다. 이는 당시까지의 사회적경제 육성 정책이, 예컨대, 개별기업에 대한 인건비 위주 지원 등 표피적인 정책에 치우쳤다면, 제2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 친화적 시장(금융, 공공구매, 판로)의 확대, 사회적기업의 국민적 인식 향상과 같은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통한 정책적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제2차 기본계획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판로개척·공공구매·투자지원 확대, 기존 인건비 지원을 대체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통한 자생력 기반 강화, 다양한 형태의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될 수 있는 등록제 전환, 이에 따른 사후관리 시스템 및 지원체계 구축, 민간과 지역의 파트너십 강화를 통한 다양한 자원 및 네트워크 연계 활성화 등을 정책과제로 제시하였다.

박근혜 정부의 2차 기본계획이 개별기업 지원 위주의 정책으로부터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및 환경 조성 등 토대 마련에 진력하였다면, 3차 기본계획(2018~2022년)은 정부 주도의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사회적기업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으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추구하였다.

3차 기본계획은 사회적기업을 통한 가치 있는 일자리 10만 개 신규 창출, 사회적기업 구매 경험 비율 60% 달성이라는 목표 아래 ① 다양한 사회적기업의 진입 촉진<sup>36)</sup>, ② 사회적 가치 중심의 사회적기업 지원<sup>37)</sup>, ③ 사회적

36) 사회적기업 저변 확대를 위한 법·제도 개선, 사업 주기에 따른 창업 지원 강화, 사회적 가치가

경제 성장 생태계 조성<sup>38)</sup>, ④ 지역·민간 중심의 지원체계 조성<sup>39)</sup>과 국제협력 확대<sup>39)</sup> 등을 주요 추진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제3차 기본계획 수립에 충분히 담기지 못한 교육·인재육성 정책과 관련해서는 이를 별도로 담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을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12개 부처가 합동으로 발표하였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무엇보다 ‘새로운 인재가 사회적경제로 지속 유입되고, 전문성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는 종합적·체계적인 인재양성 시스템 마련’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간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인재양성의 문제점을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활동할 사람을 키우기 위한 ‘인재양성 여건의 열악성’, 사회적경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공감대 형성의 부족’과 이로 인한 청년·신중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신규 인재 유입 저조’, 부처별 창업 지원에만 편중되어 종사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교육전문가 지원인력 등 ‘분야별 전문가 양성과정이 거의 부재한 상황’ 등

이에 따라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인재 유입 활성화, 사회적 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5개 대영역과 각각의

---

높은 영역에 사회적기업 진입 촉진, 소셜 벤처 육성 및 사회적경제 기업으로의 연계 강화.

- 37) 사회적기업에 대한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사회적기업 투명성 제고,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천 선도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
- 38) 사회적기업 제품·서비스 소비 촉진, 업종·지역별 협력 사업 지원 강화, 스타기업 육성, 사회적 금융 공급 확대, 컨설팅 지원 확대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
- 39) 지역 주도, 중앙부처 뒷받침, 사회적경제를 뒷받침하는 협력체계 구축, 일반 국민의 사회적가치 이해 제고, 남북 협력, ODA 등 통한 사회적기업 확산, 아시아 지역의 사회적경제 허브(Hub)화 등을 세부과제로 제시.

대영역에 따르는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등 13개의 중영역, 그리고 청년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 등 32개의 세부과제를 제시하고 있다(〈표 3-1〉 참조)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재양성 사업을 처음으로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제시하고 있다는 의의 외에도, 부처별 개별 사업을 전체적인 정책 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했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 사회적경제의 인재양성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천명됨으로써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서도 우선순위를 유인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정책과제 내에서의 우선순위 설정이나 추진 전략 및 이행과정에 대한 제시가 없이 각 영역의 정책과제가 병렬적 열거에 그치고 있다는 점, 그리고 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실행체계와 관련 예산계획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은 한계로 지적된다(서종식, 2018).

〈표 3-1〉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정책 영역과 과제

대영역	중영역	세부과제(주관부처)
인재 유입 활성화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청년 사회적 가치 창출 활동 지원(행정안전부), 청년 사회적경제 기업 취업 확대(행정안전부),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신증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신증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고용노동부), 신증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고용노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신증년 사회공헌활동 지원(고용노동부)
사회적 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 를 겸비한 리더 육성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고용노동부·교육부),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고용노동부),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고용노동부·교육부)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교육부), 사회적경제 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고용노동부),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외교부), 대학생형 활성화 지원(기획재정부·교육부)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고용노동부),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사회적경제 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 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고용노동부),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고용노동부)
	교육의 편의성 제고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고용노동부·교육부),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고용노동부)
플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교육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교육부)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기획재정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고용노동부)
종합 지원체계 구축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고용노동부)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고용노동부),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고용노동부)
	공무원 및 지원 조직역량 강화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고용노동부),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고용노동부·인사혁신처)

## 2. 사회적경제 추진체계와 제도화

사회적경제 조직은 영리적 성격과 비영리적 성격의 혼합적 성격과 정부의 개입 등 제도적 요건으로 인해 기존의 영리적 조직이나 비영리적 조직과는 구별되는 제도적 절차화가 필요하다.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적 개입의 방식은 국가별 특색과 특징을 보인다. 이는 사회적경제가 포괄하는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마치 국가별 경제 정책의 유형과 강조점이 다르듯이 사회적경제 역시 국가별로 강조하는 특징과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British Council, 2022). 미국은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비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1977년에 ‘지역사회투자법’(Community Investment Act)을 제정하고, 이를 통해 지역사회 투자를 활성화하고 지역 사회개발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였다(헨리 한스만, 2017: 109). 영국은 이보다 늦은 2005년에 공동체이익회사(Community Interest Company)라는 제도를 도입하여 사회적기업 투자를 위한 중간지원기관의 역할, 주식 발행 및 배당금 지급(최대 이익의 35%) 등의 규정을 마련하였다. 이 밖에도 스페인의 ‘사회적경제법’(2011), 포르투갈의 ‘사회적경제기본법’(2013), 프랑스의 ‘사회적연대법’(2014) 등은 사회적경제의 제도화에 나라별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의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다. 다만 현재의 「협동조합기본법」 테두리에서, 일반적인 협동조합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제2조의 제1호)이라고 하여 사회적경제로서의 면모를 어느 정도 갖추고는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법 제2조 제3호에서는 사회적협동조합을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 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이라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하면, 협동조합에는 조합의 목적이 조합원의 권익 향상이라 하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성격의 협동조합과 그렇지 않은 협동조합이 공존하고 있다.

〈표 3-2〉 사회적경제 조직 운영 현황(2016~2021)

(단위: 천 개, %)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사회적기업	1,713	1,877	2,122	2,435	2,777	3215
협동조합	10,640	12,540	14,550	16,869	19,492	22132
마을기업	1,377	1,442	1,514	1,556	1,652	1697
자활기업	1,186	1,092	1,211	1,176	1,062	997
<b>합계</b>	<b>14,916</b>	<b>16,951</b> (13.6%↑)	<b>19,397</b> (14.4%↑)	<b>22,036</b> (13.6%↑)	<b>24,983</b> (13.4%↑)	<b>28,041</b> (12.2%↑)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1).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대표적 유형인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은 〈표 3-3〉과 같다.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될 수 있는 조직 형태는 「민법」상의 법인과 조합, 「상법」상의 회사, 합자회사 그리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과 단체를 포괄하고 있다. 앞 절의 〈표 2-3〉 사회적경제 조직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일반적인 기업(주식회사)부터 비영리단체까지 포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3〉 사회적기업의 인증 요건

구분	요건 사항	주요 내용
조직 형태 태 요건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사람의 결합체인 사단법인, 일정한 목적을 위해 제공된 재산의 집단인 재단법인, 구성원간의 일종의 계약관계인 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합자조합	회사(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합자조합(경영을 맡은 무한책임의 업무집행조합원과 여기에 투자하는 유한책임조합원으로 구성된 조합)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li> <li>-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li> <li>-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li> <li>-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li> <li>-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협동조합,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협동조합연합회,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li> <li>-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li> <li>- 유급근로자 고용</li> </ul>
기타 요건	유급근로자 고용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할 것
	사회적 목적의 실현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할 것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출 것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영업활동을 통해 얻는 수입이 노무비의 50% 이상일 것
	정관의 필수사항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9조에 따른 사항을 적은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출 것
	이윤의 사회적 목적 사용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상법 상 회사·합자조합 등)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3. 중앙부처의 정책추진 현황과 이슈

아래 <표 3-4>는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자료집』(관계기관 합동)에 나타난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수행 사업 현황이다. 이는 제3차 기본계획 수립(18. 11. 9.) 이전과 이후에 각 부처별로 발표한 각종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반영한 내용이다.

제3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발표한 부처별 정책은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17. 10. 18.), ‘사회적금융 활성화 방안’(18. 2. 8.), ‘소셜벤처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 방안’(18. 5. 16.),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 7. 3.), ‘과학기술인협동조합 제2단계 혁신성장전략’(18. 7. 6.) 등<sup>40)</sup>이다. 그리고 제3차 기본계획 이후에 발표된 각 부처별 정책은 ‘사회주택 활성화 방안’(19. 2. 19.),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지원계획’(19. 3. 22.), ‘사회적 농업 추진 전략’(19. 3. 25.),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 12. 28.) 등<sup>41)</sup>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부처별 사업 규모는 ‘어촌뉴딜 300’을 수행하는 해양수산부의 예산액(517,700백만 원)이 가장 크고, 행정안전부(255,459백만 원), 중소벤처기업부(227,659백만 원)의 순으로 나타나며, 사회적기업 정책을

40) 이 밖에도 ‘자활기업 활성화 대책’(18.7.26.),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협동조합 추진방안’(18.7.2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18.9.6.) 등이 추가됨.

41) 이 밖에도 ‘복권기금의 사회적 가치 제고 방안’(19. 4. 2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한 문화서비스·일자리 창출 방안’(19. 9. 3.), ‘지역 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 방안’(19. 11. 5.), ‘사회적경제와 연계한 농·산·어촌 활성화 방안’(19.12.5.),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부문의 추진전략’(20.1.15.), ‘제3차 협동조합기본계획(20~22)’(20. 3. 31.),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 7. 22.),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20. 8. 13.), ‘협동조합 경쟁력 강화 방안’(21. 5. 20.),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 방향’(21. 5. 20.), ‘여성가족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1. 6. 29.),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대책’(21. 9. 9.),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활력 제고 방안’(21.9.30.) 등이 추가됨.

주관하는 고용노동부는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등 사업에 149,316백만 원의 예산액을 배정하고 있다.

〈표 3-4〉의 사업규모는 부처 예산뿐만 아니라 국고보조금, 지방자치단체 등의 매칭 재원이나 펀드까지 포함하는 포괄적인 성격의 예산이기는 하나, 관련 사업 규모를 모두 합한 총액은 1.63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해당 사업에는 사회적경제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기반 인프라 사업이나 시설 정비 및 확충 등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으나,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부부처의 기대와 의지는 최소한 확인할 수 있다.

〈표 3-4〉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수행 사업 현황(2022년)

(단위: 백만 원)

부처명	사업명	사업 규모	사업명	사업 규모	부처별 합계액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93,628	사업개발비 지원	20,780	149,318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500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2,054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31,889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467	
중소벤처 기업 부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3,210	예비창업패키지	98,289	227,659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15,754	소셜벤처 육성	2,328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6,078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7,000	
	소상공인 사회적경제 기업 전용자금	15,000	사회적경제기업 정책자금 지원	80,000	
문화체육관광 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2,644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7,000	2,2225
	관광두레 조성	12,581			

6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산업통상자원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R&D)	2,871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사업화)	5,733	31,124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19,330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3,190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630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15,866	204,418
	사회적경제 연계 발달 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187,922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625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560	1,185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6,595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239,614	255,459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3,500	사회적경제 유통지원센터 조성사업	2,000	
	지역자산화 지원사업	3,750			
국토교통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162			162
농림축산식품부	사회적 농업 활성화 지원	58,520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122,500	182,768
	농촌 교육·문화·복지 (축제·유학 포함) 지원	1,748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650	신품종 생명자원 활용 공동체 활성화	5,000	9,560
	산림일자리발전소운영	3,910			
금융위원회	신용보증기금 사회적경제 보증사업	12,000	사회투자펀드 조성 및 운영	30,080	12,000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 대출지원	7,000			
	협동조합 활성화	7,364	어촌뉴딜300	517,700	534,947

기획재정부 등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1,293	혁신적 기술 프로그램(CTS)	7,390
	환경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1,200		

주) 비예산사업, 대출·보증사업 등은 제외한 수치임.

기획재정부 등 항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환경부, 외교부, 해양수산부 등 포함.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자료집.

아래 <표 3-5>는 중앙부처가 추진하는 사회적경제 사업에서 교육·인재육성 관련 요소를 별도로 도출한 것이다. 각 사업이 지원하는 대상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진입 및 창업을 도모하는 문화예술 창업인이나 마을공동체 등 풀뿌리 조직, 사회적경제 지원기능이 요구되는 광역 및 지방자치단체, 중앙 및 지방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부처 고유의 특성에 맞는 영역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 설립 이후 3~4년이 넘어 성장기에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 등 다양하다.

이들 각 사업에는 개인 및 조직 단위의 인건비 혹은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지원, 신생 조직의 창업을 위한 운영경비·자금, 사업모델의 개발·연구(R&D), 상품개발, 홍보·마케팅, 관련 기자재 및 공간 구비 등 사업비 지원, 지자체 혹은 중간지원기구의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편의시설, 기자재 등 인프라 지원 등과 함께 교육·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요소가 포함된다.

교육·인재육성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은 대상별로 차별화된다. 예컨대, 신생 창업기업은 사회적경제 및 조직에 대한 기초적인 진단과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할 수 있고, 성장기에 있는 기업이나 조직은 수준에 따른 컨설팅과 멘토링, 그리고 사업주와 종업원을 위한 전문교육, 현장 OJT,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일반시민들 대상으로는 기초적인 이해교육이나 인턴십 프로그램 등이 실시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 직접 종사하는 사업주나 종업원 그리고 자원봉사로 참여하거나 제품(용역)의 수혜를 보는 일반시민과 소비자 대상과는 달리, 사회적경제 사업의 전달과정에 놓여 있는 보조기관, 지자체 혹은 중간지원기구 관계자 대상의 교육·인재육성 프로그램은 차별성을 띠게 된다.

그리고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이나 교육부의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사업은 여타 사업과는 달리, 창업단계에 있거나 성장단계에 있는 리더와 관리자·종업원 대상의 전문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하며,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의 리더로서 혹은 기초 소양을 갖춘 사회적경제인으로서 교육 커리큘럼을 운영한다. 또한 학위·비학위 과정을 활용하여 일반학생이나 지역 주민 대상의 소양교육,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경제 교육의 허브로서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한편 이같이 다양한 현장의 교육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대상별 교육에 요구되는 커리큘럼 개발, 강사 및 코칭 인력 대상의 전문교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의 확보 등도 교육·인재육성 사업의 중요한 요소라 할 것이다. 다만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자료집(관계부처 합동, 2022)』에 나타난 현황 자료에는 부처 내, 그리고 부처 간 차원의 각 사업 간 연계·협력에 대한 세부적인 프로그램이 잘 나타나지는 않고 있다. 예컨대,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과 교육부의 대학 창업 교육 체제구축 사업의 경우, 두 사업은 해당 대학뿐만 아니라 전국의 각 대학을 사회적경제의 주요 허브로 참여하게 하는 등의 비전 및 전략 공유,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서의 유사 경험 및 노하우 교류 등 연계·협력 사안이 적지 않다. 또한 각 부처별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및 조직에 대한 진단과 컨설팅, 멘토링 등 프로그램과 전문교육, 현장 OJT, 기초교육 및 인턴십 프로그램 등 유사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

는 연계·협력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지만, 이에 대해서도 이행과정이나 프로그램은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표 3-5〉 중앙부처 사회적경제 사업 중 교육·인재육성 관련 내용(2022년)

부처명	사업명 (규모, 백만 원)	지원 대상·규모	전체 사업내용 중 교육·인재육성 내용
고용 노동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31,889)	예비/초기 창업팀 900개	창업지원기관 32개소 통해 창업자금, 공 간 제공과 함께 <u>교육·멘토링 제공</u>
	사회적기업성 장지원센터 조성(2,054)	기존 15개소, 신규 2개소	성장지원센터를 통해 입주·협업공간 지원 과 함께 <u>교육, 멘토링 제공</u>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467)	4개 대학 116.5백만 원씩 지원 (비학위과정)	<u>리더 및 관리자급 대상 과정,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 및 지역 주민 개방 프로그램, 학 생 진로 프로그램 개설 등</u>
중소 벤처기업 부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3,210)	4~10년 차 사회적경제 조직 28개사 지원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성장을 위해 연구 개발, 판로개척과 함께 <u>기업진단(진단·컨 설팅), 전문교육 제공</u>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15,754)	300개 조합 지원	소상공인 간 공동사업, 판로지원과 함께 협업 아카데미 운영(인큐베이팅 및 <u>교육·컨설팅</u> )
	중소기업협동 조합 육성사업(6,078)	협동조합 및 소상공인	협동조합정책개발, 공동사업 지원과 함께 <u>교육·컨설팅 제공</u>
	소셜벤처 육성 (2,328)	소셜벤처기업, 소셜벤처 중간지원조직 등	소셜벤처 실태조사, 사회적가치 측정, 평 가시스템 운영과 함께 중간지원조직을 통 해 지역 소셜벤처 대상 <u>역량 강화 프로그 램 운영</u>
	예비창업 패키지 (98,289)	예비창업자 1,500명 내외 평균 5,000만 원 지원	예비창업자 초기창업 사업화를 위해 창업 사업화 자금, 보증·투자·판로 등 지원과 함께 <u>멘토링, 창업교육 제공</u>
문화 체육 관광부	문화예술 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2,644)	30개 내외, 기업별 차등 지원	초기 사업기반 구축 및 성장기 사업도약 지원 항목 중 <u>상시적·전문적 창업 집중 교 육 및 컨설팅 지원 포함</u>

66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7,000)	예비 및 3년 이내 기업 20개사 지원	창업자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 중 아이디어 발굴, 현장실습, 창업 보육 컨설팅 포함
산업 통상 자원부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3,190)	혁신 서비스·BM 도입 기업 최대 60개사	혁신 제품 및 서비스 개발 지원, 디자인 인력 지원, 서비스디자인 지원과 함께 기업 진단 워크숍 개최, 집중 컨설팅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625)	시도교육청 및 중앙지원센터	중앙지원센터 운영 및 이를 통한 컨설팅과 교육콘텐츠·매뉴얼 개발·보급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560)	창업교육 거점대학 2개교 지원	창업학기제 등 창업 친화적 학사제도 개발 및 타대학 확산, 학점 인정 가능한 창업교육 커리큘럼 개발, 창업기업 현장실습 촉진
행정 안전부	마을기업 육성(6,595)	예비마을기업 등 약 300개소 지원	마을기업 보조금 지급, 판로지원 등과 함께 경영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지원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제 구축사업 (3,500)	35개 기초지자체 각 1억 원 지원	시·군·구 정책·사업 간, 민·관 간 연계와 협업을 위한 협업체제 활성화 및 전문인력 양성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국토 교통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162)	조합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뉴딜사업비 활용)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운영지원 사업 중 주민·지자체·센터 교육(주체별 맞춤형 교육, 기초교육, 전문교육 실시)
농림 축산 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122,500)	123개 일반농산어촌 시군 4년 동안 각 70억 원 지원	지역자원 활용한 신상품 개발 및 상품화, 가공시설·장비 개선, 로컬푸드 육성 등과 함께 총사업비의 30% 이상을 자생조직 역량강화-네트워크 활성화 배정
	농촌 교육·문화·복지 지원(1,748)	면단위 주민 공동체 135개소 (4,000명)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교육·문화·복지 분야 프로그램 운영비(개소당 5~20백만 원) 지원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650)	사회적기업 전환 200개 기업 지원	판로지원, 사회적기업 인증 지원 등과 함께 기초교육, 제도 설명 등
	산림일자리발 전소 운영 (3,910)	45개 시군구 지원	비즈니스 모델 개발, 전문매니저 인력 지원과 함께 교육, 멘토링 제공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7,364)	협동조합 종사자, 협동조합 창업 희망자	법령개정, 기본계획, 실태조사 등 사업, 청년 조합 활성화, 판로확대 등과 함께 <u>교육과정 개발, 맞춤형 아카데미 운영, 교육 및 컨설팅 제공</u>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1,293)	협동조합 설립 희망자 및 설립 운영자	지역의 과학기술인이 주도하는 기관형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 사업 중 <u>설립·확산 교육, 컨설팅 지원 포함</u>
환경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1,200)	사회적경제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사회적경제기업 확산 사업 중 <u>교육, 멘토링, 컨설팅 포함</u>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자료집.

아래 <표 3-6>은 중앙부처에서 수행하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인재육성 사업의 세부적인 요소 중 교육의 내용과 전달체계상 사업수행기구를 비교한 것이다. 각 사업에는 대상자에 따라 일반시민(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교육, 신규 진입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전환·창업교육, 3~4년 차 이상이 되는 기업(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성장지원교육, 그리고 이들 대상자 교육에 요구되는 교육 콘텐츠 개발 등의 요소가 포함된다.

각 부처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인재육성 사업이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항목은 창업·전환지원 교육 항목으로서 23개 사업의 91.3%인 21개 사업에 이른다. 성장지원 교육 항목은 56.5%인 13개 사업이며, 콘텐츠 개발은 7개 사업으로 30.4%를 차지한다. 그리고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는 교육 프로그램 항목은 일반시민이나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제고 교육으로서 23개 사업의 17.4%인 4개 사업에 그치고 있다.

부처의 정책 전달체계상에 있는 기관들은 일종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업수행을 맡고 있다. 가장 많은 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은 고용노동부 산하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서, 교육·인재육성 관련 프로그램이 수행되는 전

체 23개 사업의 21.7%인 5개 사업을 담당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한국임업진흥원 2개 기관은 해당 부처의 사업 2개씩을 맡고 있고, 나머지 사업은 모두 부처 산하의 공공기관 혹은 민간 유관기관에서 담당하고 있다.

이상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현재 각 부처의 교육·인재육성 사업 대부분이 부처 소관 영역에서의 사회적기업 발굴 및 창업 혹은 기존 기업(조직)의 사회적경제 전환에 많은 투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성장지원을 위한 교육도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교육의 유형은 <표 3-5>와 연계하여 고려할 때, 기업(조직)별 맞춤형 컨설팅이나 멘토링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 일반시민이나 학생들 대상의 기초소양 프로그램이 중앙부처 사업에서 적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들 교육은 대체로 지방자치단체나 중간지원기구의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넷째, 기관 고유 업무로 사회적기업가 양성 등 사회적경제 진흥을 위해 별도 설립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달리, 각 부처의 산하 혹은 유관기관의 고유 업무에는 사회적경제 관련 사항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특히 사회적경제 정책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각 부처 전달체계상의 기관·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노력도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3-6〉 중앙부처의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정책 사업 수행 요소(2022년)

부처명	사업명	인식 제고	창업·전환 지원	성장 지원	콘텐츠 개발	사업수행기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조성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중소벤처 기업부	사회적기업 성장집중지원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사업		✓	✓		중소기업중앙회
	예비창업패키지		✓			창업진흥원
	소셜벤처 육성		✓		✓	중소벤처기업부 (보조사업자)
문화체육 관광부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경제 활성화 지원		✓	✓		예술경영지원센터
	스포츠산업 예비초기 창업 지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산업통상 자원부	디자인 주도 사회적기업 혁신역량 강화		✓			한국디자인진흥원
교육부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	✓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대학 창업교육체제 구축		✓		✓	한국연구재단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육성		✓	✓		17개 광역지자체
	사회적경제 민·관 협업체계 구축사업	✓	✓	✓		행정안전부 (기초지자체)
국토교통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육성	✓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농림축산 식품부	농촌 신활력플러스 사업		✓	✓		농림축산식품부
	농촌 교육·문화· 복지(축제·유학 포함) 지원	✓			✓	농어촌희망재단
산림청	산림형 사회적기업 발굴·육성		✓	✓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일자리발전소운영		✓		✓	한국임업진흥원
기획재정부	협동조합 활성화		✓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		✓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지원센터
환경부	환경 분야 사회적경제 육성		✓			한국환경산업협회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자료집.

## 제2절 지방정부의 인재육성 사업 추진 현황과 과제

### 1.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정책

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지자체별로 수립·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정책 관련 중장기종합계획 혹은 단기추진계획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관련 중장기 종합·단기추진 계획을 수립·추진하는 비율은 광역지자체 100%, 기초지자체 35.0%에 이른다.<sup>42)</sup> (〈표 3-7〉 참조)

〈표 3-7〉 광역 및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계획 수립·추진 현황

(단위: 개)

구분	중장기 계획 수립	단기 계획 수립	합계(비중)
광역지자체 수	15	2	17(100.0%)
기초지자체 수	41	38	79(35.0%)

주) 중장기계획을 수립한 지자체는 단기계획을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광역지자체는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 17개, 기초지자체는 226개.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22.

42)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홈페이지, 최종 업데이트 2021년 10월 21일.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검색일 2022. 10. 22.

이들 지자체의 증장기 종합계획이나 단기 추진계획의 대부분은 2018년 6월에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이하 인재양성 종합계획)’ 내용을 지역 나름의 요구와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수립한 것이다. 15개<sup>43)</sup> 광역지자체 증장기 계획을 살펴보면, 각 계획은 대부분 연구 용역 과정을 거치고 있고, 이를 통해 정부의 인재양성 종합계획이 제시한 전략적 과제를 지역단위로 반영하여 짜임새 있는 내용과 체계를 보이고 있다.<sup>44)</sup> 이들 광역지자체 증장기계획에서 교육·인재육성과 관련된 정책(전략사업) 132건을 추출하여, 이들 정책이나 전략사업이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틀에서 어떠한 내용과 빈도로 반영되는지를 살펴보았다(〈표 3-8〉 참조).

43)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는 접근이 어려워 제외함.

44) 광역지자체 증장기 계획은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년)과 유사한 혹은 늦은 시기에 발표되었음.

7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표 3-8〉 광역단위 종합계획의 전략적 과제로 반영된 항목

정부(종합계획상)의 정책과제명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전략과제) 사례	과제 수
1. 인재 유입 활성화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도내 대학의 소셜벤처 동아리 사회적경제 조직화(충남) 유희·공공자원 조사 및 활용을 위한 사업아이템 매칭(경북)	10 (7.6%)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지역특화형 협동조합 모델(경북), 사회적 농업모델 구축 지원(제주), 창업 인큐베이팅(울산)	8 (6.1%)
2. 사회적책임 의식과 경영 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지역대학 연계 사회적경제 CEO 과정 신설·운영 및 CEO 네트워킹(광주), Social Engineer 양성(대구)	8 (6.1%)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지역 주요대학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주요 대학 간 교류·협업체계구축(서울)	7 (5.3%)
	2-3.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	전문가 경영 컨설팅 진단 및 치료 과정(부산광역시) 피어(동료) 컨설팅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전남)	21 (15.9%)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사회적기업 종사자 주도 지식·연구동아리(충남), 대기업·고용노동부 연계 역량강화(충북)	10 (7.6%)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사회적경제 학습플랫폼 구축 및 고용노동부 직업훈련포털 연계(강원)	5 (3.8%)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사회적경제 조직-교육기관 간 협력 생태계 조성(충북),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전북)	12 (9.1%)
	4-2.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교육센터 설치 및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전남)	16 (12.1%)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주민 주도의 온오프라인 소모임·공동체 발굴, 육성, 연계(제주), Bad Idea 경진대회 등 사회적경제 의제 발굴(부산)	8 (6.1%)
5. 종합지원 체계 구축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전담부서 신설 및 교육모니터링 시스템 개발(경기), 학교·대학·공공기관 연계성 강화	10 (7.6%)
	5-2. 콘텐츠 및 강사 양성 등 인프라 구축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광주), 맞춤형 교육콘텐츠 제공 AI 기반 원격교육지원 플랫폼 구축(제주)	12 (9.1%)
	5-3. 공무원 및 지원 조직 역량 강화	공무원 교육과정(전문·위탁)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울산), 공무원 사회적경제 연구회·동호회 구성 및 협동조합 지원(경남)	5 (3.8%)
계			132 (100%)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첫 번째 영역인 ‘1. 인재유입 활성화’에서는 청년층과 신중년층의 사회적경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회적 가치 창출활동 지원이나 사회적경제 기업 창업 확대, 사회공헌활동 지원 등을 강조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이를 위해 청년층의 소셜벤처 동아리 활성화나 지역사회의 유희·공공자원 조사를 통한 창업 지원 등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다. 신중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은 주로 협동조합 모델이나 사회적 농업 모델 등 사회서비스 산업과 관련된 접근이 취해지고 있다. 132개 과제 중 청년층 대상 정책이 10건(7.6%), 신중년층 대상 정책이 8건(6.1%)을 차지하고 있다.

두 번째 영역인 ‘2. 사회적 책임 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에서는 대학 전문교육과정 확대 및 사회적 리더(대학생, 기업가) 육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에서는 학부 및 대학원 과정 신설뿐만 아니라 지역대학과 연계한 사회적경제 CEO 과정 개설, CEO들 간의 네트워킹과 해외교류 등 역할이 대학을 중심으로 추진되어야 함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2-3.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 항목은 각 지자체의 정책(전략사업)에서 가장 높은 빈도인 21건, 15.9%를 보인다. 인재육성 종합계획에서 ‘2-3’의 세부과제로는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 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등이 제시되지만, 지역에서는 이들 사업에 더해 ‘전문가 경영 컨설팅 진단 및 치료 과정’(부산광역시), 사회적경제 피어(동료) 컨설팅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전남) 등 기업컨설팅 요소를 강조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스케일업에 대한 지역의 관심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영역인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서는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과 교육의 편의성 제고 등이 제시되고 있다. 지역에서는 정부가 제시한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 프로그램 제공,

훈련비용 및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그리고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등과 더불어 종사자 주도의 지식·연구 동아리 지원, 대기업이나 고용노동부와 연계한 역량강화 체계 등을 제시하고 있다. 132건 중 이 영역의 빈도 10건(7.6%)과 5건(3.8%)을 보인다.

네 번째 영역인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과 관련하여 정부는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등을 주문하고 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교원 역량 강화,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시학습 지원, 지역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교육기관 간 협력 생태계 조성이나 학교협동조합 설립·운영 지원과 같은 실천적 접근과 찾아가는 사회적경제교육, 주민 주도의 온·오프라인 소모임·공동체 발굴 및 육성 등으로 접목하고 있다. 빈도는 각각 12건(9.1%), 16건(12.1%), 8건(6.1%)을 보인다.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마지막 영역인 '5. 종합지원체계 구축'은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공무원 및 지원 조직역량 강화 등 여건 형성에 주력하는 영역이다. 보다 세부적으로 정부는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등을 제시하고 있다. 지역은 이를 반영하면서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교육 모니터링 시스템, 학교·대학·공공기관 간의 연계성 강화, 디지털교육 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공무원 교육과정(전문·위탁) 사회적경제 과목 개설, 공무원의 연구회·동호회 구성 등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빈도는 각각 10건(7.6%), 12건(9.1%), 5건(3.8%)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8〉의 항목별 빈도 분포에서 보듯이<sup>45)</sup>, 각 시도는 지역별 상황이나 방향성 설정에 따라 인재양성 종합계획상의 전략 항목을 모두 채택하고 있는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어떤 방식으로든 인재양성 종합계획이 제시하는 전략적 방향을 따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재육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하는 틀과 콘텐츠를 뛰어넘는 다양한 지역현장의 요구와 아이디어가 적지 않다. 지역 정책사업은 전반적으로 기설립된 조직의 지속가능성과 업스케일링에 집중하고 있다. 이는 유망 분야의 전문리더 육성이나 중간관리자 혹은 종사자의 직무훈련 지원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예컨대, ‘2-3.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 항목의 ‘전문가 경영 컨설팅 진단 및 치료 과정’이나 사회적경제 피어(동료) 컨설팅 및 멘토-멘티 프로그램 지원 등은 조직의 업스케일링에 대한 지자체 관심이 표현된 것이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작성된 인재양성 종합계획과는 달리, 코로나19 사태 기간을 통해 지역현장이 마주한 디지털 교육시스템에 대한 요구가 지자체의 계획에는 대부분 반영이 되고 있다는 점도 특기할 사항이다. 그리고 지역별로 산재해 있는 대학의 사회적경제 사업 주도성을 부여하고 산학협력 및 기업가 네트워킹, 각종 콘텐츠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이 수행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일 등은 인재양성 종합계획상의 프레임을 뛰어넘는 중요한 진전으로 판단된다. 또한 지역에서의 정책이 각종 동아리 활동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초·중·고생 및 대학교에서의 창업동아리뿐만 아니라 사회적기업 안팎의 학습동아리 조직, 공무원 관련 동아리 조직, 주민자율의 동아리 조직 등 각종 학습 소모임이 지자체의 계획에서 다양하게 강조되고 있다. 동아리 활동이 가지는 자기주도성과 동아리 운영을 통

45) 지역적 인식차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빈도의 차이가 정책 비중의 차이를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해 배울 수 있는 민주주의적 원칙이 사회적경제의 가치나 맥락과 부합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 2.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 환경으로서 조례 현황

중장기 종합계획이나 단기 추진계획이 지자체의 직접적인 정책 의지를 표현한다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관련 조례는 정책의 지속성과 실행력 형성을 위한 여건을 제공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있다고 파악한 전국 광역지자체와 시도교육청, 그리고 기초지자체의 조례는 17개 시도 및 시도교육청 등 광역단위에서 129개, 226개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554개 등 총 683개에 이른다(규칙 제외). 이들 683개 조례에는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소셜벤처’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 지원과 역할을 규정한 조례가 있는가 하면, 공공구매, ‘공공조달’ 및 ‘사회적경제기금’ 등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조하는 조례도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나 ‘사회적가치<sup>46)</sup>’와 같이 사회적경제와 관련 조직 전반을 지원하거나 지역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반영한 경우도 있다.

광역단위의 조례는 공공구매<sup>47)</sup>에 대한 비중이 18.6%로 가장 높으며, 사회적경제 육성<sup>48)</sup>을 규정한 조례는 17.8%,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sup>49)</sup>는 12.4%, 그리고 자활사업 관련 조례<sup>50)</sup>는 10.9%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

46) 사회적가치 관련 조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를 증대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례,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가치 교육을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는 조례, 사회적가치지원센터와 같은 별도의 조직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다양한 유형을 포함함.

47)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48)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49)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들 광역시도 및 시도교육청의 129개 조례 수는 17개 시도별로 평균 7.6개의 관련 조례가 운용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한편 전국의 226개 기초지자체가 직접 관할하는 조례는 554개로서 지자체별 평균 2.5개에 이른다. 기초단위에서 가장 높은 빈도를 보이는 조례는 사회적경제의 육성<sup>51)</sup>을 규정한 조례로서 33.4%에 이르며, 자활기금 관련 조례<sup>52)</sup>도 28.3%를 보인다. 그리고 중소기업협동조합 관련 조례<sup>53)</sup>가 12.4%,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련 조례<sup>54)</sup>는 11.7%를 보인다. 사회적경제의 동일한 주제를 다루고 있더라도, 조례 성격에 따라 광역단위와 기초단위의 양상은 다소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마을기업 관련 조례나 소비자협동조합 관련 조례, 그리고 학교협동조합 관련 조례는 광역시도 혹은 시도교육청 단위에서만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기초단위에서는 전무하다. 그리고 마을기업과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소셜벤처 등과 관련된 조례의 광역단위 빈도는 각각 1곳에 불과하다.

이들 각 조례 내용에는 교육이나 훈련, 전문가 양성 등의 사항이 조례 특성에 따라 달리 규정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금이나 자활기금과 같이 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이 목적인 조례에는 교육·인재양성 관련 규정이 나타나지 않는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운영하고 있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관련 조례도 조례의 목적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에만 집중하고, 교육훈련과 같은 별도의 규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들 조례 내용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인재육성 관련 항목은 <표 3-9>에 나타난 바와 같이 주민이나 학생, 일반시민 대상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

50) 「강원도 자활사업 지원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51) 「가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52) 「강릉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53) 「가평군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54) 「강화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예로 들 수 있음.

개선 교육,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들의 이해도 제고 및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해당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등 크게 세 가지 성격의 교육인재육성 관련 항목이 제시되고 있다. 예컨대, 「경상남도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개척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을 위한 교육·홍보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제5조 제2항)과 ‘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공공기관의 구매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시행’(제11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경기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조례」에서는 도지사가 주민을 대상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중요성과 협동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협동조합에 대한 교육·홍보 등을 위해 노력’(제3조 제3항)하도록 하고 있고, 동시에 제8조(교육훈련 지원)에서는 도지사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및 조합원의 능력향상을 위해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인재육성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체계는 일정 정도 갖추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역별로 다소의 편차는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의 추진 환경이 되는 다양한 장치들이 이미 각종 조례에 내재해 있기 때문이다. 물론 중앙단위에서의 사회적경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여전히 취약하여, 중앙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과 관련 교육·인재육성 관련 사업의 강조점이 달라지거나 기복을 겪는 등의 외생적(exogenous) 변수의 소지도 있다. 그러나 광역 지자체 단위 평균 7.6개, 기초 지자체 단위 평균 2.5개의 숫자로 사회적경제의 다각적인 측면을 지원하고, 또한 관련 교육훈련이나 전문가 양성을 실시하도록 하는 각종 조례는 지자체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교육·인재육성 관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는 토양으로 작용한다.

한편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교육·인재육성 사업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별로 운영되고 있는 광역 및 기초 단위의 각 조례 규정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역단위의 여러 조례는 관련 내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조례 내용에는 사회적경제 조직 및 문화의 활성화를 꾀하기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지역 주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도 제고 규정이 있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 및 설립을 위한 인력의 유입과 역량 형성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참여한 기업가와 종사자들의 교육훈련 등에 대한 규정도 찾을 수 있다. 지자체의 사회적경제 담당부서나 중간지원조직은 공공구매 혹은 공공조달을 담당하는 부서와 유관조직, 시도교육청의 사회적경제 교육 담당부서 및 유관조직 등과 연계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지역단위의 연계와 협력관계를 통해 일반 주민 대상의 교육 프로그램 내실을 강화하고 지속성과 규모의 효과를 더할 수 있다.

〈표 3-9〉 전국 조례 운용 현황(규칙 제외)

구분	광역단위			기초 단위	'교육·인재육성' 관련 규정
	광역 지자체	시도 교육청	합계 (비율)		
공공구매	14	10	24 (18.6%)	34 (6.1%)	제품 구매촉진 교육·홍보, 공공기관 구매담당자 대상 교육훈련
공공조달	5	0	5 (3.9%)	2 (0.4%)	사회적책임 증대 인식개선 교육
마을기업	1	0	1 (0.8%)	0 (0.0%)	마을기업 활성화 교육·홍보, 역량강화 프로그램 보급 지원
사회적 가치	3	1	4 (3.1%)	2 (0.4%)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교육 지원 및 시책 개발
사회적 경제	18	5	23 (17.8%)	185 (33.4%)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사회적경제 조직 구성원의 능력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사회적경제 기금	4	0	4 (3.1%)	3 (0.5%)	관련 규정 없음
사회적 기업	9	2	11 (8.5%)	65 (11.7%)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교육·홍보
소비자생활 협동조합	1	0	1 (0.8%)	0 (0.0%)	관련 규정 없음
소셜벤처	1	0	1 (0.8%)	1 (0.2%)	소셜벤처 육성·성장을 위한 교육 및 경영지원,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훈련 및 연구
자활기금	6	0	6 (4.7%)	157 (28.3%)	관련 규정 없음
자활사업	14	0	14 (10.9%)	14 (2.5%)	자활의욕 고취를 위한 교육훈련, 자활사례관리
중소기업 협동조합	16	0	16 (12.4%)	61 (11.0%)	협동조합 교육·홍보, 조합원 능력향상 교육훈련
학교 협동조합	1	8	9 (7.0%)	0 (0.0%)	학교협동조합의 인지도 제고, 저변 확대를 위한 홍보·교육, 컨설팅 제공
협동조합	9	1	10 (7.8%)	30 (5.4%)	교육·홍보 지원에 관한 사항(계획의 수립), 전문인력의 지원과 구성원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계	102	27	129 (100%)	554 (100%)	

## 3. 중간지원조직

〈표 3-10〉 사회적경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

광역 시도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 (인·지정 상담)	마을기업 지원	자활기업 지원	광역지원센터	창업 지원 (조직 수)	사회적 기업 성장 지원 (캠퍼스 수)
서울	(사)한국 마이크로크레 디트 신나는조합	서울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서울광역자 활센터	서울특별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11	2
부산	(사)사회적기업연구원	(사)사회적기업 연구원	부산광역자 활센터	부산광역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2	1
대구	(사)커뮤니티와경제	(사)커뮤니티와 경제	대구광역자 활센터	대구광역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1	1
인천	더좋은경제 사회적협 동조합	청운대학교 산 학협력단	인천광역자 활센터	인천광역시사회적 경제지원센터	1	1
광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사회적협동조합 살림	광주광역자 활센터	광주사회적경제지 원센터	2	1
대전	사회적경제연구원 사 회적협동조합(세종)	(사협)세상만사	대전광역자 활센터	-	1	1
울산	사회적협동조합 울산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재)울산경제진 흥원	울산광역자 활센터	-	1	1
세종	사회적경제연구원 사 회적협동조합(대전)	(사)한국협동조 합연구소	-	세종사회적경제공 동체센터	-	-
경기 도	사회적협동조합 사람 과세상	경기도사회적경 제 센터	경기광역자 활센터	경기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3	1
강원 도	(사)강원도사회적경제	강원도사회적경 제지원센터	강원광역자 활센터	강원도사회적경제 지원센터	1	1
충청 북도	(사)사람과경제	충청북도기업진 흥원	충북광역자 활센터	-	1	-
충청 남도	(사)충남사회적경제네트 워크	(사)충남사회경 제연대	충남광역자 활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 원센터	2	1
전라 북도	(사)전북사회적경제연 대회의	전라북도경제통 상진흥원	전북광역자 활센터	전북광역시사회적경 제지원센터	1	1
전라 남도	(사)전라남도농촌종합 지원센터	전남사회적경제 통합지원센터	전남광역자 활센터	전남사회적경제통 합지원센터	1	1

82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경상북도	(사)지역과소셜비즈	(사)지역과소셜비즈	경북광역자활센터	경상북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2	1
경상남도	모두의경제 사회적협동조합	경남대학교 마을공동체지원단	경남광역자활센터	경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1	1
제주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사)제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제주광역자활센터	제주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1	-
계(수)	16	17	16	14	32	15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suppRegion.do?m\\_cd=E01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nte/suppRegion.do?m_cd=E011) (검색일: 2022. 10. 22.)

지자체 단위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과 사업 추진은 지자체의 담당부서 외에도 각종 중간지원조직을 통해 많은 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의 네 가지 유형으로 공식화되어 있다. 이들 각 유형의 조직을 담당하는 정부부처는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로 나뉘어져 있고, 이에 따라 각 유형별 조직에 대한 정책 전달체계도 다르다. 중앙정부로부터 지방정부로 행정·정책·사회서비스 제공이 성공적으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중간지원조직을 통한 파트너십 형성과 네트워크적 결속이 요구된다(최인수·전대욱, 2020).

사회적경제 조직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으로는 네 가지 유형의 조직을 각각 지원할 수 있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표 3-10〉 참조). 현재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두 유형의 조직은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체계로 이루어지고 있다(16개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합지원조직<sup>55)</sup>). 그리고 마을기업(17개)과 자활기업(16개)은 별도의 중간지원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수평적 관계

55)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 두 지역은 사회적경제연구원(사회적협동조합)이 동시에 주관하고 있음.



망을 형성한다. 중앙정부 차원의 전달체계와는 별도로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광역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광역단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하고 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기능을 '1. 사회적경제 조직의 회계, 판로개척, 경영 등 지원', '2. 사회적경제 조직 및 시민교육·홍보 지원', '3. 사회적경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4. 사회적경제 조직 신규 모델 발굴·확산 및 실태 조사 지원', '5. 사회적경제 조직 간의 협력 지원 및 지역사회 자원 연계지원', '6. 각종 사회적경제와 공공분야 공모 사업의 정보·자료 제공', '7. 도지사로부터 위임·위탁을 받은 재산의 관리·대여·처분 업무', '8. 그 밖에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 등 8개 항목을 제시하고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지정과 창업, 성장이라는 경로적 특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종적·횡적 차원을 아우르는 지원도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을 지원하기 위한 별도의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32개)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기업 창업을 준비 중인 팀을 선발하고, 조직의 목적 수립에서부터 사업화에 이르기까지 창업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창업지원기관은 지역(권역)별 지원체계와 더불어 창업하는 분야에 따라 농어촌·산림, 환경, 의료복지, 사회서비스 등 특화된 영역별 지원체계를 갖추고 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15개)는 중간지원조직이라기보다는 창업한 사회적기업이 입주하여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인큐베이팅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지역별로 구축되어 있는 캠퍼스(소셜캠퍼스 온)에는 2022년 10월 현재 761개 기업이 입주해 있다.

한편 사회적기업의 인·지정을 위한 상담과 행정, 그리고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의 설립과 성장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통

합지원조직(이하 통합지원조직)은 광역지자체 단위로 조례에 의해 설치된 사회적경제지원센터(14개)와는 구별되는 조직이지만, 기능과 역할의 충돌을 우려할 수도 있다. 그러나 통합지원조직이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사회적기업진흥원의 국정 사업에 대한 전달체계 역할에 핵심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의 정책 환경 조성하고 협력, 기초지자체와의 연결 관계와 여건 마련 등에 집중한다. 통합지원조직이 사회적기업진흥원과 협력하며 정부의 사업 전달체계에 주안점이 있다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역지자체의 사업 전달체계로서 주안점이 있다.

〈표 3-11〉은 광주광역시의 통합지원조직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내용을 비교한 것이다. 광주광역시의 통합지원조직은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에 위탁되고 있다. 2011년에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은 해당 연도에 이미 광주광역시와 ‘사회적기업가 육성 업무협약’을 맺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는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광주·전남권역 운영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의 협약을 갱신하여 현재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사업 수행기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운영기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지원기관’ 등의 업무를 부여받고 있다. 또한 광주광역시로부터는 ‘마을기업지원사업 수행기관’으로, 그리고 기초지자체(광주광역시 서구청, 광산구청, 남구청, 북구청)들로부터 각각 다양한 사업을 수탁, 운영하고 있다.

한편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광주광역시 사회적경제활동 지원 조례」(2013. 8. 1.)에 근거하여 2016년 8월에 출범하였다. 지원센터는 독특하게 사회적경제 당사자인 광주사회적경제연합회, 광주사회적기업협의회, 협동조합협의회, 마을기업연합회, 자활기업협회 등이 연합하여 지원센터 거버넌스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

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판로개척과 교육·홍보지원, 사회적경제 동향 분석 및 조사연구, 신규 모델 발굴 및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두 조직의 상호보완적 관계 정립은 교육·인재육성 차원에서도 반드시, 그리고 정교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표 3-11>에서도 보듯이, 통합지원기관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각각의 조직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는 데 특화된 역할이 있다. 따라서 각각의 조직 유형별 창업과 성장 지원을 위한 전문성과 경영 및 교육훈련 컨설팅 역량을 갖추고, 이를 실행하는 데 주된 역할을 집중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사회적경제의 시장과 판로 개척을 위한 시민의 인식개선 및 당사자 조직의 네트워크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수 있다. 따라서 일반시민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일으키고, 학생과 일반주민, 청년, 중년층, 은퇴자 등 대상자 맞춤형 사회적경제 커리큘럼의 개발과 정례적 교육 실시 등은 광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로 조정할 수 있다.

또한 평생학습센터와 직업훈련기관, 대학 등과의 협력적 체계 정립과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당사자 조직들과의 교육훈련 및 인재육성에 관한 정책 수립·추진을 통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다. 통합지원기관뿐만 아니라 마을기업지원 및 자활기업지원, 그리고 창업지원 중간지원조직들과의 기능 조정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역할로 설정할 수 있다. 예컨대, 현재의 전달체계상에 있는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에 부족한 NPO, NGO 등 민간기구의 사회적경제 전환, 중소기업 및 대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 공공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 활성화 등의 정책과 사업 영역은 별도의 기구를 창설하기보다는 기존 중간지원조직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식이 오히려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표 3-11〉 광주광역시 통합지원센터와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업무 비교

광주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센터(살림)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팀명 (인원수)	업무 내용	팀명 (인원수)	업무 내용
사회적 기업팀 (6명)	인증 사회적기업, 광산구·북구·동남구·서구·광산구(예비) 사회적기업,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역특화사업, 자율경영공시, DB관리, 교육, 홍보	연구 교육팀 (2명)	- 사회적경제 정책 연구개발 - 사회적경제 교육 및 역량강화 - 사회적경제 DB 및 성과정리
협동 조합팀 (3명)	협동조합 자원연계, 경영공시 지원, 인가 및 상담지원, 사업비 회계, 신규 모델 발굴, DB관리, 교육, 홍보		
마을 기업팀 (3명)	마을기업 판로지원(상생 숲), 마을기업 유통현황관리·교육지원, 회계, 교육, 홍보	성장 지원팀 (6명)	- 제품 고도화 및 상품혁신 - 사회적경제 판로개척 - 사회적경제기업 - 성장단계별 지원
창업 육성팀 (2명)	창업팀 교육·사업비 관리 및 운영, 사후관리, 홍보, 소셜벤처 경연대회 관리	자원 연계팀 (3명)	- 지역자원 연계 - 사회공헌 및 사회적가치 실현 - 사회적경제 협의체 활성화
성장 지원팀 (3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총괄, 입주기업 멘토링·협업, 네트워크 프로그램 운영·입주 기업 현황관리, 시설관리 및 대관, 회계·정산, 홍보, 정보연계, 자산 및 비품관리		
기획 운영팀 (2명)	법인 회계사무행정 및 법인 사무국, 사회공헌활동지원사업, 홍보	기획 홍보팀 (3명)	- 센터 운영 및 관리 - 센터 시스템 구축 - 사회적경제 홍보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이 지역별로 활발하게 설치·운영되고 있다. 아래 〈표 3-12〉는 기초지자체 단위의 270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지역별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다만 이들 270개로 나타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기능은 조직 유형별, 특성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주광역시 서구에는 중간지원조직이 서구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광주서구지역자활센터, 광주

서구상무지역자활센터, 양동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농성 1동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농성동(농성골)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 5개이지만, 주관하는 지역이나 부문 영역은 조직별로 많은 차이를 보인다. 서구자활센터는 서구의 조건부수급자 및 차상위 등 저소득 주민을 대상으로 특화되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고 있다. 서구마을공동체센터는 「광주광역시 서구 마을 만들기 지원 조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이고 주민친화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제15조) 설치한 조직이다. 본연의 마을 만들기 사업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추가되는 형태이다. 이들 각각의 조직이 사회적경제와 연관을 갖고 관련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는 것은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현장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자생력을 갖고 지속가능한 수익활동을 창출하는 조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보다 전문적 경영지원과 비즈니스 컨설팅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현장단위에서 체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상 사업의 대상이나 시장 형성이 대체로 생활권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이는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가장 일선에 가깝기 때문이다.

한편 중간지원조직의 분포는 지역별로도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다. 평균값으로는 226개 기초지자체 수 대비, 시군구별 1개 이상의 중간지원조직이 있는 셈이다. 그러나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외한 7개 광역시의 중간지원조직은 175개로서, 8개 광역도 95개에 비해 2배 가까이 높다. 특히 서울(34.4%), 인천(7.8%) 및 경기(8.5%) 등 수도권 지역의 빈도가 137개(50.7%)로 절반이 넘는다. 관찰해야 할 범위가 넓은 광역도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수는 비수도권에서 경북(13.3%)을 제외하면 1.1%(충북, 충남), 1.9%(경남), 2.2%(강원), 3.0%(전남), 4.1%(전북)의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리고 이들 낮은 수치의 광역도를 구성하는 중간지원조직의 유형도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 위에서 보았듯이 지역 주민 전체를 대상으로 전문성

을 발휘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사실, 인구가 밀집해 있는 광역시의 경우라면, 일반 지역 주민이나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 은퇴자 등 관심 있는 층은 접근성 측면에서 기초지자체 차원의 중간지원조직보다는 광역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 더 편리할 수 있다. 그러나 광역단위보다는 기초단위의 접근성이 높은 광역 도의 경우, 사회적경제에 입문하거나 전문 교육훈련을 받을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표 3-12〉 기초지자체 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유형과 지역 분포

광역 시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자활센터	도시재생 지원센터	마을공동체 센터 등 기타	총계(비율)
서울	27	1	41	24	93(34.4%)
부산	1	0	14	1	16(5.9%)
대구	0	0	6	1	7(2.6%)
인천	7	0	12	2	21(7.8%)
광주	0	9	16	3	28(10.4%)
대전	0	5	0	4	9(3.3%)
울산	1	0	0	0	1(0.4%)
소계	36	15	89	35	175(64.8%)
경기	21	0	0	2	23(8.5%)
강원	3	0	0	3	6(2.2%)
충북	0	1	1	1	3(1.1%)
충남	0	0	1	2	3(1.1%)
전북	2	0	3	6	11(4.1%)
전남	5	0	0	3	8(3.0%)
경북	1	20	15	0	36(13.3%)
경남	5	0	0	0	5(1.9%)
소계	37	21	20	17	95(35.2%)
<b>계</b>	<b>73</b>	<b>36</b>	<b>109</b>	<b>52</b>	<b>270(100.0%)</b>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2022. 2. 2. 기준). 전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통합.

#### 4.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황과 지역 분포

2022년 9월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아래 <표 3-13>의 3개 유형 28,035개에 마을기업 1,697개<sup>56)</sup>를 더해 29,732개이다. 사회적기업이 3,436개(11.6%), 자활기업 1,214개(4.1%), 협동조합 23,385개(78.7%)이며, 마을기업은 5.7%를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중복 등록이 가능한 체계이다. 예컨대, 사회적기업 3,436개의 13.5%인 465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3.4%인 120개는 자활기업이기도 하다. 또한 자활기업 1,214개를 기준으로 9.9%(120개)가 사회적기업이며, 동시에 5.7%인 70개는 협동조합의 형태를 띠고 있다. 그리고 자활기업이면서 협동조합의 형태를 띤 사회적기업도 사회적기업의 0.7%인 25개에 이른다. 상당한 조직이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의 유형을 혼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강화될 수도 있다. 동일한 사회적경제 조직이라 하더라도 유형별 조직 메커니즘이 다르고 비즈니스 모델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고려할 때, 교육훈련 및 경영컨설팅 과정에서도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도 특정 유형에 특화된 교육훈련 기관뿐만 아니라, 이들 복합 유형을 아우르는 교육 및 컨설팅 커리큘럼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56)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https://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2021년 12월 기준.

〈표 3-13〉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별 현황(마을기업 제외)

분류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협동조합	계
개별 유형	2,826	999	22,820	26,645
사회적기업+자활기업 유형	120(3.4%)	120(9.9%)	-	240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유형	465(13.5%)	-	470(2.0%)	935
자활기업+협동조합 유형	-	70(5.7%)	70(0.3%)	140
사회적기업+자활기업+협동조합 유형	25(0.7%)	25(2.1%)	25(0.1%)	75
합계	3,436	1,214	23,385	28,035

주) 2022년 9월 28일 기준, 동일 주소이면서 명칭이 동일한 경우를 중복 유형으로 계산함.

사회적경제 조직 유형에서는 협동조합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사회적협동조합만 하더라도 3,946개로 사회적기업 수 3,436개보다 많다. 일반협동조합에서 기타 업종(19.1%)을 제외하면 도매 및 소매업의 비중이 가장 높은 4,133건(17.8%)이며, 교육서비스업 2,663건(11.5%),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18건(8.2%), 농업·어업 및 임업 1,803건(7.8%) 등의 순이다. 이와는 달리 사회적협동조합에서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1,508건(38.21%)과 교육서비스업(855건, 21.7%) 두 업종이 59.91%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이들 두 영역은 협동조합 전체 대비 각각 66.9%, 24.3%를 차지할 정도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 이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 차원에서의 적극적 해석이 요구된다. 이들 업종은 특성상 비교역적 부문(non-tradable sector)<sup>57)</sup>에 해당하는 직업군이 포진하고 있어, 지역사회의 경제 생태계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이다. 이른바 사회

57) 한정된 지역의 주민 욕구를 해결하는 데만 통용되고, 타 지역이나 국가와의 경쟁에서는 분리되어 있는 직업군. 예컨대 택시기사, 미용사, 가정부, 의사 등을 비교역 부문으로, 그렇지 않은 직업군을 교역 부문(tradable sector)으로 분류함(엔리코 모레티, 2014).



서비스 부문<sup>58)</sup>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들 업종의 활성화는 지역의 새로운 활력 기제로서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 특히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고민하는 지자체로서는 비용편익이나 투명성, 그리고 공공성 확보 측면에서 이들 업종의 협동조합 진입과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이유가 있다. 따라서 지자체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이나 교육훈련 및 네트워크 시스템을 통해 지역의 협동조합 성장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표 3-14〉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업종별 분포

구분	일반협동조합(A)		사회적협동조합(B)		B/(A+B) (%)
	조합 수	비중(%)	조합 수	비중(%)	
도매 및 소매업	4,133	17.8	67	1.7	1.6
교육서비스업	2,663	11.5	855	21.7	24.3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747	3.2	1,508	38.2	66.9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918	8.2	273	6.9	12.5
농업·어업 및 임업	1,803	7.8	221	5.6	10.9
제조업	1,736	7.5	121	3.1	6.5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1,171	5.0	123	3.1	9.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687	3.0	360	9.1	34.4
기타	4,452	19.1	418	10.6	8.6
합계	19,310	83.0	3,946	100.0	17.0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58) 보건복지부는 광의의 사회서비스를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 문화, 주거, 고용, 환경 등을 폭넓게 포함'하고 있음. [www.mohw.go.kr/react/index.jsp](http://www.mohw.go.kr/react/index.jsp)(보건복지부 홈페이지).

협동조합 대비 사회적협동조합의 두 번째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에는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다. 아래 <표 3-15>에서 보듯이, 2022년 11월 현재 134건은 위 <표 3-14>의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분야 사회적협동조합 360건의 37.2%를 차지한다. 마을 살리기, 주거지 지원 등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역시 지역사회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된다. 이렇게 보면, 사회적협동조합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더불어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과 예술·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지역사회 단위의 적극적인 성장 정책이 요구되는 영역이라 할 것이다.

**<표 3-15>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의 유형과 현황(2022. 11.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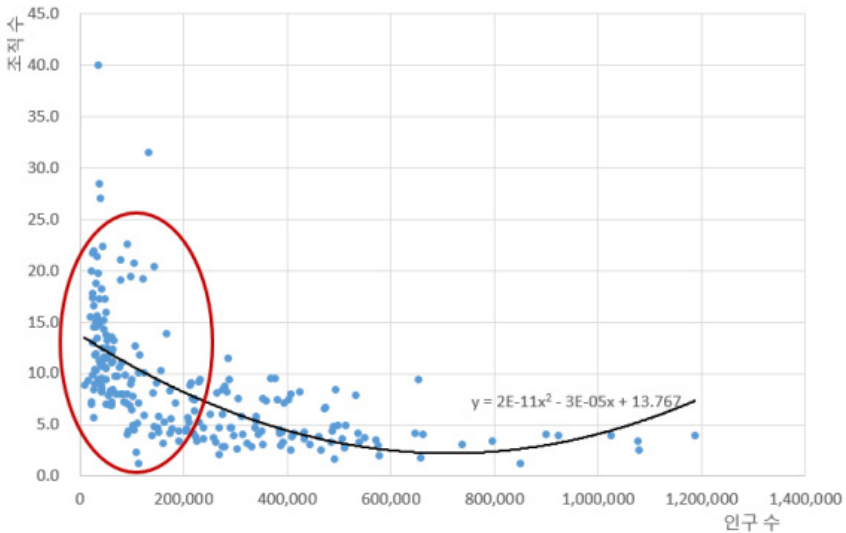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 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 기반형	기타 (인정사업, 예비사업 등)	계
25	31	52	17	1	8	134

출처: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www.city.go.kr/portal/business/vilmgrcoop/center/list.do](http://www.city.go.kr/portal/business/vilmgrcoop/center/list.do))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정책 방향을 추론할 수 있다. 아래 [그림 3-1]에서 보듯이, 기초지자체별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분포에서는 지자체별 인구수가 적고, 밀도가 낮은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8개 광역시에 속한 기초지자체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그림 3-2] 참조)와 9개 광역 도에 속한 기초지자체에서의 사회적경제 조직 분포([그림 3-3] 참조)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광역시 지역은 전국적 분포 양상과는 달리, 인구 규모가 중위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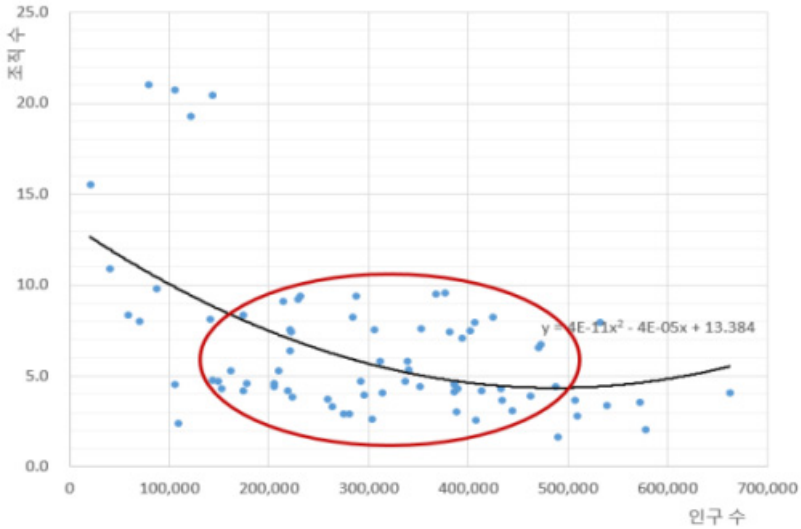
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 예컨대, 인구 20만~40만 명인 서울특별시의 용산구·성동구·서대문구·구로구·금천구·등포구 등은 조직 수가 인구 1만 명당 7.1~9.5개를 보이고, 같은 조직 수 밴드에는 광주광역시의 서구, 대전광역시의 중구·유성구, 울산광역시의 울주구 등이 확인된다. 그러나 광역도는 오히려 전국 분포 양상보다 밀집도가 더욱 강하게 나타난다.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욱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1]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전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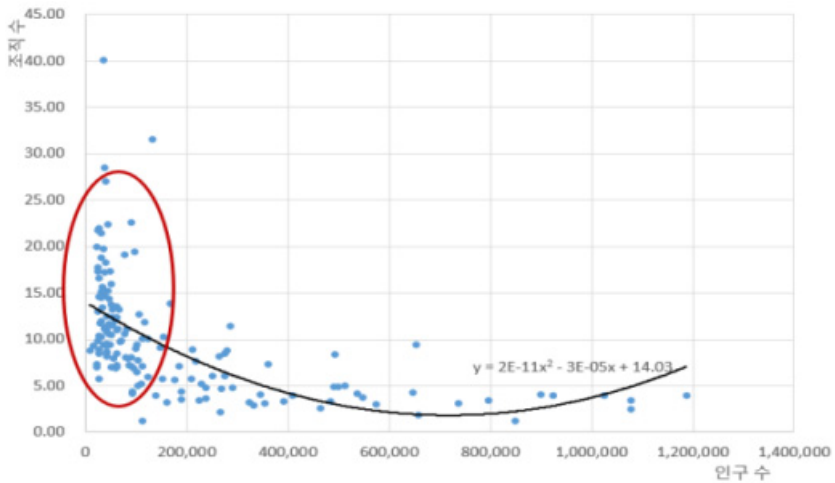
주) 가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수이며, 세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 1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인.

[그림 3-2]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8개 광역시)



주) 가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수이며, 세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 1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임.

[그림 3-3] 인구 대비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별 분포(9개 광역도)



주) 가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수이며, 세로축은 기초지자체의 인구 1만 명당 사회적기업 수임.

〈표 3-16〉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포를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10분위로 구분하였다. 재정자립도는 수도권에 소재하는 기초지자체에서 대체로 높게 나타나며, 비수도권의 광역도에 소재하면서 행정구역 단위가 군인 기초지자체에서 낮게 나타난다. 재정자립도 양상은 인구 규모와도 거의 비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수가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10분위로서 인구 1만 명당 24.4개를 보이며, 9분위(18.2개), 8분위(16.1개)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으로는 3분위 11.8개, 1분위 8.9개의 순이다. 예컨대, 재정자립도가 10분위에 속하는 전남 보성군의 경우 인구 1만 명당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는 105.3개에 이르며, 같은 10분위에 속하는 전남 함평군은 인구 1만 명당 72.0개, 전남 순창군은 52.0개를 기록하고 있다. 가장 숫자가 많은 협동조합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역사가 짧은 사회적기업에서도 분포가 높은 지역은 9분위(1.24개), 8분위(1.08개), 7분위(1.01개), 10분위(0.92개)의 순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 분포와 유사한 양상을 보이거나, 분위별 분포 차이는 상대적으로 덜하다. 요약하면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이, 광역시 단위보다는 광역도 단위가, 그리고 기초지자체 차원에서는 시와 구 단위보다는 군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수요가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16〉 기초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른 사회적경제 조직 전국 분포

구분	재정 자립도 (%)	총 인구수 (천 명)	사회적 기업 수 (개)	사회적경제 조직 수(개)	행정구역 단위			소재지	
					시	군	구	수도권	비수도권
1분위	44.7	452	0.78	8.9	14	0	9	21	2
2분위	30.8	419	0.9	3.7	15	2	6	14	9
3분위	25.5	279	0.87	11.8	12	1	10	9	14
4분위	20.3	309	0.66	7.5	8	2	13	8	15
5분위	17.1	291	0.62	7.8	7	3	13	6	17
6분위	14.3	166	0.87	7.9	10	6	7	4	19
7분위	12.3	125	1.01	7.9	6	11	5	2	20
8분위	10.6	77	1.08	16.1	2	16	4	0	22
9분위	8.6	48	1.24	18.2	4	18	0	1	21
10분위	7.1	37	0.92	24.4	0	22	0	0	22

주) ·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를 제외한 226개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순위에 따라 10분위로 분류함.

- 1~6분위에는 기초지자체 23개씩, 그리고 7~10분위에는 기초지자체 22개씩 할당함.
- 사회적기업수와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인구 1만 명당 개수임.
- 사회적경제 조직 수(개) = 사회적기업 수 + 마을기업 수 + 자활기업 수 + 협동조합 수.

## 5.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 입지 영향 요인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일반 기업으로서는 기업의 영리적 목적을 가장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지역을 입지 조건으로 우선 고려한다. 그러나 사회적 임팩트 혹은 사회공헌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은, 지역 선정에 있어서도 이윤 극대화보다는 사회적 임팩트의 관점에서 입지 조건을 검토하게 된다. 조직의 비전이나 미션에 따라 취약계층이 있는 곳 혹은 사회

적 가치 실현이 용이한 지역이 우선 고려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한편으로는 일반기업의 유치를 통해 경제 생태계를 강화하고 지역을 살려야 한다는 유인이 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 지역 공동화의 극복, 시장실패의 보완 등 측면에서는 사회적경제 조직 유치에 대한 유인도 동시에 존재한다. 광역지자체 평균 7.6개, 기초지자체 평균 2.5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운영되고 있는 점만 보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지 결정은 일차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결정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과 이전 등 입지 선정에 우호적인 지역 분위기도 작용한다는 의미이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비수도권이나 군 단위 지역 등 인구 소멸의 위기 징후가 있는 지역일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점은 보다 다각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단위(unit)로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특히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한다.

통제변수로 지자체의 정책의지, 지자체의 예산규모, 인구밀도, 정주환경, 관내 중소기업 및 중·대기업 분포도 등을 살펴보았다.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의지 여부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지 선정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잘 정비되어 있고, 지자체장의 정책 이해도와 의지가 높은 지자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이 창업하거나 지역 이전이 활발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중장기종합계획 혹은 단기추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는 점은 지자체장의 정책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된다. 현재 226개 기초지자체 중 관련 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는 곳은 전체의 35.0%인 79개 지자체이다. 이들 계획이 수립·운영되고 있는

기초지자체에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 더 많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포를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모든 지자체가 채택하고 있는 조례보다는 관련 계획의 수립·운영 여부를 더미 변수로 활용하였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나 인구 규모도 입지 환경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세출 규모가 크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은 일반적인 기업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은 일반적인 기업의 논리와는 차이가 있다. 일반 기업이 꺼리는 저발전 지역이나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낮은 인구밀도의 지역이 사회적 임팩트 측면이나 사회적경제의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통합재정 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 홈페이지<sup>59)</sup>에서 1인당 세출 규모를, 그리고 통계청 홈페이지<sup>60)</sup>에서 기초지자체별 인구밀도를 파악하여 활용하였다. 1인당 세출 규모가 작을수록, 그리고 인구밀도가 낮을수록 사회적경제 조직의 분포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가정하였다.

셋째, 입지 조건과 관련하여 지역의 정주 환경은 인구 소멸의 일차적 원인으로 논의될 정도로 중요한 사항이다. 일자리 부족에 더해, 열악한 교육·복지·문화 시설 등 생활환경적 요소는 인구가 타지로 빠져나가는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낮은 정주여건에 처해진 주민으로서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정주환경의 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로 삼을 여지가 있다. 입지 선정을 모색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도 시장실패가 이루어지는 이들 지역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정주여건을 대표하는 지표로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sup>61)</sup>에서 ‘시군구별 마을단위 기초생활인프라

59)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검색일: 2022. 9. 23.).

60) <https://kosis.kr/index/index.do> (검색일: 2022. 9. 23.).

61) <https://www.codil.or.kr/codil.do> (검색일: 2022. 9. 23.).



에 대한 평균거리' 통계 중 병의원까지의 거리를 활용하였다. 마을에서 병의원까지 거리가 멀수록 정주여건이 떨어진다고 판단하였다.

넷째, 해당 지역에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대기업 사업장 등의 집중도가 높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지 여건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가정할 수 있다. 일반기업의 집중으로 인해 경제적 활력이 확보되면, 지방자치단체의 관심이 이들 일반기업의 성장과 생태계 형성에 더욱 큰 관심을 두게 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도 사업의 기회가 일반기업 중심의 경제생태계로부터 파생되는 '실패'의 영역에 한정될 여지가 크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상대적 낮은 관심 속에서 조직의 관심이 생존 가능성에 집중되어 부침을 겪을 가능성도 크다. 본 연구는 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수를 대리(proxy)하는 지표로 전국산업단지(한국산업단지공단, 2022) 지역별 분포를, 중견기업 및 대기업 사업장을 대리하는 지표로 300개 이상 사업체 수를 활용하였다.

이제, 이들 통제변수에 더해 관내 대학 수와 직업훈련기관 수 등을 살펴 보았다. 입지 선정에서 일반기업과 사회적경제 조직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은,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과 같이 기업이나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고 직무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관의 근접성일 수 있다. 이들 교육과 훈련 및 컨설팅에 대한 요구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군구에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환경은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는 긍정적 영향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sup>62)</sup>에서 일반대, 전문대, 교육대, 산업대를 모두 더한 수를 지역별로 나누어 대학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sup>63)</sup>에서 추출한 평생

62) <https://kess.kedi.re.kr/index> (검색일: 2022. 8. 13.).

교육원, 학원, 직업전문학교, 인력개발센터 등을 포함한 직업훈련기관 수를 지표로 활용하였다. 그리고 기초지방자치단체 226개를 단위로 하여 분석하였다.

〈표 3-17〉 변수 설명 및 기초 통계량

변수	Mean	Std. Dev.	min.	max.
사회적경제 조직 수	127.9	98.6	14	618
협동조합 수	100.9	84.1	10	517
사회적기업 수	14.7	13.7	0	82
마을기업 수	7.2	4.0	0	21
자활기업 수	5.1	4.3	0	27
사회적경제 계획 수립	0.3	0.5	0	1
주민 1명당 세출(천원)	6,631.4	4,814.2	1,529	18,873
인구밀도(명/km <sup>2</sup> )	3,930.5	6,147.0	19.3	26,322.7
병의원 접근성(km)	2.42	1.86	0.17	7.0
관내 대학 수	1.5	1.8	0	10
관내 산업단지 수	5.4	6.3	0	34
300인 이상 사업체 수	15.2	27.7	0	227
직업훈련기관 수	16.2	20.7	0	103

변수(설명변수)들 간의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 모델별로 분산팽창요인(variance inflation factor)을 구하였다. 계산 결과, 각각의 모델이 갖는 공차한계는 0.456~0.926이었고, VIF는 각각 1.54~1.68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VIF 값이 10을 넘지 않는다면,

63) <https://www.ksqa.or.kr/?pid=H>. 검색일: 11. 12.

대체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해소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명변수들 간 다중공선성은 유의할 정도는 아니다.

〈표 3-18〉 사회적경제 조직 활성화 요인 회귀분석(OLS) 결과

변수	사회적경제 조직 수	협동조합 수	사회적 기업 수	마을기업 수	자활기업 수
사회적경제 계획 수립	19.520*** (6.937)	17.271** (5.857)	1.911 (1.280)	0.990*** (0.562)	-0.653 (0.561)
주민 1명당 세출 (백만 원)	-2.064 (1.276)	-1.253 (1.077)	-0.533** (0.236)	-0.284*** (0.103)	0.005 (0.103)
인구 밀도(명/km <sup>2</sup> )	-1.078 (0.752)	-0.744 (0.635)	-0.160 (0.139)	-0.208*** (0.061)	0.034 (0.061)
병의원 접근성(km)	1.931 (3.459)	1.028 (2.921)	0.390 (0.639)	0.589* (0.280)	-0.076 (0.280)
관내 대학 수	11.768*** (2.147)	9.607*** (1.812)	1.498** (0.396)	0.190 (0.174)	0.472*** (0.174)
직업훈련기관 수	3.153*** (0.240)	2.595*** (0.203)	0.414*** (0.044)	0.034* (0.019)	0.110*** (0.019)
관내 산업단지 수	-0.009 (0.576)	-0.155 (0.486)	0.126 (0.106)	-0.012 (0.777)	0.032 (0.047)
300인 이상 사업체 수	0.297** (0.240)	0.411*** (0.127)	-0.026 (0.028)	-0.035*** (0.012)	-0.052*** (0.012)
Constant	61.440*** (11.276)	42.022*** (9.513)	8.046*** (2.082)	7.920*** (0.913)	3.450*** (0.913)
Observations	225	225	225	225	225
R <sup>2</sup> (adj.)	0.791	0.795	0.633	0.166	0.297

주: Standard errors in parentheses, \*\*\* p<0.01, \*\* p<0.05, \* p<0.1

〈표 3-18〉은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각각의 통제변수는 사회적경제 조직의 유형에 따라 공통적인 혹은 차별적인 결과가 나타나고 있다.

먼저 기초지자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계획 수립·추진 여부는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에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은 관련 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지자체의 경우, 그렇지 않은 지자체에 비해 각각 평균 17.27개, 0.99개 많았다. 반면에 사회적기업과 자활기업의 경우에는 통계적 유의미성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 전체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난다.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협동조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다만 회귀분석의 결과를 인과관계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협동조합의 역사와 8개 개별법에 의한 협동조합 분포까지 고려한다면, 협동조합의 분포가 많은 지역의 지자체장은 불가피하게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에 적극적일 수밖에 없는 가능성도 열려 있기 때문이다.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세출이나 인구 규모 변수는 부(否)의 방향을 보이고 있다. 자활기업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부(否)의 방향이 나타나지만,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인다. 예컨대, 주민 1명당 세출이 100만 원 높을수록 해당 지역에는 그렇지 않은 지역에 비해 사회적기업 수는 0.53개 적게, 그리고 마을기업은 0.28개 적게 분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협동조합과는 달리,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은 그 역사가 짧고 비즈니스적 판단이 상대적으로 강하다는 맥락에서 이해를 할 수 있다.

셋째, 정주여건을 대표하는 지표로 활용한 ‘시군구별 마을단위 기초생활 인프라에 대한 평균거리’는 협동조합 수와 사회적기업 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않았다. 다만 방향성은 자활기업을 제외하고는 모두 정(正)의 방향성을 보인다. 마을기업 수에는 정(正)의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 $p < 0.1$ )하게 나타났다. 병의원 접근성 등 기반 인프라와 관련된 문제로 야기되는 정주여건은

사회적경제 조직이 사업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 정도의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넷째, 중소기업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단지가 지역 내에 활성화되어 있다는 점은 사회적기업의 입지 선정에 거의 영향을 못 미치거나, 부(否)의 영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보여 준다. 비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협동조합과 마을기업의 경우 부(否)의 방향을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앞서 가정하였듯이, 지자체가 산업단지 경제생태계 이슈에 집중하거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지가 좁아진 탓일 수 있다. 반면에 300인 이상 사업체 수 변수에는 엇갈린 영향이 나타난다. 협동조합 수 측면에서는 정(正)의 방향이 그리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 수에는 부(否)의 방향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협동조합이 정(正)의 방향인 것은 협동조합이 활성화된 지역이 전통적이고 주민문화가 활성화되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사업장이 선호하는 지역과 중복이 되어서일 수도 있다. 그리고 관내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사업장 유치가 협동조합 활성화에 새로운 기회로 작용하고 있을 가능성도 존재한다. 반면에 마을기업이나 자활기업의 경우, 이들 기업이 활성화되는 지역은 중견기업이나 대기업 사업장 유치가 어려운 사각지대로서, 점차 축소되는 지역사회를 되살리기 위해 마을주민과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자구적 차원에서의 사회적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파악하고자 하는 관내 교육훈련기관과의 근접성 여부와 관련하여,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결과로 이어짐을 볼 수 있다.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모든 유형이 관내 대학 수와 직업훈련기관 수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통계적으로는 대부분  $p > 0.01$  이상의 견고한 관계를 보여 주고 있다. 관내에 대학이나 직업훈련기

관이 있는 경우는 관내 대학이 없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거꾸로, 사회적경제 조직이 관내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이 소재하는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거나, 이들 대학 및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spill-over)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비록 이들 사건 간의 정확한 인과관계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겠으나,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역 정주여건이나 관내 경제활성화 정도, 지자체의 세출 규모 등은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의지와 더불어,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근접성 등은 입지에 핵심적인 영향을 주거나 관계가 있는 요인으로 파악된다.

### 제3절 민간 부문 인재양성 현황과 과제

#### 1. 비영리·민간 부문<sup>64</sup>과 사회적경제

제2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주요 원천 중에는 비영리·민간 부문이 있다.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가치 측면이나 인력 공급 측면에서 이들 부문의 역할은 작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 부문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는 사회적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조직경영기술, 리더십·기업가정신 등의 내용이 적지 않게 포함되고 있다. 조직 구성이나 인력 특성에서 비영리·민간 부문과 사회적경제 부문 간에는

64) 비영리·민간 부문은 비영리기구인 NPO(Non-Profit Organization)와 비정부기구인 NGO(Non-Governmental Organization)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용함.

깊은 유사성과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전통적인 비영리·민간단체에 요구되는 역량은 일반적으로 전략적 비전 및 계획, 리더십, 조직관리, 인적자원, 자원개발, 재무관리, 구성원 관계형성과 접근, 프로그램 역량 등과 함께 최근에 주목받는 디지털 역량이 꼽히고 있다(The Nature Conservancy, 2001). 또한 비영리·민간기구의 '사업운영'을 구성하는 결정요인으로는 '사업기획(0.369)'과 '사업실행(0.287)'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사업평가(0.174)'와 '홍보마케팅(0.170)' 등도 중요하게 지적되고 있다(양광식 외, 2021). 이는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이라 할 문제해결능력(정보관리능력, 기회창출능력, 전략적 대안 도출력), 조직경영능력(경영전문성, 분야전문성, 직무설계능력, 맞춤형 인사관리능력, 리더십), 대외역량(자본조달능력, 협상력, 고객관리능력, 네트워킹 능력) 등과 비교하여 큰 차이를 발견하기 어렵다.

Vaceková(2016)는 전통적인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기업 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제시하고 있다(〈표 3-19〉 참조). 전통적인 비영리조직이 '사회적혜택의 제공'에 목적을 두고 있다면, 사회적경제 조직은 유사하게 '지역사회 및 시민 그룹에 봉사'하는 것에 목적을 둔다. 재원조달의 방식, 수익 재분배 방식, 기업가적 정신에 대한 비중<sup>65)</sup> 등에서 일부 차이가 있으나, 두 조직이 모두 다양한 유형의 조직 형태를 띠고 있다는 점, 자원봉사자 활용이 열려 있다는 점, 참여적 자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시민주도성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 등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다.

두 조직 간의 공통점과 유사성이 발현되는 사례가 비영리 스타트업에서 발견된다. 비영리 스타트업은 새로운 기술을 활용하며 유연하고 스피디한

65) 기업가적 정신을 전통적인 비영리의 특성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다를 수 있음.  
Vaceková(2016)는 전통적인 비영리에는 기업가정신의 중요성이 높지 않다고 보는 입장임.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등 일반적인 스타트업의 특성을 지니면서, 동시에 공익적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비영리적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기부금 수입 외에 별도의 수익모델을 추구하고, 수익금은 다시 공익활동에 재투입하여 사회적 가치를 창출한다. 비영리 스타트업의 이 같은 특성은 사회적 경제의 한 유형인 소셜벤처로 전환되거나,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 등의 인증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으로도 진입할 수 있게 한다.



〈표 3-19〉 사회적경제와 비영리 섹터의 비교

섹터 속성	사회적경제 / 사회적기업	비정부/비영리 섹터
목적 (Goal)	사회적 사명의 이행 - 지역 사회 또는 특정 시민 그룹에 봉사	조직의 사명 달성 - 사회적 혜택 제공
유형/종류 (Institutions)	공익단체, 협동조합,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등 다양한 형태의 조직	공식화, 제도화된 구조를 가지고 법률에 의해 설립된 법적 형태, 일반적으로 협회 및 공익단체, 재단 및 비영리기금
자율성 (Autonomy)	일반적으로 자율적인 사업계획을 기반으로 한 그룹의 사람들이 만들고 관리함	공공행정의 일부가 아님. 국가로부터 제도적으로 분리되어 정치적 독립성을 지님
비분배 제약 (Non-distribution constraint)	주주 또는 직원에 대한 제한된 이익 분배 및 기업의 사회적 목표에 이익(또는 이익의 상당 부분)을 재투자할 의무	소유자 또는 경영자들이 공유할 이익을 창출하기 위해 설립되지 않은 경우에 모든 이익은 조직에 완전히 귀속되고 해당 법령에 따라 사용됨
자원봉사 활용 (Voluntarism)	자원 봉사자와 유급 직원의 조합; 최저 수준의 유급 노동	자발적인 활동 참여; 높은 비율의 자원봉사 활동
시민주도성 (Civic initiatives)	일반적으로 공통의 목표나 지역사회의 필요를 공유하는 시민이나 집단의 구성원을 포함하는 집단적 역동성의 결과	상호 또는 일반적으로 유용한 목적·이익을 달성하기 위해 시민에 의해 설립
기업가적/사업 활동 (Entrepreneurial/business activity)	사업(business)이 주요 활동임. 재화와 서비스가 생산되고, 즉 시장에 진입하여 판매를 위해 생산물을 제공함	재분배 메커니즘에 따라 자금을 지원함; 기업가정신은 부수적인 활동으로 간주됨
재원조달 (Funding)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회원과 직원의 성과와 적절한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에 달려 있음. 재원조달 활동은 또한 공공 및 민간 출처의 재정 지원 메커니즘을 통해 자금을 지원받음. 다중 소스 자금이 사용됨	다중 소스 자금 조달이 원칙임. 이는 공공(정부), 개인(가계), 보조금, 회비, 자체 자금 조달 수입 및 비즈니스 활동의 조합일 수 있음
경영관리 (Management)	참여적인 거버넌스, 의사결정에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포함됨	자치; 그들은 확립된 조직 구조를 통해 스스로를 관리함. 본체(main body)는 일반적으로 총회

출처: Gabriela Vaceková(2016).

각종 법인이나 비영리 민간단체 등 비영리조직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을 설립할 수 있다. 그리고 비영리조직 자체적으로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으로도 활동할 수 있다. 사회적기업은 영리법인격을 취할 수도 있으나, 비영리법인이거나 「민법」상 법인이어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회적기업의 조직 유형으로서 주식회사형과 협동조합형 외에도 NGO형도 가능하다(김종호, 2014).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의 자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외에 ‘비영리조직’이 한 형태임을 알 수 있다.

〈표 3-20〉 사회적경제 기업의 조직적·법적 형태들

분류	주식회사	협동조합	비영리조직	사회적기업
설립 목적	투자자 이윤 추구	조합원의 복리와 권익 추구	공익 추구	공익 추구
출자자	주주	조합원	-	다중 이해관계자
통제	주주	조합원	이해관계자	위임자
소유자의 자격	제한 없음	제한 있음	제한 있음	제한 있음
소유자의 권한	통제권, 잔여청구권	통제권, 잔여청구권	통제권	통제권
자원 동원	출자금, 내부 유보금	출자금, 내부 유보금	후원금, 신탁, 내부 유보, 회비	출자금, 내부 유보, 정부 보조, 후원금
수익 배분	주주 배당, 사내 유보	조합원 배당, 내부 유보	공적 기부, 내부 유보	공적 기부, 내부 유보, 제한된 이윤 배분
사업 수행	재화와 서비스	재화 중심	서비스 중심	재화와 서비스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수정.

이는 전통적인 비영리·민간 조직이 4개의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인증을 받아 사회적기업이나 마을기업, 자활기업, 혹은 (사회적)협동조합으로 편입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비영리조직에서 단체의 목적사업이나 수익사업의 일부를 사회적경제로 독립시키거나, 별도의 사회적경제 조직을 설립·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은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3,436개 소가 활동 중인데, 이 중 20.6%인 709개소가 비영리조직이다. 또한 이 중에는 「민법」상의 법인이 313개로 가장 많고, 그다음이 사회적협동조합 253개의 순이다.

〈표 3-21〉 사회적기업 조직 형태별 현황(2022년 9월 기준)

비영리 709개소 (20.6%)					영리 2,727개소 (79.4%)			
「민법」상 법인	비영리 민간 단체	사회 복지 법인	사회적 협동 조합	기타 법인 및 단체	「상법」상 회사	농(어)업 회사 법인	영농(어) 조합법 인	협동 조합
313 (9.1%)	66 (1.9%)	75 (2.2%)	253 (7.4%)	2 (0.1%)	2,145 (62.4%)	163 (4.7%)	116 (3.4%)	303 (8.8%)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https://www.socialenterprise.or.kr>).

국내 1호 인증 사회적기업은 ‘다솜이재단’이다. 다솜이재단은 2004년 교보생명과 실업극복재단(현. 함께일하는재단)이 함께 설립한 재단으로, ‘사회적 미션’이 뚜렷한 비영리단체와 ‘비즈니스’ 역량이 있는 기업이 협력한 ‘기업 연계형 사회적 일자리 사업’ 사례이다. 이와 같이 사업 초창기에 비영리 단체의 사회적경제 진출은 활발하였고, 상당수가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았다. 2007년 고용노동부에서 첫 인증을 받은 사회적기업은 51개였는데, 이 중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비영리조직이 24개로 47.1%에 달했다.<sup>66)</sup>

## 2. 비영리·민간 부문 현황과 사회적경제 교육

### 가. 비영리·민간 부문 현황

한국의 비영리조직은 법인격 유무, 설립 근거법, 그리고 세법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 비영리법인은 「민법」, 「사립학교법」, 「사회복지사업법」, 「의료법」,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이 가능하며, 비법인으로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의거하여 설립이 가능하다. 이 밖에도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지정기부금단체 등이 법령에 따라 비영리조직에 적용되는 구분이다.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분류체계나 명칭은 일관된 분류체계가 없이 개별 법령이나 정책에 따라서 다르다.

---

66) 조선일보(2019. 5. 29.). <더 나은 미래>,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 “우리 ‘영리’해도 될까?”.

〈표 3-22〉 우리나라의 비영리조직 유형

단체 종류		설립 요건과 자격
임의단체 (비법인)	개인 취급 단체	법인 취급 단체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체, 「소득세법」 적용
	법인 취급 단체	법인격은 없으나 수익 비분배, 「법인세법」 적용, 고유번호증과 기부금 모집 가능, 기부금 영수증 불가
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근거 단체, 공익활동 실적 필수, 기부금 대상 민간단체 신청 가능
비영리 법인 (민법)	사단법인	학술, 종교, 자선 등 비영리사업 목적 정관, 법원에 설립 등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
	재단법인	일정 목적의 재산을 실체로 이루는 법인, 비영리사업 목적 정관, 법원에 설립 등기, 지정기부금단체 등록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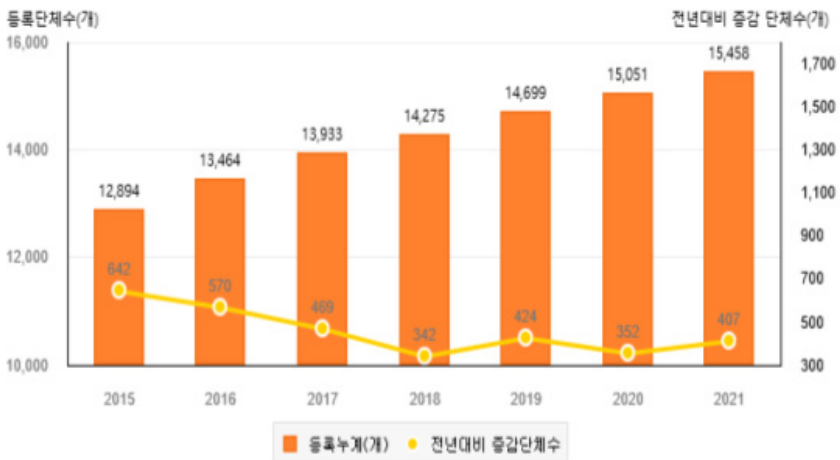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NPO지원센터 홈페이지(<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84>) 수정.

2021년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는 15,458개이며, 중앙행정기관에는 1,733개(11.2%), 시도에는 1만 3,725개(88.8%)가 등록되어 있다. 등록된 단체의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중앙행정기관에는 행정안전부(279개), 보건복지부(202개), 통일부(195개)의 순으로 등록되어 있고, 시도별로는 경기도(2,384개), 서울특별시(2,356개), 전북(1,038개) 등의 순으로 나타난다. 이와는 별도로 기획재정부에서는 기부금단체를 고시하며, 2021년 2/4분기 기준으로 총 5,930개가 등록되어 있다.<sup>67)</sup> 기부금단체는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상에 등록된 단체만을 집계한 것으로, 〈표 3-22〉의 임의단체나 「민법」상 법인 중에도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지 않은 법인은 제외된다. 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중에도 기부금단체로 등록하지 않

67) 2021년부터는 고시되는 제목이 「기부금단체 등의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에서 「공익법인 지정 변경에 관한 고시」로 변경됨, 따라서 위 기부금단체란 「법인세법」에 의거한 ‘공익법인’이 됨.

은 단체는 제외되므로 통계에 나타난 비영리단체의 수는 과소평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림 3-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영리민간단체의 수는 해마다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림 3-4]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수 변화



출처: 행정안전부.

#### 나. 비영리·민간 부문 교육 현황

비영리·민간 부문 종사자는 주무부처별 관리감독 체계와 간헐적인 조사 발표 및 방식으로 인해 종합적인 통계를 내기는 어렵다. 2017년, 《조선일보》〈더 나은미래〉<sup>68)</sup>는 비영리·민간 부문의 법인이 6만 3,431개<sup>69)</sup>, 종사자는 71만 5,328명<sup>70)</sup>으로 추산한 바가 있다. 이들 비영리·민간 부문 종사자들은

68) 《조선일보》〈더 나은미래〉,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만 약 63만 명 달해(2017. 8. 29.).

69) 공익법인(3만 4,743개), 비영리민간단체(1만 3,741개), 협동조합(1만 640개), 사회적기업(1,741개), 마을기업(1,377개), 자활기업(1,189개) 등.

교육개설기관의 여러 프로그램 및 단체의 자체 프로그램에 의거하여 다양한 형태의 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윤주(2022)에 따르면, 비영리 종사자의 76.2%는 교육에 참가할 때 지원을 받으며, 이 밖에도 멘토링과 슈퍼비전(35.5%), 학습조직(20.7%), 경력개발제도(18.5%)를 통해 자신의 역량을 키워 가는 것으로 보고였다(〈표 3-23〉 참조).

〈표 3-23〉 비영리조직 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원

신입 직원 오리엔테이션	멘토링/ 슈퍼비전	경력개발 제도	교육훈련 휴가제	외부교육 참가지원	학습조직 (동아리)	국내대학원 등록금지원
447(59.4)	266(35.5)	139(18.5)	186(24.7)	574(76.2)	156(20.7)	107(14.2)

출처: 장윤주(2022).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1호.

행정안전부가 전국적 통계를 발행하고 있는 비영리·민간 부문의 자원봉사 분야에서는 정확한 수치를 확인할 수 있다. 전국 245개 자원봉사센터(2020년)에서 1,650명의 종사자(민간 1,510명, 공무원 140명)가 보고되고 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한 관리자 교육 이수 현황을 보면, 연평균 23시간의 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3-24〉 참조).

70) 공익법인 종사자 62만 683명,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기업 3만 8,146명, 마을기업 1만 6,101명, 자활기업 1만 4,782명, 협동조합 2만 4,247명, 비영리단체 약 6만 명 등.

〈표 3-24〉 자원봉사센터 관리자 교육이수 현황

구분	2020년 교육이수 실적 (단위: 횟수, 시간, 명)								
	센터관리자			수요처 관리자			거점 관리자		
	교육 횟수	교육 시간	1인당 평균 이수 시간	교육 횟수	교육 시간	참여 인원	교육 횟수	교육 시간	참여 인원
총계	3,136	35,031	23	4,528	10,685	14,511	459	4,209	4,124

출처: 행정안전부·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통계편).

한편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교육은 중간지원조직이나 부문 연대조직, 지역재단이나 민간지원재단 등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 조직은 비영리·민간 부문의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주체와 사회적 의제를 지원하고 시민사회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결자, 지원자 또는 생태계 조성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아래 〈표 3-25〉는 전국의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들이며, 〈표 3-26〉은 이들 중간지원조직에서 수행하는 교육 프로그램(예시)이다.

〈표 3-25〉 국내 주요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2020년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서울시NPO지원센터(중구)</li> <li>• 서울시동북권NPO지원센터(도봉구)</li> <li>• 서울시동남권NPO지원센터(송파구)</li> <li>• 서울시금천구NPO지원센터(금천구)</li> <li>• 서울시노원구NPO지원센터</li> <li>• 서울시중랑구NPO지원센터</li> <li>• 서울시구로구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수원시)</li> <li>• (강원)플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강릉)</li> <li>• 충북NGO센터(청주시)</li> <li>• 대전광역시NGO지원센터</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홍성군)</li> <li>• 천안NGO센터</li> <li>• 서산시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논산시자치분권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광주NGO지원센터</li> <li>• 광산구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나주시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지리산작은변화지원센터(남원)</li> <li>•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li> <li>•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li> <li>• 경상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창원시)</li> </ul>
---	---

출처: 서울시NPO지원센터(김색일 2022. 09. 01.).



〈표 3-26〉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의 교육 프로그램(예시)

센터	교육 관련 사업
광주NGO지원센터	• 공익활동학교(지역사회 비영리공익활동가 역량강화 및 소양 교육)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 시민운동역량강화(예: 2022 리더십 아카데미_작.전.타.임.)
충북NGO센터	• NGO 전문인력과 시민을 위한 교육활동과 공공 리더 양성
대구시민공익활동지원센터	• 역량강화사업(지속적인 공익활동 생태계 조성 및 주체들의 역량 강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을 진행) • 활동가 학습지원(공익활동가들이 필요한 역량을 스스로 개발하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활동에 필요한 학습을 지원)
충청남도공익활동지원센터	• 공익활동 역량강화 사업(실무역량교육 ‘배우자’) • 청년공익활동가육성사업(청년 공익활동가 육성을 통한 지역 시민사회 활성화)

출처: 각 센터 홈페이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2022년 전국 공익활동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참여, 126명)을 실시한 바 있다. 공익활동가의 실천력을 키우기 위해 필요한 교육 주제로 나온 응답에는 사회운동, 이슈 캠페인, 공론화, 정책화 등의 전략기획과 실무력(65명, 51.6%)을 최우선으로 꼽고 있다. 또한 한국행정연구원에서는 ‘중소규모 비영리단체의 증견관리자를 위한 단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안)’을 제시하였다(김세진, 2021). 이 안에서 증견관리자들은 맥락적 역량, 관계적 역량, 전략적 역량, 관리적 역량, 윤리적 역량 등 5대 역량 중심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을 제안하고 있다.

〈표 3-27〉 공익활동가 활동력 제고를 위한 교육 주제

순위	교육 주제	응답 수	응답 비율(%)
1	사회운동, 이슈 캠페인, 공론화, 정책화 등의 전략기획과 실무	65	51.6
2	실무역량 강화(글쓰기, 모금, 홍보, 자료 아카이빙, IT 등)	64	50.8
3	사회의 주요 의제 이해(교육, 국제연대, 노동, 성평등, 인권, 정치·경제, 평화 등)	57	45.2
4	대화/소통/협력/네트워크 기획과 실무(주민, 시민, 동료, 활동가와 관계 맺고 연대하기)	52	41.3
5	조직경영(조직운영, 리더십 등)	39	31
6	시민사회와 시민운동 이해(개념, 가치, 철학, 역사 등)	31	24.6
7	운영업무(비영리단체 회계, 공익법인 관련 등)	25	19.8
8	마인드·라이프(인문사회학, 몸과 마음 건강, 취미 등)	23	18.3

출처: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https://civilnet.net/>). 검색일: 9월 20일.

〈표 3-28〉 중소규모 비영리단체의 중견 관리자를 위한 단기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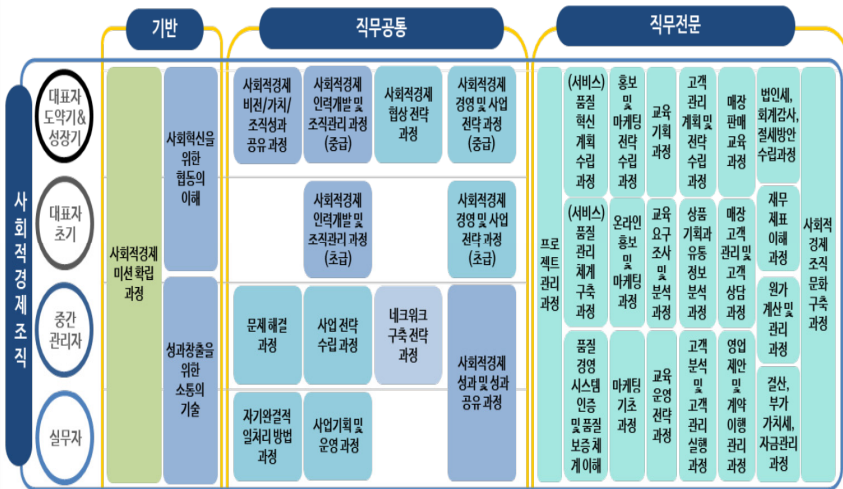
개발 역량	교육 목적 및 내용
맥락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비영리·민간단체가 처한 정치적·사회적·경제적·정책적·기술적 맥락에 대한 이해 도모</li> </ul>
관계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조직 내 구성원 간의 소통 활성화</li> <li>세대 간 갈등을 완화할 수 있는 소통 방법이나 갈등 관리</li> <li>정부나 기업과 소통</li> </ul>
전략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략 수립에 대한 이해 제고</li> <li>사업기획서 작성 연습(exercise)</li> <li>전문가가 해당 사업기획서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피드백</li> </ul>
관리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다양한 관리적 역량의 증진</li> <li>1) 모금, 2) 회계, 3) 홍보</li> </ul>
윤리적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자신의 윤리적 덕목을 통찰하고 윤리적 역량을 함양</li> </ul>

출처: 김세진(2021). 비영리단체를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다. 비영리·민간 부문 교육과 사회적경제 교육

이 같은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교육 내용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2020)에서 제시된 사회적경제 관련 역량 등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필요가 있다. 먼저, 이들 보고서에서는 사회적경제에 요구되는 역량을 교육 대상자별로 기반역량과 직무공통역량, 그리고 직무전문역량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기업가정신, 문제해결능력, 조직경영능력, 대외역량, 사회적 책임감의 5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그림 3-5] 사회적경제 대상별 필요역량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사회적경제 대상별 역량 체계.

〈표 3-29〉 사회적경제 참여자들에게 요구되는 역량

역량	세부 구성
기업가정신	도전정신, 신사업 발굴역량, 사업에 대한 열정, 고품질 지향성이 포함
문제해결능력	정보관리능력, 기회창출능력, 전략적 대안 도출력
조직경영능력	경영전문성, 분야전문성, 직무설계능력, 맞춤형 인사관리능력, 리더십
대외역량	자본조달능력, 협상력, 고객관리능력, 네트워킹 능력
사회적 책임감	신뢰 구축력, 사회적 사명감

출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표 3-30〉은 전통적 비영리·민간 부문 및 자원봉사 분야의 중견 리더 또는 관리자를 양성하기 위해서 진행되는 각 교육 프로그램 사례를 [그림 3-5], 〈표 3-29〉의 사회적경제에서 요구하는 역량과 비교해 본 것이다. 비영리·민간 부문 일반에서 요구되는 기업가정신과 조직경영능력 등은 자원봉사 부문에서의 조직경영능력 등과 상당 정도 일치 가능성이 있음을 볼 수 있다. 대외역량과 사회적 책임감에 대한 교육이 두 부문에는 부족하게 나타나지만 사회적책임감은 자체적으로, 그리고 대외역량은 이를 특화하여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재 비영리·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중에는 사회적경제를 다루는 비중이 높지 않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에 사회적경제 관련 주제가 거의 없거나 기본 소개, 탐방 정도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표 3-30〉 전통적 비영리 및 자원봉사 섹터의 교육내용 사례

사회적경제 참여자 역량	비영리·민간 부문 일반 교육		자원봉사계 일반 교육	
	환경재단 임길진NGO스쿨 <sup>71)</sup>	아산 프론티어 아카데미 <sup>72)</sup>	한국자원봉사 협의회 VNL <sup>73)</sup>	한국중앙자원봉사 센터 가치업스킬업 <sup>74)</sup>
기업가정신	4차 산업혁명, ESG	기업가정신		
문제해결능력		사회혁신 프로젝트	자원봉사 전략기획	
조직경영능력	세대 간 소통	리더십, 경영	자원봉사 행정관리 자원봉사리더십 자원봉사자 교육훈련	세대소통, 행복한 팀 조직 내 소통, 대화 공공데이터, 스마트워크
대외역량				
사회적 책임감				존엄한 삶
기타	해외 동향 사회적 임팩트 측정 등		자원봉사 철학·역사 자원봉사와 시민사회 프로그램 평가 자원봉사 동향	비영리의 역할과 가치, 자원봉사 성과 측정

출처: 각 교육 프로그램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 정리.

한편 비영리·민간 부문의 교육 프로그램에는 세부 활동 영역이나 조직의 목적사업 차원에서 사회적경제를 주 교육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여성의 생애주기별 경제적 역량강화를 통해 여성의 사회참여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미션으로 하는 (사)여성이만드는일과미래는 ‘사회적경제 생

71) 임길진NGO스쿨 11기(2021년) 기준, 환경재단 홈페이지(<http://www.greenfund.org/>).

72)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https://asan-nanum.org/>).

73)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홈페이지(<http://www.vkorea.or.kr/>).

74)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https://www.v1365.or.kr/new/main/main.php>).

태계 조성'을 주요 사업의 하나로 실행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 1)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2)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사업기획 및 네트워킹, 3) 사회적기업 창업전문과정(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4) 사회적경제 시민아카데미(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5)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6) 여성중심의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다만 교육 프로그램을 직접 진행하는 방식은 아니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나 서울특별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등에 위탁하여 진행하고 있다. 충북시민재단에서는 '사회적경제와 마을공동체 육성'을 하나의 사업 분야로 하여, 1)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회적기업(가) 육성과 지원, 2) 충북 마을공동체 네트워킹을 통한 교류와 협력 체계 구축을 세부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전통적 비영리·민간 부문에서는 단체의 사업 분야와 관련하여 직접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KOICA는 SE임파워 사회적협동조합과 협력하여 국제개발 민간협력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 소개를 진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시민사회 및 대학, 연구기관 등 국제개발 협력 사회적경제 분야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단체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2022년에 3주간 진행된다(〈표 3-31〉 참조). 또한 동그라미재단에서는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을 통해 메디컬 비즈니스 혁신가를 양성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재단은 VC, 임팩트 투자자들과의 연결 기회도 제공하고 있다. 아래 〈표 3-32〉는 2021년 9월 ~ 11월까지 9주에 걸쳐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된 프로그램의 핵심 커리큘럼이다. 이들 프로그램은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본이해와 사업 분야에의 접목이나 사례 소개, 문제 정의와 솔루션 도출, 시장 및 고객 분석, 사업계획서 작성 등 사회적경제에서 요구되는 역량을 다루고 있다.

〈표 3-31〉 KOICA 사회적경제 X 국제개발협력 역량강화 무료 인큐베이팅 프로그램(2022년)

회차	교육 시간	교육 내용
1회 차	2H	· 오리엔테이션 & 참가자 소개 · 민관협력 인큐베이팅(사회적경제) 프로그램 소개 · 각종 사후 프로그램 신청 기한 및 주요 내용 소개
	3H	· 국제개발협력과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 · 사회적경제 기본 개념, 주요 정책, 국제동향
2회 차	3H	·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수립 방법론 · 소셜 비즈니스 모델 이해, 사회적경제 모델 이해(협동조합형, 소셜 벤처형, 비영리형) SE임파워 김성기
	2H	·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경제 분야 사례 및 시사점 1 · (생산자·소비자 협동조합형 비즈니스 모델 사례연구)
3회 차	2H	·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경제 분야 사례 및 시사점 2 · (소셜벤처/비영리조직형 비즈니스 모델 사례 연구)
	3H	· (팁 코칭)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경제 사업모델 수립하기
4회 차	5H	· (팁 코칭) 국제개발협력 사회적경제 사업계획서 작성하기
5회 차	3H	· 팀별 사업계획 발표 및 피드백
	2H	· 참가자 네트워킹

출처: SE임파워사회적협동조합 홈페이지(<https://www.seempower.kr/>).

〈표 3-32〉 동그라미재단-TEU 메디컬 프로그램 커리큘럼(2021년)

핵심 커리큘럼	문제 정의	풀고자 하는 사회문제를 명확히 정의하고, 문제로 영향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왜 중요한 것인지 정리함.
	미래 예측	다양한 관점에서 15년 뒤 미래를 구체적으로 상상하고, 어떤 요소가 문제 해결에 영향을 줄 것인지 정의함.
	솔루션 도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가능한 한 많이 도출하고,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방향을 구체화함.
	시장·고객 분석	미래의 시장과 고객을 상상하고 문제해결 전략을 세움.
	액션플랜 작성	필요한 분야의 컨설팅을 신청해 사업계획서나 정책제안서 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액션플랜을 작성함.
기타 커리큘럼	실무자 특강	사회문제를 정의하고 각자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있는 실무자를 초청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생각함(사회운동가, 정책가, 사업가)
	필드 트립	실무자의 작업 공간을 방문하거나 전문가를 인터뷰하는 등 필요한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아이디어를 효율적으로 발전시킴.

출처: 동그라미재단 2021년 연례 보고서.

### 3. 비영리·민간 부문의 사회적경제 참여에 대한 장애물

사회적경제 초기, 비영리·민간 부문에서도 관심이나 열기가 적지 않았지만, 그 흐름은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2022년 9월을 기준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사회적기업 중에는 비영리조직이 20.6%인 709개소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 5월의 33.3%에 비해 현격하게 줄어든 수치이다.<sup>75)</sup> 전체 사회적기업의 수가 1,741개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하고 「상법」상 회사(영리)는 1,027개에서 2,145개로 2배 이상 증가하였지만, 사회적경제에 참가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는 100개에서 66개로 34개가 감소하였다.<sup>76)</sup> 또한 해당 기간 동안 「민법」상 법인은 65개, 사회복지법인은 8개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 같은 결과는 비영리·민간 부문 내부의 문제와 사회적경제 부문의 문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비영리·민간 부문 내부의 문제로는 먼저 사회적경제 참여 위축은 비영리·민간 부문 자체 인력양성에서의 어려운 환경과도 관련이 있어 보인다. 비영리·민간 부문에서 가장 큰 인력 풀(pool)은 구호와 복지기관이라 할 수 있다. 적십자 3,479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964명, 굿네이버스 652명, 월드비전 386명 등 종사자 수가 100명이 넘는 비영리단체도 있지만, 2019년에 시행한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방안 수요조사’(서울시NPO지원센터·공익조합 동행)에서는, 응답자 853명 중 소속 단체 상근자 수가 1~2명인 경우가 119명(17.8%), 3~5명인 경우가 206명(30.9%) 등으로 5명 이하 단체가 전체의 48.7%를 차지한다. 경력 10.5년 차 공익활동

75) 33.3%에는 2022년 기준으로 ‘영리’로 분류되는 ‘영농(어)조합법인’ 4.8%가 비영리로 포함되어 있음. 이를 반영하더라도 비영리의 비중이 28.5%에서 20.6%로 줄어든 것임

76)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자료



가의 월평균 소득액(세전)은 231.9만 원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의 월평균 소득액인 257.2만 원의 90.2%에 불과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또는 대단히 많이 느끼는 비율도 공익활동가군에서 55.1%로 나왔다. 이는 전국 성인 평균 25.3%보다 높은 수치이다. 우울감을 경험한 비율 역시 공익활동가군이 28.3%로 국민 평균 11.6%보다 훨씬 높은 수치의 직무 여건(박준 외, 2020)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더해, 비영리·민간 부문 자체의 교육이나 인재양성 체계가 단단하지 않고, 표준화된 대표적 교육이나 인재양성 프로그램이 미흡한 점도 원인의 하나로 꼽을 수 있다. 비영리의 운영성과를 결정하는 상위 요인으로 ‘인적자원(0.317)’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해외개발 NGO 53개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조직 및 인적 역량강화 교육 및 프로그램의 자체적인 실시 계획 여부’에 대해서는 62.3%가 ‘아니다’라고 응답하고 있다(손혁상 외, 2011). ‘그렇다’라고 응답한 단체들의 경우에도 그나마 인원부족과 자금사정 등의 이유로 계획만 있는 상태가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이러한 현상은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실시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또한 현재의 비영리·민간 부문이 영리적 마인드 형성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도 살펴볼 수 있다. 박희석·정현철(2017)에 따르면, 서울시의 비영리단체 중 영리기업과 밸류체인이 유사한 제조·생산·유통 분야 단체는 겨우 0.8%뿐이다. 이 밖에도 미디어 1.3%, IT 0.7% 역시 비중이 낮다. 이러한 환경은 사회적경제가 필요로 하는 인재와 역량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 비영리단체와 사회적기업을 구분하는 분기점이 ‘지속적인 영업활동의 유무’(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2015)라고 할 때, 자체적인 수익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경제를 이해하고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에는 전반적으로 기업가정신 및 사회적 기업가정신에 대한 접근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실제로 비영리·민간 부문에서도 내부에 사업 경험과 감각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을 사회적경제 부문에 나서지 못하게 하는 가장 큰 이유로 지적하는 논의도 있다.<sup>77)</sup> “비영리 조직 구성원은 대부분 사회복지나 시민사회 영역에 기반을 둔 사람들”이고, 이에 따라 “비즈니스와 마케팅 분야 전문인력 중심의 상법상 회사보다 비즈니스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한편 비영리·민간 부문 외부의 문제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비영리·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재육성 과정이 빈약하다. 예를 들어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되고 있는 교육 프로그램 전체를 살펴보면, 비영리·민간 부문 종사자를 특정하여 진행되는 프로그램은 찾아보기 힘들다. 2022년 현재<sup>78)</sup>,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직접 시행하는 프로그램 88개를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시민이나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창업교육이 차지하고 있다. 외부 교육으로 소개한 191개의 교육과정도 한두 개<sup>79)</sup>를 제외하면 비영리·민간 부문 종사자를 대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 그만큼 비영리·민간 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교육이나 인력개발에 대한 관심은 미흡하다.

정부의 일자리 정책으로부터 비영리·민간 부문이 소외되고 있다는 점도 이들 영역에서의 참여 저하로 연결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의 창업 리스크가 낮고, 취업유발 효과가 커서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77)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우리 ‘영리’해도 될까?”, 2019. 5. 29.

7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검색일: 2022. 9. 15.).

79) 사회적투자지원재단이 진행한 프로그램 2개에서 비영리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는 형태의 교육이 일부 있음.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세부 추진과제 중에는 성장 인프라 구축 차원의 ‘전문인력 양성시스템’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일반시민 대상의 교육과 대학교육 체계와는 달리,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인재양성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고용창출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과 사회적경제 영역에 대한 지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민간 부문 부문은 소외되고 있다.<sup>80)</sup> 「사회적기업 육성법」 같은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법률에서도 비영리·민간 부문은 누락되어, 비영리·민간 부문에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는 상태이다. 많은 비영리단체들이 5명 미만의 상근활동가로 유지되고 있지만, 정부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5명 이상 사업체에만 지급된다. 일자리안정자금도 비영리단체를 제도적으로는 배제하지 않지만, 사실상 영리사업체에게 우선 배분되고 있다. 그리고 소상공인 정책자금융자, 청년내일채움공제, 노란우산공제 등에도 비영리단체는 아예 원천적으로 배제되어 있다(박준 외, 2020).

비영리·민간 부문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의 상당 부분이 사회적경제와 공통점이 있고, 인재 풀을 공유한다는 점에서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교육이나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등 접목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4. 비영리·민간 부문의 사회적경제 참여 활성화 방안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양성을 활성화하고 사회적경제와의 접점을 높이기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전략이 요구된다.

첫째, 비영리 인재양성 채널과의 연계·협력의 강화이다.

80) 조선일보, <더 나은 미래> [Cover Story] 그 많은 청년 일자리 정책에 ‘비영리’는 없었다. 2018. 9. 18. 자.

기존에 비영리·민간 부문 및 자원봉사계에서 활동 중인 인프라 조직을 활용하여 사회적경제 교육을 확대하고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다. 비영리·민간단체는 지자체가 지원하는 중간조직인 시민·NPO·NGO·공익활동 지원센터 등 중간지원센터가 전국적으로 존재한다. 자원봉사센터는 전국에 245개가 있다. 이들 각각의 센터는 관련 단체와 조직 구성원을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나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교육 프로그램을 사회적경제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시민사회 중간지원조직은 사회문제 해결을 도모하는 주체와 사회적 의제를 지원하는 조직으로서 시민사회 활성화를 위해 연결자, 지원자 또는 생태계 조성자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이들 조직과 협약을 통해 시민단체의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경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예컨대, 자원봉사관리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 교육, 자원봉사자에 대한 사회적경제 이해와 실무, 인턴 등의 프로그램을 개설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자원봉사를 경험한 이들을 사회적경제 조직 취업이나 창업으로 유도하는 것도 사회적경제의 인재를 확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현장 이해와 자발적 결정을 토대로 유입된 인재들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되기 때문이다. 실제 사회적경제 현장에서도 자원봉사 경험을 연계하여 사회적경제로 전환, 연계되는 사례가 있다(송소연, 2021)<sup>81)</sup>. 자원봉사센터와 연계된 공동육아방, 자원순환가게 운영, 마을돌봄활동, 마을세탁소 운영 등도 사회적경제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현장이기도 하다(박상희, 2021).

81) 에이드런, 그레이프렘, 키뮤튜디오, 테스트웍스, 러블리페이퍼 등을 사례로 제시.

〈표 3-33〉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접점 사례(창업 등)

사회적경제	개요
에이드런 ( <a href="https://withadren.com/">https://withadren.com/</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패션 디자인 브랜드, 미술교육 콘텐츠 기업</li> <li>2015년부터 자체 봉사활동 시작</li> <li>보육원 아동을 대상으로 미술교육봉사 진행: 교육봉사로 만난 아이 85명, 봉사 시간 1,669시간</li> <li>아이들의 그림을 기반으로 패턴을 제작하여 판매</li> <li>해당 수익금을 우간다 어린이에 기부</li> </ul>
그레이프랩 ( <a href="https://grapelab.co/kr/">https://grapelab.co/k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발달장애인과 함께하는 친환경 디자인 스튜디오</li> <li>2018년 창업, 직원 14명 가운데 8명이 발달장애인(2021년 기준)</li> <li>복지관 자원봉사를 통해 발달장애인 경험(2년)</li> <li>발달장애인과 종이를 이용한 노트북 스탠드, 친환경 플래너 등 판매</li> </ul>
키뮤스튜디오 ( <a href="http://kimustudio.com">http://kimustudio.com</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미술적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발굴해 디자이너로 함께 일하는 소셜벤처</li> <li>2018년 창업</li> <li>디자이너는 8명 중 6명이 발달장애인. 대표 포함 전 직원(17명) 중 장애인 노동자 비율 35%</li> <li>발달장애인 미술 봉사활동 경험, 복지관 공익근무요원 근무</li> <li>예술에 재능이 있는 발달장애인 아티스트를 발굴하고 콘텐츠 제작</li> <li>일러스트레이터, 캐릭터 디자이너, 컬러리스트, 편집 디자이너 등으로 활약</li> </ul>
테스트웍스 ( <a href="https://www.testworks.co.kr/">https://www.testworks.co.kr/</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공지능 데이터 수집 가공, 자동화 &amp; S/W 테스트 전문 기업</li> <li>2015년 창업, 사원 수 168명(2022년), 매출 70억 원</li> <li>일반직장인 시절 IT 교육 자원봉사 경험</li> <li>발달장애인 중심으로 인공지능 관련 데이터 세트 가공 업무</li> </ul>
러블리페이퍼 ( <a href="https://lovepaper.modo.at/">https://lovepaper.modo.at/</a>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페이지 그림을 그리는 사회적기업</li> <li>2017년 법인 설립</li> <li>직원 4명, 어르신 7명 일자리 제공, 6명의 어르신으로부터 페이지를 매입</li> <li>자원봉사 예술과 페이지를 활용한 '페이퍼 캔버스아트' 제작 판매</li> <li>페이지를 수거하는 어르신을 보고 봉사단체 '굿페이퍼' 설립: 가정, 학교 등에서 나오는 페이지를 수집하여 판매(어르신에게서 페이지를 고가 매입)</li> </ul>

출처: 송소연(2021) 및 해당 기업 홈페이지 자료를 표로 정리.

둘째, 비영리·민간 부문의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정책의 강화이다.

사회적경제 일자리 창출 정책 등 각종 일자리 창출 지원대상에 비영리·민

간 부문도 포함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민간 부문이 사회적경제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나아가 사회적경제 전환의 토대로 작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현재의 사회적경제 전문인력 양성시스템 관련 사안 중 ‘대학을 통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사회적경제 리더·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사회적기업 리더 과정 및 대학의 평생교육체제 지원사업’에 비영리 종사자, 자원봉사관리자 및 창업을 원하는 민간 부문 종사자를 위한 별도의 과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재정적으로는 첫째, 고용노동부 사업으로서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고용보험에 가입한 5인 미만 비영리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대상에 비영리 부문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둘째, 비영리단체를 위한 정책자금 융자 제도를 도입하고, 비영리 스타트업에 대해 사무실 공유공간을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정부 보조금의 인건비 사용 허용은 지역단위의 정책실험을 거쳐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박준 외, 2020).

## 제4절 소 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영역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력양성 현황과 실태를 살펴보았다. 중앙단위에서는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해 10여 개 부처가 한 해 1.6조 원에 이를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자체 단위에서도 17개 광역지자체 전체와 절반 가까운 기초지자체가 사회적경제 중장기 종합계획 혹은 단기추진계획을 발표·시행하고 있다. 또한 6만 개가 넘는 조직에 70만 명이 이상이 종사하는 비영리·민간 부문은 사회적 가치 측면이나 인력 공급 측면에서 사회적경제의 중요한

일천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정책은 새롭게 중앙과 지역, 그리고 민간단위의 정책과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첫째,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 과정에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 기능과 지역 우수사례의 정책적 확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정부의 인재육성 종합계획은 지역단위의 사회적경제 정책 추진의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지만, 지역현장에서는 이의 논의 수준까지도 뛰어넘는 여러 우수한 정책과 사업이 펼쳐지고 있다. 현장의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과 결과 분석 및 수렴체계를 구축하여 이를 전국적 단위로 확산하고, 지역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갖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정책 전달체계 면에서 각 부처별로 구축하고 있는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체계와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적 관계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부처별 중간지원조직은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부가적 업무가 되는 기관들이다. 이들 중간지원기관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관련한 전문성 및 역량 제고를 위한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가 요구된다. 또한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한편으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생태계 형성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킹을 주도하고 관련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며,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된다. 따라서 이들 중간지원조직 각각의 역할과 협력망을 지역단위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조정 혹은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의지와 조례 등 각종 사업 추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중앙단위에서는 부처의

정책 의지에도 불구하고 법령 체계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그러나 지역단 위에서는 각종 조례나 제도적 장치, 지역사회의 수요 등에 힘입어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안정적 환경이 구축되고 있다. 특히 지역 사회에 산재한 평생학습기관과 직업훈련기관, 대학, 그리고 사회적경제연합회 등 당사자 조직들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는 근거와 동력이 되고 있다. 이들 요소가 자율적으로 관련 사업을 일으키고 상호 협력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넷째,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욱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한다.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사회적경제가 언급되고는 있지만, 인구와 기업의 유입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농어촌과 변방지역에서는 비교역적 직업군 위주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기대와 역할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이들 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 측면에서도 낮은 비율을 보이는 만큼, 정부 정책에서의 우선순위는 물론 예산 등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특별지구' 지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다섯째,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이전 등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대학과 직업훈련기관 접근성이 꼽힌 것은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공식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공식적으로 실시하는 대학의 수가 많지 않다. 그리고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한 규모가 대다수인 사회적경제 조직은 중소기업 일반의 훈련부진 상태를 겪을 가능성이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성장에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의 존재 여부가 핵심적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따라서 이들 대학과 훈련기관 전반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사회적경제 기반 구축의 일환으로 비영리·민간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인재육성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비영리·민간 부문은 사회적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조직경영기술, 리더십·기업가정신 등의 내용을 적지 않게 포함함으로써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의 인력 유입이 유효할 뿐만 아니라 협력적 파트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비영리·민간 부문에 대한 사회적경제 교육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이들 부문과의 인력 및 내용 측면에서 교류·협력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요구된다.



## 제4장

#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역할

제1절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인력양성 형태

제2절 대학의 인력양성 실태

제3절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제4절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



## 제4장 |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역할

### 제1절 사회적경제와 대학의 인력양성 형태

#### 1. 사회적경제 조직과 인력양성의 필요성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를 “투명하고 책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활동”이라는 폭넓은 접근을 취하고 있다(제2장 제1절 참조).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의 진입 경로의 특성도 포괄적이다. 협동조합과 같이 이미 사회적경제 조직의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나 소셜벤처 등의 경로를 통해 새롭게 설립·운영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전통적 영리기업이나 전통적 비영리조직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진입 혹은 전환하는 경우까지를 모두 포함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어느 경로의 조직 특성을 가지더라도, 사회적경제 조직의 인력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증대하고 있다. 이는 특히 최근의 ESG 경영 확산 분위기, 그리고 UN의 SDGs 실행 수단으로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 고조 등으로 인해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 가. ESG 경영

과거에 기업의 목적이 오직 이익의 추구에 집중되었다면, 최근의 기업은 기업의 사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ESG 경영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가 반영되는 것으로, 과거 기업의 영리추구 목적에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목적이 더해진 것이다. 이는 기존의 영리적 기업활동의 폐해를 보완하고 사회적 가치와 기업의 영리 추구를 결합하는 모형으로서, 기존 기업 경영에서도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가 접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표 4-1〉 ESG 경영의 핵심요소

핵심요소	주요 내용
환경 (environment)	- 기후변화 및 탄소배출 - 환경오염 및 환경규제 - 생태계 및 생물 다양성
사회 (social)	- 데이터 보호 및 프라이버시 - 인권성별 평등 및 다양성 - 지역사회 관계
지배구조 (governance)	-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구성 - 뇌물 및 반부패, 기업윤리

출처: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검색일 2022. 08. 01.

실제로 증권 및 파생상품 등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원활한 매매 및 효율적 시장관리를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인 한국거래소<sup>82)</sup>는 우리나라 주요 기업의 ESG 등급을 발표하고 있다(〈표 4-2〉 참조). 기업으로서도 과거 이익 추구

82) 기존의 한국증권거래소, 한국선물거래소, 코스닥증권시장, 코스닥위원회 등 4개 기관이 통합되어 2005년 1월 27일에 설립된 주식회사임.

중심의 기업경영 모형으로는 더 이상 설 자리가 좁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기업 환경은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과 경영 방식의 도입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반 기업으로부터 사회적경제로의 참여 혹은 전환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제 사회적경제 관련 인력양성은 기업의 인력양성 차원에서도 지대한 관심사가 되고 있다.

**〈표 4-2〉 주요 상장기업 ESG 종합 등급부여 현황**

연도	S등급	A~A <sup>+</sup> 등급	B~B <sup>+</sup> 등급	C등급	D등급	기업 수 합계
2019	0	56	386	268	27	737
2020	0	108	390	235	22	755
2021	0	182	343	225	12	762

출처: <https://esg.krx.co.kr/contents/03/03010000/ESG03010000.jsp>. 검색일 2022. 08. 01.

#### 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UN은 빈부격차, 고용불안, 고령화 등 전 세계적으로 고착화되는 구조적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공동목표로서 17개 이슈로 구성된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2016~2030년)’를 수립한 바 있다. 이와 같은 SDGs가 제기한 이슈와 가치들은 사회적경제의 순기능과 일치하거나 접점을 가지면서 서로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점에서, 사회적경제가 SDGs의 달성 수단으로서도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ILO 역시 100주년 기념 결의문(2019년 6월 발표)에서 좋은 일자리 및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성취의 중요 전략으로 사회적경제를 강조했으며, UN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태스크포스(UNTFSSSE)는 SDGs 실현을 위한 사회연대경제(사회적경제) 지식 허브를

구축, 운영하고 있다. 또한 ICA는 2019 총회에서 SDGs 실현을 위한 공동행동의 핵심 행위자로 협동조합의 역할을 역설하기도 하였다.

〈표 4-3〉 사회적경제의 특징에 따른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사회적경제의 특징	지속가능개발목표
공정한 고용창출, 경제적 자원에 대한 권리 증진,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강화, 민주주의적 참여	1, 5, 10, 16
생산자 조합화, 도시 농업, 공정 무역, 대안적 먹을거리 네트워크	2
보건, 노인 케어, 육아, 장애인 케어, 교육, 훈련	3, 4
여성의 활발한 참여를 통한 임파워먼트	7, 8, 9, 10
사회적, 에너지, 금융 인프라, 그리고 고용	7, 8, 9, 10
도시 마을 재생과 참여적 거버넌스	6, 11
지속가능한 농업과 자연자원 관리	14, 15
리사이클링, 재활용	7, 12, 13
비공식 부문의 공식화, 시장경제와의 접점	8, 10, 11, 16, 17

출처: 이일청(2017). 사회연대경제와 SDGs 17개 목표와의 연계. UN 사회개발연구소.

이와 같은 변화는 인력양성에서 기존의 경제 및 경영 인력의 양성이나 사회변화 혹은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한 인력양성 체계에서 새로운 모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사회적경제를 위한 인력양성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ESG 경영이나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기업 혹은 비영리기구들에게도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 2.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기업경영과 관련한 대학의 인력양성 기능은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ESG 경영에 대한 기업의 관심이 증대함에 따라, 대학의 관심과 관련 전공과정 및 수업 트랙 개설 등 참여도 늘어나고 있다. 서강대, 한양대, KAIST 등은 이미 ESG에 입각한 경제 분석 기법을 비롯하여 ESG의 기업경영 및 금융과의 관계성, ESG 평가방법 등 트랙을 전공필수 혹은 전공심화, 실습 등의 교과과정으로 채택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21. 11. 22.).

또한 비영리기구의 인력양성에 대한 교육과정 역시 짧지 않은 역사가 있다. 1999년 11월, 경희대 NGO 대학원 설립 인가를 시작으로 많은 대학은 비영리·비정부 조직 관련 교육을 대학원과정 혹은 전공코스로 설치하였다. 경희사이버대학은 2002년에 학부과정으로 NGO사회혁신학과를 개설·운영하고 있다. 아래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많은 대학은 정규 학위과정으로 시민사회, 비영리기구 조직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비영리기구는 원천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경제는 비영리기구를 한 단계 성장시킬 수 있는 유효한 수단으로 파악된다(본 보고서 제2장 제1절 참조).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인력양성에 대한 비영리기구 및 종사자, 관계자의 관심과 참여도 증가하고 있다.

**〈표 4-4〉 비정부·비영리기구에 관한 정규 학위과정**

학교/전공	내용
경북대 정책정보대학원 NGO 전공	시민사회 연구, 국제NGO운동, 소수자와 시민권, 사회운동론, NGO와 지방자치, NGO 조직론 등
경희대 공공대학원 시민사회·NGO 전공	NPO전략경영론, 비영리 마케팅, 비영리 리더십, 전략적 기획, 비영리 성과 측정과 평가 등
경희대 공공대학원 글로벌거버넌스 전공	국제개발론, 개발협력의 정치경제학, 시민사회와 개발협력, 국제 개발 사업의 형성과 평가, 사회적경제와 국제개발, 국제개발협력 특성화 교과과정 개설
경희사이버대학원 미래시민리더십· 거버넌스 전공	시민정치철학 세미나, 글로벌거버넌스론, 위험사회와 예방 리더십, 도시거버넌스, 지구 시민사회와 정치 등
부산대 대학원 NGO학 전공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지역문화론과 문화NGO, 지역여성문제와 지역여성운동, 리더십과 그룹다이나믹스, 시민사회와 인권 등 대학의 지역사회 봉사과 대외협력 촉진
부산대 대학원 국제교육개발협력 전공	국제교육개발협력의 이해, 국제분쟁과 협력, 한국교육발전의 경험 등
서울대 대학원 글로벌교육협력 전공	국제교육 개발협력의 이론과 실제, 국제교육 개발연구 방법론, 글로벌교육 협력실습, 글로벌교육 협력세미나, 개발도상국의 교육 문제, 국제정치와 교육개발, 교육ODA의 이해와 비판 등
성공회대 대학원 아시아비정부기구학 전공(MAINS)	아시아 각국 시민사회 지도자를 초청, 강의와 한국 단체 및 기관 방문 운영/글로벌 인권, 글로벌 아시아 페미니즘, 개발에서의 NGO 관리, 아시아 맥락에서의 종교와 개발, 아시아의 정치변화와 시민사회 등
성공회대 NGO대학원 NGO(비정부기구)학과	시민사회운동론, 국제NGO, 정책과 NGO, 대안 사회경제, NGO 실무, NGO / NPO 경영론, 자원봉사론 등 / '시민사회 리더십 과정', '교사연수 프로그램' 등 중단기 연수 프로그램 운영
성공회대 NGO대학원 실천여성학	페미니즘 사상, 젠더와 정치, 젠더와 경제, 여성운동 역사와 쟁점, 글로벌 아시아 여성연대, 여성주의 조직과 리더십, 풀뿌리 여성운동 사례 연구 등
세종대 공공정책대학원 국제개발협력학과	공공정책과 사회, 국제개발협력론, 세계화와 개발협력, ODA 실무, 국제개발현장실습, 정보통신과 개발, NGO 및 국제협력, 국제개발협력 콜로키움 등
인하대학교 대학원 글로벌 e거버넌스전공	전자거버넌스 개론, 글로벌 e-비즈니스 관리, 연구설계방법론, IT 기반 경영혁신론, 공공시민사회, 스마트시티론, 공공조직 성과

학교/전공	내용
협동과정	관리, 이문화 간 커뮤니케이션, 소셜미디어 비즈니스 등
전남대 대학원 NGO 협동과정	기본권론, 사회운동연구, 지방자치론, 국제기구법, 시민참가론, NGO 정책론, NGO 사례연구, NGO 조사방법론, 시민사회연구 등
한신대 사회혁신경영대학원사 회혁신 리더십 전공	사회혁신과 사회적경제, 사회혁신 현장실습, 해외현장탐구 세미나, 사회혁신론, 리더십 사례연구, 사회운동과 지역자치, 사회혁신과 공공정책, 불평등과 사회혁신 등
한일장신대 NGO정책대학원 NGO학과	NGO이론, NGO와 CSR, 인터넷과 NGO, 지역사회와 NGO세미나, 국제NGO세미나 등
KDI 국제정책대학원 개발정책학 전공	개발과 노동시장정책, 개발과 한국의 사회변화, 환경정책과 지속가능 개발, 젠더와 개발 등

출처: <http://www.snpo.kr/archive/project18/page1-1.html>. 검색일 2022.09.01.

사회적경제 전담인력 양성에 대한 필요성은 당연히 기업과 비영리기구의 수요에만 그치지 않는다. 협동조합과 같이 이미 사회적경제 조직의 맥락에서 운영되고 있는 경우에도 사회적 가치의 효율적·효과적 수행 차원에서, 그리고 소셜벤처 등의 창업과 운영 등 필요성에 의해서도 요구가 커지고 있다. 김진영·정석호(2020)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과제 중 전담인력 교육 강화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제시하고 있다(김진영·정석호, 2020). 이 조사는 특히 지방정부 차원에서 우선 추진해야 할 과제로 지방정부 내 부서 간 협력체계 구축, 민관 협의체 운영 등과 함께 전담인력 교육 강화를 주문하고 있다(김진영·정석호, 2020). 사회적경제 조직 당사자들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 초·중·고 대상 사회적경제 관련 직장체험 등 기회 제공, 대학에서의 전문적인 학습을 위해 특성화 대학 선정, 인재양성센터 설립, 사회적

가치 평가전문가 양성 등을 주요 추진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김진영·정석호, 2020).

한편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인프라는 대학(원) 내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나 전공을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양성하는 경우를 우선 생각해 볼 수 있다. 경상계열 학과를 중심으로 기업의 사회책임이나 ESG 경영과정을 설치할 수 있고, 교육학,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등 학과를 중심으로는 NGO, 시민, 공동체, 사회혁신 등 사회적 가치 관련 교육을 설치할 수 있으며, 또한 이들 과정을 융합하고 연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관련 전공이나 학과를 졸업한 이후의 경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서의 취업이나 창업뿐만 아니라 일반기업 취업에도 열려 있다. 그만큼 사회환경이 사회적경제 관련 인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 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사회적경제 교육과 인력양성은 ‘제3차 사회적경제 활성화 기본계획’이 시행된 이후이다. 2018년에 발표된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사회적경제 인재 유입 확대, 사회적 책임의식과 기업가정신을 겸비한 리더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등 4대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 특히 초·중·고 교과에 사회적경제 내용을 반영하고, 지역경제교육센터 등 지역·현장 중심의 사회적경제 교육을 추진하고자 의지를 표명하기도 하였다(관계부처 합동, 2018. 7. 3.).

〈표 4-5〉 사회적경제 핵심리더 육성 전략

<b>①</b>	<b>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b>
	<p>□ (선도대학 지정) 노동부·교육부 협력으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을 지정(고용노동부), 연구개발·학부개설 등 관련 사업을 패키지로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고용노동부는 학부개설 준비를 위한 리더과정(비학위과정)을 2년간 지원, 교육부는 사회적경제 연구 확충 등을 위한 소요 비용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현재 한양대와 숭실대 학부과정 개설('18. 3.) → '19년 신규 3개 대학 지정, '22년까지 20개 대학에서 500여 명 학부 전공자 육성 지원</li> </ul> </li> <li>□ (학위·비학위 확대) 사회적기업 리더과정을 사회적경제 리더과정*으로 개편, 지원금 및 지원 대학 수를 확대하여 핵심리더를 집중 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8년) 4개교 지원 → ('22년) 20개교 지원 추진</li> <li>○ SK 등 민간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과 연계하여 학위 운영 대학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위과정 운영 10개 대학 중 KAIST, 이화여대, 한양대 등 5곳은 SK그룹에서 지원</li> </ul> </li> </ul> </li> <li>□ (국제교류 확대) 외국 대학 교류 및 해외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사회적경제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선도대학과 외국의 사회적경제 주요 대학* 간 교류·협업 체계 구축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스페인 몬드라곤대학교, 영국 협동조합대학, 이탈리아 트렌토대학 등</li> </ul> </li> <li>○ 리더의 글로벌 역량 제고를 위한 해외연수 프로그램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사회적기업가 정책 연수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18년 7명)</li> </ul> </li> </ul> </li> </ul>
<b>②</b>	<b>대학생들을 예비리더로 육성</b>
	<p>□ 중소기업 취창업을 희망하는 희망사다리 장학금* 수혜 대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프로그램 제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수혜 대학생에게 등록금과 취창업 장려금을 지급하고, 졸업 후 수혜 기간만큼 취창업을 유지('18년: 356억 원, '17년 4,152명 지원)</li> </ul> </p> <p>□ KOICA 등 장기 해외봉사단('18년 2,000명 → '21년 4,000명)에게 국내외 비영리 기관, 사회적경제 등 다양한 분야 진출을 위한 교육·컨설팅 제공</p> <p>□ '중소기업 탐방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기업을 탐방, 실제 일 체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고용노동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생에게 탐방 기회를 제공(1,000명, 최대 5일), 기관 선정 시 사회적경제기업 우대</li> </ul> </p> <p>□ 대학생 대상 대학생형 창업, 운영 관련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국유시설 사용료 감면 등을 통해 대학 생협 활성화를 위한 환경 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내 교육과정 개설('19년)</li> </ul> </p>

③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지원)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 분야별\* 전문리더 육성을 위한 심화교육 과정 신설('19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 도시재생, 신재생에너지, 사회서비스, 문화예술, 개발원조 등
- (포럼 운영) 최근 주요 경제 동향 및 트렌드, 국내외 사회적경제 변화 공유 등을 주제로 사회적경제 리더 대상 권역별 포럼 운영
  - '18년 사회적경제 국제 리더 포럼 개최 시 '사회적경제 유망 진출 분야'에 대한 분야별 해외 전문가와의 토론 프로그램을 제공
  - \* 국제 리더 포럼(6. 15., 서울) 및 사회적경제박람회 시(7. 13.~15.) 국내외 전문가 세미나 개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18. 7. 3. : 12~13).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이 계획에서는 사회적경제 핵심리더를 양성하는 데 있어서 대학의 역할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해 선도대학을 지정하여 학위 및 비학위 과정을 운영하고, 이를 통한 핵심인력의 양성을 주문하였다. 대학에 대한 지원과 함께 대학생들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 교육과 해외 연수, 장학금 지급 등을 통해 예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주요 내용으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고용노동부 소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전문심화 교육과정을 통한 재교육훈련의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에서 대학에 대한 핵심적인 지원정책인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중심으로 대학의 성과를 분석한다.

## 제2절 대학의 인력양성 실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력양성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대학의 학과를 다음과 같이 구분(조작적 정의)한다.

1. 학과명과 대학명에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영, 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학과명을 갖고 있는 경우
2. 학과명이나 대학명에 NGO, 시민, 공동체, 사회혁신 등 사회적경제와 간접적인 관련을 가진 학과명을 갖고 있는 경우

이 두 유형의 학과가 어느 정도 개설되어 있는가를 조사하고, 해당 학과의 재학생과 졸업생을 파악하여 인력양성 규모를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인력의 양성은 정규 학위과정을 통해서만 이루어지지 않고, 단기의 비정규 과정을 통해서도 이루어지고 있다. 비정규 과정을 통한 인력양성의 그 규모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으나, 드러난 자료를 통해 대략적인 인력양성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 1. 학위과정 중심의 인력양성 실태

대학에서 정규 학위과정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회적기업가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에서 2009년 2월에 신설한 석사학위과정이 처음이다. 이어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에서 2010년 9월에 신설한 학과간 협동과정, 한국과학기술원(KAIST)이 SK그룹과 협력하여 2013년에 신설한 사회적기업가 MBA, 경남과학기술대학교(현. 경상국립대학교)가 지방

대학육성사업의 일환으로 신설한 사회적경제연계전공(학부과정), 부산가톨릭대학교에서 2018년에 개설한 사회적경제학과 석사학위과정 등이 있다(김영화, 2019: 38). KAIST 사회적기업가 MBA는 기존 경영교육 중심의 MBA 프로그램에 창업 교육과 사회적기업 정신을 결합한 세계 최초의 2년제 사회적기업 창업특화 전문경영 석사과정으로, 사회적기업 창업인재 육성을 목적으로 매년 25명 내외의 (예비) 사회적기업가를 선발하여 사회적기업 창업 인큐베이팅을 지원하고, 졸업 후 투자 연계까지 지원하는 통합적 체계를 갖추고 있다(김영화, 2019: 38).

정규 학위과정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의 운영 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대학에는 군장대학교, 농협대학교, 충남도립대학교에 사회적경제 또는 협동조합과 관련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4년제 대학으로는 상지대학교 등 6개 대학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를 개설, 운영하고 있다. 대학원 과정에서는 19개 대학에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 현황은 <표 4-6>과 같다.



〈표 4-6〉 사회적경제 학과 개설 현황

학제	학교명	시도	학과명
전문대학	군장대학교	전북	사회적경제과
전문대학	농협대학교	경기	협동조합경영과(2년제)
전문대학	농협대학교	경기	협동조합산업과
전문대학	충남도립대학교	충남	사회적경제?IT학과
대학교	상지대학교	강원	사회적경제학과
대학교	한남대학교	대전	사회적경제기업학과
대학교	한밭대학교	대전	협동조합금융학과
대학교	한세대학교	경기	보건복지사회적경제학과
대학교	한신대학교	경기	사회적경제경영학연계전공
대학교	청운대학교	충남	사회적기업학과
일반대학원	군산대학교대학원	전북	사회적경제학과
일반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대학원	경북	사회적경제학과
일반대학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산	사회적기업학전공
일반대학원	성공회대학교대학원	서울	협동조합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우석대학교 일반대학원	전북	사회적경제 ?경영학과
일반대학원	원광대학교 대학원	전북	사회적경제학과
일반대학원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서울	사회적경제협동과정
일반대학원	한국과학기술원 일반대학원	대전	사회적기업가 MBA
일반대학원	한세대학교 대학원	경기	사회적경제학과
전문대학원	한양대학교국제학대학원	서울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특수대학원	가천대학교 경영대학원	경기	사회적기업학과
특수대학원	건국대학교 창의융합대학원	충북	사회적기업학 전공
특수대학원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대학원	대구	사회적경제학과

학제	학교명	시도	학과명
특수대학원	목포대학교경영행정대학원	전남	사회적기업학협동과정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서울	협동조합MBA전공
특수대학원	승실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사회적기업전공
특수대학원	우석대학교 경영문화대학원	전북	사회적경제학과
특수대학원	한남대학교 사회문화·행정복지대학원	대전	사회적경제학과
특수대학원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서울	사회적경제

출처: 교육통계서비스(2022). 원자료(검색일: 2022. 7. 1.).

한편 사회적경제와 관련이 있는 공동체, NGO, 시민교육 등과 같은 시민운동 성격의 학과 개설 현황은 아래 <표 4-7>과 같다.

대학교의 경우 2개 대학에서 시민 관련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하고 있었고, 대학원은 성공회대학교의 8개 전공을 제외하면 모두 16개 대학원에서 학과 또는 전공을 개설, 운영하고 있었다. 또한 원격대학 형태로 2개 대학에서 시민 관련 전공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표 4-7〉 NGO, 시민 관련 학과 개설 현황

학제	학교명	시도	학과명
대학교	한신대학교	경기	동아시아시민사회전공
대학교	한일장신대학교	전북	NGO학과
원격대학(대학)	경희사이버대학교	서울	NGO사회혁신학과
원격대학(전문)	세계사이버대학	경기	NGO다문화복지학과
일반대학원	경남대학교대학원	경남	NGO협동과정
일반대학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부산	NGO학전공
일반대학원	전남대학교대학원	광주	NGO협동과정
일반대학원	한신대학교대학원	경기	국가와 시민사회전공
전문대학원	경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인천	정치·시민교육전공
전문대학원	서울교육대학교 교육전문대학원	서울	통일?평화?시민교육전공
전문대학원	선학유패대학원대학교	경기	평화NGO학과
특수대학원	경북대학교 정책정보대학원	대구	사회정책및NGO전공
특수대학원	경상국립대학교 행정대학원	경남	시민리더십학과
특수대학원	경희대학교 공공대학원	서울	시민사회·NGO학과
특수대학원	경희사이버대학교 문화창조대학원	서울	미래시민리더십?거버넌스전공
특수대학원	국민대학교정치대학원	서울	시민거버넌스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서울	공동체?도시재생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서울	마을공동체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서울	시민경제학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서울	시민정책학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서울	실천여성학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 시민평화대학원	서울	평화?통일정책학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교육대학원	서울	민주시민교육전공
특수대학원	성공회대학교시민사회복지대학원	서울	사회복지학과
특수대학원	아주대학교국제대학원	경기	NGO학과
특수대학원	청주교육대학교교육대학원	충북	글로벌시민교육
특수대학원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서울	시민사회학과
특수대학원	한일장신대학교NGO정책대학원	전북	NGO정책학과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2). 원자료(검색일: 2022. 7. 1.).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와 NGO 및 시민 관련 학과의 재적학생 현황을 통해 해당 전공자의 공급실태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로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의 재적생 수가 1,133명으로 약 70.2%를 차지하고 있고, NGO 계열은 482명으로 29.8%를 차지하고 있다.

학제별로는 전문대학이 573명(9.3%), 4년제 대학이 306명(16.7%), 대학원이 736명(74.1%)으로 대학원 과정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계열의 경우 전문대학 비중이 573명(16.7%)로 높은 편이나, 농협대학 학생이 515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를 제외하면 전문대학의 경우는 거의 인력양성에 관여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인력의 양성은 대학과 대학원이 중심이며, 사회적경제와 직접적으로 연관성을 갖는 사회적경제 계열의 비중은 대학(219명, 23.3%)보다 대학원(341명, 60.0%)이 약간 높은 반면, NGO 계열은 대학(87명, 8.3%)보다 대학원(395명, 91.7%)이 압도적으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표 4-8〉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재적생 현황

대학별	사회적경제 계열		NGO 계열		합계	
	재적생 수	비율(%)	재적생 수	비율(%)	재적생 수	비율(%)
전문대학	573	16.7%	·	0.0%	573	9.3%
대학교	219	23.3%	87	8.3%	306	16.7%
대학원	341	60.0%	395	91.7%	736	74.1%
합계	1,133	70.2%	482	29.8%	1,615	100.0%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2). 원자료(검색일: 2022. 7. 1.).

다음으로 지역별로 재적학생 현황을 살펴보면, 지역적 분포가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적으로 수도권에 71.5%가 집중되어 있고, 중부권이 15.5%, 호남권이 8.3%, 대경권이 2.4%, 동남권이 1.4%, 강원권이 0.9%이

고, 제주권은 관련 학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로 편중 현상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4-9〉 사회적경제 및 NGO 학교 지역별 재적생 현황

지역	학제	사회적경제 계열		NGO 계열		합계	
		재적생 수	비율(%)	재적생 수	비율(%)	재적생 수	비율(%)
수도권	전문대학	515	21.4%	-	-	515	10.0%
	대학교	40	21.4%	86	6.3%	126	13.3%
	대학원	167	57.1%	347	93.8%	514	76.7%
	합계	722	63.7%	433	89.8%	1155	71.5%
중부권	전문대학	13	16.7%	-	-	13	12.5%
	대학교	165	50.0%	-	-	165	37.5%
	대학원	67	33.3%	6	100.0%	73	50.0%
	합계	245	21.6%	6	1.2%	251	15.5%
호남권	전문대학	45	16.7%	-	-	45	11.1%
	대학교	-	-	1	33.3%	1	11.1%
	대학원	70	83.3%	18	66.7%	88	77.8%
	합계	115	10.2%	19	3.9%	134	8.3%
대경권	전문대학	-	-	-	-	-	-
	대학교	-	-	-	-	-	-
	대학원	24	100.0%	15	100.0%	39	100.0%
	합계	24	2.1%	15	100.0%	39	2.4%
동남권	전문대학	-	-	-	-	-	-
	대학교	-	-	-	-	-	-
	대학원	13	100.0%	9	100.0%	22	100.0%
	합계	13	1.1%	9	100.0%	22	1.4%
강원권	전문대학	-	-	-	-	-	-
	대학교	14	100.0%	-	0.0%	14	100.0%
	대학원	-	-	-	-	-	-
	합계	14	1.2%	-	0.0%	14	0.9%

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2). 원자료(검색일: 2022. 7. 1.).

대학의 학위과정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현황을 살펴본 결과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보인다.

첫째, 대학원 중심의 인력양성이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전문대학 과정은 농협대학을 제외하면 거의 없으며, 학부보다 대학원이 인력양성의 중심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 졸업 이후의 취업과정에서 사회적경제에 진입하는 비율보다 사회적경제에 진입한 이후에 전문적인 교육의 필요에 의해 대학원에 진학하는 경향이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수도권 편중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수도권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어 있음을 감안하더라도 70% 이상이 수도권에서 배출되고 있고, 수도권과 중부권에서 87%의 인력이 집중되어 있다. 사회적경제의 역할과 요구 등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이의 확산을 위해서는 지역 수준에서도 인력양성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지역적 편중 현상을 고려할 경우, 사회적경제 교육에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갖춘 지역별 거점대학 마련과 지원이 필요하다. 사회적경제 인력의 양성은 학위과정과 비학위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지역적으로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가 매우 적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역량을 갖춘 교육과정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관련 대학의 인력양성에 대해 지역적 안배를 통한 고등교육 차원의 양성기관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 2. 비학위과정 인력양성 실태

대학의 비학위과정으로의 인력양성은 관련 학과를 보유한 대학에서 다양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2020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성과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의 인력양성을 위한 비학위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255

명의 인력을 배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4개 대학에서 53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수강인원(261명) 대비 수료인원(255명)의 비율이 97.1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 특화된 대학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 인력의 양성에 대한 자료가 불분명하고, 정부 사업 지원을 받아 운영하는 과정을 통해 배출되는 인원의 수도 매우 제한적이다.

〈표 4-10〉 2020년 대학의 비학위과정 운영실적

구분	운영 대학	신청 인원	수강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인턴십 참가자	지역사회 문제해결 프로젝트
리더 대상	성공회 대학교	73명	46명	42명	91.3%	-	8개
학부 대상	가톨릭 대학교	137명	74명	72명	97.3%	15명	22개
	한남대학교	105명	105명	105명	100%	11명	11개
	부산대학교	42명	36명	36명	100%	38명	12개
총계		357명	261명	255명	97.15%	64명	53개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1. 2. : 8).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정부지원을 통한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한 비학위과정의 운영 특성을 김영화(2019)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2014년부터 시작한 사회적경제 리더 과정은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주최하고, 대학들이 주관하는 비학위 사회적기업가 양성과정이다. 매해 3~4개 대학을 선정하여 지원한다. 교육대상은 대학에 따라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와 일반인, 대학(원)생 전체에 개방하기도 하고, 사회적

제 조직 종사자 또는 대학 학부생에 제한하기도 한다. 교육과정은 1, 2학기 와 방학을 활용하여 총 192시간으로 운영된다. 이론 2과목, 실습 1과목, 현장학습 1과목으로 구성되며, 사회혁신, 디자인·브랜드 관리, 자원연계, 자금 조달, 홍보마케팅, 경영전략, 비즈니스 모델, 정부 제도 및 정책, 사회적기업가 정신 등을 다룬다. 사업 공모 시 교육방법으로 강의, 체험 및 실습, 토론을 필수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교육비는 기본적으로 무료 또는 소액인 경우가 많으며, 등록 시 일정 금액을 받고 출석률에 따라 80~90% 환급하는 형식을 취하는 대학도 있다. 수료 후에는 총장 또는 대학원장 및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장 명의의 수료증이 발급된다(김영화, 2019: 39).

대학의 비학위과정의 운영 대상은 기본적으로 사회적경제에 속해서 활동하고 있는 구성원이다. 이들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와 지향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식하고 있으나, 실제 운영과정에서 접하는 홍보·마케팅, 경영전략, 재무·회계 등과 같은 기업의 운영 방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일반기업에 비해 부족하며, 이러한 부분에 대해 추가적인 교육훈련을 필요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대학의 비학위과정의 운영은 그 수와 지역이 한정되어 있고, 교육내용의 다양성에 비해 개설되고 제공되는 교육과정의 수 또한 제한적이다.

대학의 비학위과정을 통한 인력의 양성은 기존 인력에 대한 계속교육 형태이기 때문에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지원대상 지역과 대학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온라인 교육을 통한 경력 향상 교육에 대한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



### 3. 대학의 인력양성의 문제점

김영화는 우리나라 사회적기업 인적자원개발의 문제를 크게 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과 균형, 교육내용의 적합성, 교수·학습 방법의 다양성, 잠재적 인재 양성 기회 확보 등의 측면에서 검토하여 5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였다(김영화, 2019: 41).

첫째, 전문교육이 취약하다. 교육 프로그램이 전문교육보다는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대량으로 교육이 가능한 기초소양 교육에 치우쳐 있다.

둘째, 사회적기업 현업 종사자 교육이 취약하다. 사회적경제 관련 조직 종사자의 18.6%만 교육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관계부처 합동, 2018).

셋째, 특정 내용에 치우쳐 있어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하지 못하다. 연구들에 따르면, 경영 관련 내용이 중심을 이루고 사회적 가치, 사회문제에 대한 공감능력 또는 이와 관련된 창조적 해결 방안을 찾는 과정, 사회적 가치를 확산시킬 수 있는 내용 등 사회적 요소들에 관한 내용은 부족하며(김덕원·김영순, 2011), 조직 설립의 초기 단계에 필요한 입문 성격의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최중석·성상현, 2016).

넷째, 교육방법이 강의중심으로 획일화되어 있다. 상술한 실태조사(관계부처 합동, 2018)에 따르면 대다수(82%)의 교육 프로그램이 강의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실습(2.8%)이나 현장탐방(0.4%) 등 체험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3% 정도에 불과하며, 강의실습 병행 방식을 택하고 있는 프로그램도 8%에 지나지 않았다.

다섯째, 사회적경제에 대한 일반국민들의 인식과 이해도 수준이 낮고,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다. 일반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관계부처 합동, 2018), 사회적경제에 대해 들어 보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47.3%나 되었고, 들어 본 적은 있으나 무엇인지 모른다는 응답자가 40.2%에 달하였다. 즉 90%에 가까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영화, 2019: 41).

김영화는 사회적경제 분야의 인력양성 전반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지만, 대학을 중심으로 하는 인력양성 체제에도 그대로 드러나는 문제이다.

먼저, 사회적경제 분야의 인력양성의 필요성이나 지금까지의 역사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체계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사회적경제가 일반적인 기업경영과 사회적 가치의 추구라는 두 상반된 축을 중심으로 구성됨에 따라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교육과정 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이유로 학교별로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정을 구성·운영함으로써 체계적인 모형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인력양성의 지역적 편중현상이 심한 편이다.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나 NGO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이외의 지방에는 학과의 수가 많지 않은 편이다.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이 집중되어 있는 현실을 고려하더라도, 인력양성의 지역적 편중현상은 대학이 사회적경제 인력의 양성과 재교육에 중요한 허브 역할을 요청받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다.

### 제3절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 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추진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2013~2017년 기간 동안 매년 3개교를 선정하여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을 지원했으며, 2018년부터는 매년 4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표 4-1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현황

연도	운영기관	수강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	교육기간
2013	부산대학교, 중앙대학교, 성균관대학교	94	86	91.5	'13. 06. 17. ~ '14. 06. 30. (13-2, 14-1학년도)
2014	부산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신대학교	90	72	80	'14. 06. 17. ~ '15. 06. 30. (14-2, 15-1학년도)
2015	한양대학교, 서강대학교, 경남과학기술대학교	95	84	90.5	'15.07.27. ~ '16.06.30. (15-2, 16-1학년도)
2016	광주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우석대학교	153	140	91.5	'16.02.03. ~ 16.12.09. (16-1, 16-2학년도)
2017	서강대학교, 우석대학교, 부산가톨릭대학교	123	108	87.2	'17.01.23. ~ '17.12.09. (17-1, 17-2학년도)
2018	(석사 수준) 국민대학교, 충북대학교	166	141	85.2	'18. 01. 07. ~ '18. 12. 08. (18-1, 18-2학년도)
	(학부 수준) 한양대학교, 대구가톨릭대학교				
2019	(선도형) 성공회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204	181	88.7	'19.02.01. ~ '19.12.06. (19-1, 19-2학년도)
	(신규확산형) 전주대학교, 강릉원주대학교				

연도	운영기관	수강 인원	수료 인원	수료율 (%)	교육기간
2020	(선도형) 성공회대학교, 부산대학교	261	255	97.7	'20. 03. 01.~'20. 12. 18. (20-1, 20-2학기)
	(신규확산형) 가톨릭대학교, 한남대학교				
2021	(선도형) 가톨릭대학교, 성공회대학교	283	265	93.6	'21. 03. 01.~'21. 12. 08. (21-1, 21-2학기)
	(신규확산형) 군산대학교, 상지대학교				
2022	(선도형) 가톨릭대학교, 군산대학교, 한신대학교	-	-	-	-
	(신규확산형) 인천대학교				

출처: 고용노동부(2022. 2. 20.: 3) 재구성.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은 대학의 전문 교육인프라를 활용해 지역과 현장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필요로 하는 사회적경제 핵심인재를 양성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함께 지역사회 문제 해결 및 사회적경제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 기능하도록 하는 것이다(고용노동부 보도 자료, 2022. 2. 20.: 3). 사업 규모는 '22년 기준, 467백만 원에 이른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경제 이론수업, 인턴십,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현장연수 및 세미나 등 비학위과정(1년)을 운영하는 대학, 대학원이다.

선도대학에서는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리더 및 관리자급 대상 과정,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지역 주민 개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 연계사업을 지원한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이 정기적으로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협의체 운영 및 공동교류 행사를 통해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한다.

그뿐만 아니라 선도대학의 수강 경험이 대학생들의 사회적경제 취창업으

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진로 프로그램의 개설을 지원한다. 규모는 총 4개교를 선정하며, 학교당 비학위과정 운영비는 116.5백만 원이다.

〈표 4-1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내용

비학위과정	세부 내용
① 전문교육과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이론, 인턴십,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세미나 등 현장 참여형 수업 운영(1년 단위 비학위과정)</li> <li>• 사회적경제 조직 리더·관리자급 대상 과정, 학부생 대상 과정 중 선택</li> </ul>
② 지역 연계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역 주민, 지자체,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해 교육과정 기획·운영</li> <li>• 지역 주민 대상 개방 프로그램 운영</li> </ul>
③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필수) 대학교육포럼(연 1회), 성과공유회(연 1회)</li> <li>• (선택) 교육자원(시설·인력) 공유, 학점교류제, 대학 간 연합사업 등</li> </ul>
④ 취창업 연계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연계 진로·취업 지원 프로그램(진로상담, 면접특강, 이력서 첨삭 등) 운영</li> <li>• 수료생 대상 사회적경제 분야 진출 이력관리('22~)</li> </ul>

출처: 고용노동부(2022. 2. 20. : 3).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은 대학에서 비학위과정을 통해 전문인력의 양성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저변 확대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또한 성과 확산을 위해 대학 간 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원과 정보 공유를 지속적으로 모색하고 있다.

## 2.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 추진 성과

정부에서 추진하는 선도대학사업에 참여한 학교 및 학과의 현황은 아래 〈표 4-13〉과 같다.

〈표 4-13〉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과정 및 학과개설 현황

교과 과정	대학(원) 및 전공명	선도대학 참여 연도	과정 개설 시기
학부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계전공'	2015	2014. 3.
	한신대학교 '사회적경제경영 연계전공'	2014	2016. 3.
	부산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센터 사회적경제 특성학교과과정	2017	2017. 3.
	한양대학교 '사회혁신 융합전공'	2014/2015/ 2018	2018. 3.
	충북대학교 '사회적기업 연계전공'	2018	2018. 3.
	전주대학교 '사회적경제 융합전공'	2019	2019. 9.
	한남대학교 사회적경제기업학과 '사회적경제전공'	2020	2019. 3.
	가톨릭대학교 '사회혁신융복합전공'	2020/2021/ 2022	2020. 3.
대학원	상지대학교 평생교육융합대학 '사회적경제학과'	2021	2020. 3.
	성공회대학교 일반대학원 '협동조합경영학과'		2010. 3.
	성공회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협동조합MBA, 공동체·도시재생전공'	2019/20/21	2017. 3.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기업 석사과정'	2013/2014/ 2020	2015. 3.
	한신대학교 사회혁신경영대학원 '사회혁신전공', '사회적경영전공'	2014/2022	2015. 3./ 2022. 3.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글로벌사회적경제학과'	2014/2015/ 2018	2015. 9.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적경제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2016/2018	2016. 3.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협동과정'	2019	2017. 9.
	우석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사회적기업학과'	2016/2017	2018. 3.
	부산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2017	2018. 3.
	한남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2020	2019. 3.
	군산대학교 일반대학원 '사회적경제학과'	2021/2022	2020. 3.

출처: 고용노동부(2022. 2. 20.: 4) 보도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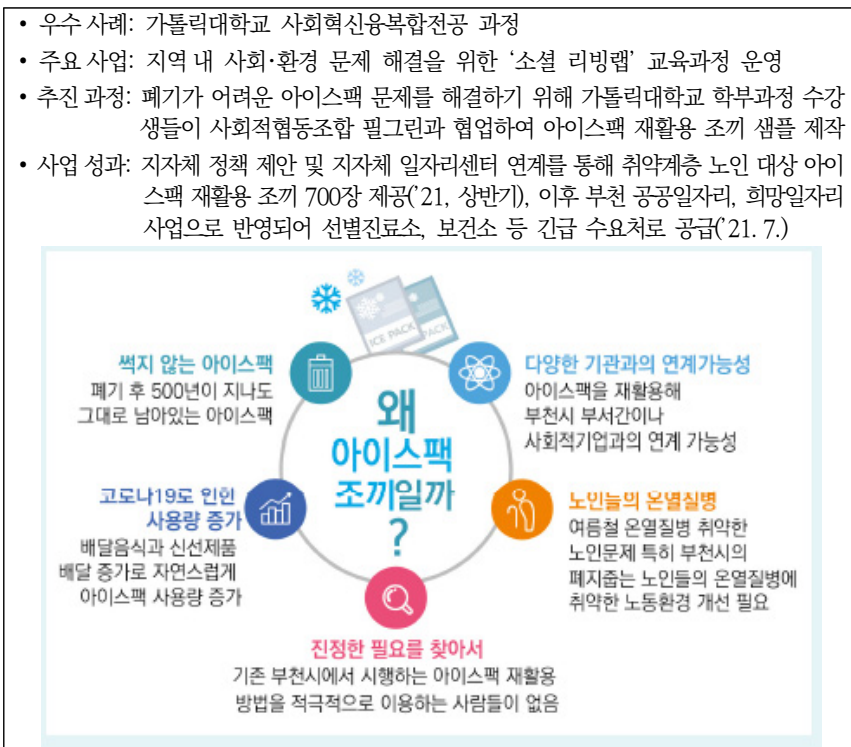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진행한 이후 정규 학위과정 및 연계전공 개설을 통해 대학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중복 지원을 제외하면, 선도대학 운영대학 21개교 가운데 사회적경제 관련 학부과정을 개설한

학교가 9개교(42.9%)이고, 대학원 과정을 개설한 학교가 10개교(47.6%)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에서 대학의 역할이 크에도 불구하고, 연간 지원대상 대학이 4개교에 불과하여 지역적으로 사업의 지속성이 중단될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경우 적어도 권역별로 1개 학교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성과 중 정부가 소개한 우수사례를 소개하면 아래 [그림 4-1]과 같다(관계부처 합동, 2022).

[그림 4-1]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우수사례



출처: 관계부처 합동(2022: 27).

### 3. 사회적경제 관련 학과의 교육과정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의 정규 학위과정 교과목 구성을 보면, 크게 사회적경제 영역, 경제·경영 영역, 사회과학 영역, 실습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를 보면 기존의 경제·경영 영역의 교육과정에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특화된 교육과정과 사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분석을 바탕으로 하는 교육과정이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실제 사회적기업에서 현장실습이나 인턴십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표 4-14〉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과정 분류

(교과 과정 분류)	사회적경제 영역	경제·경영 영역	사회과학 영역	실습
상지대 사회적 경제 학과 (28 과목)	사회적경제론	경제학 이해	친환경 농식품 유통론	사회적경제 조직 설립 실무
	협동조합과 공제론	생활과 경제	지역자원 조사론	사회적경제 조직 인턴십
	사회적기업론	사회적경제 재무회계	NGO와 NPO	소셜벤처 취창업 실습
	마을기업론	공동체 리더십과 갈등관리	사회적경제정책과 지역개발	
	한국자활 기업론	사회적경제 비즈니스 모델	귀농귀촌과 마을공동체 경영	
	사회적경제의 사상과 역사	사회적경제 조직 사업평가	사회문제와 사회적 가치론	
	사회적경제와 사회서비스론	사회적가치 평가와 측정론	사회적경제 법제론	
	국제연대와 공정무역	사회적경제 조직 의사결정론		
		사회적경제 조직자원관리		
		사회적경제 기업가정신		



(교과 과정 분류)	사회적경제 영역	경제경영 영역	사회과학 영역	종합적 사고 역량
한남대 사회적 경제기업 학과 (34 과목)	사회적경제 개론	경영학원론	사회학개론	데이터 분석방법
	협동조합론	회계와 사회	사회이슈 탐구	과학적 의사결정
	사회적기업론	경제학의 이해	공공기관과 사회적 가치	디자인 씽킹
	마을기업과 마을공동체	사회적 책임과 지속가능경영	사회적경제 법·제도 이해	수리통계기초
	자활기업과 사회서비스	사회적기업 판로 관리		사회혁신 캡스톤 디자인
	글로벌 사회적경제	사회적경제 리더십		
	사회적경제 세미나	사회적기업 마케팅		
	사회적경제 실습	전략적 사회적기업 경영		
	국제협력과 사회혁신	사회적 기업가정신		
	지역사회 혁신의 이해	소셜벤처 창업론		
	사회적 금융의 이해	소셜벤처 아이템 개발		
		소셜벤처 성장 사례		
		소셜벤처 창업 시뮬레이션		
	소셜벤처 네트워크			

출처: 서진선·박하운·박임수(2022. 4.: 34).

위의 <표 4-14>에 제시된 두 대학처럼 사회적경제와 관련된 학과로 특성화한 경우를 제외하면, 졸업 이후에 사회적경제에 필요한 교육을 충분히 받기 어렵다. 현재 사회적경제로 특성화한 대학이 많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여, 대학에서 협동 과정과 같이 학과 구성 이외에도 선택을 통해서도 역량을 키울 수 있는 과정의 개발이 필요하다.

## 제4절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

### 1. 사회적경제 대학지원 사업의 지역별 확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은 연간 4개 대학에 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에도 높은 수수료율과 대학 간 연계 네트워크의 구성을 통한 정보 공유, 비학위과정의 성공적 정착을 통한 핵심리더 양성 등의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연간 4개 대학으로 한정된 재정지원사업은 지원 대학의 지역적 격차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권역이나 지역별로 1개 대학 이상을 선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사업의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별로 선정된 대학은 해당 지역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지역 내의 다른 대학과의 연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2.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과 다양성 확대

#### 가.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 내용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은 대학생, 청년들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 호혜나 협력, 연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마인드나 자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개인화가 점점 더 심화되는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를 내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다른 측면에서 보면, 사회적경제의 이념과 가치에 대한 교육과정의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교육은 사회적경제 현장과 실습을 통해 경험되고 체득되어야 한다. 나아가 이들이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해서 필요하게 될 전문적인 업무 역량, 지역사회 문제해결 역량 등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다. 경상국립대학교(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의 사회적경제 연계전공 교육과정은 이러한 내용들을 반영한 교육과정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그림 4-2] 경상국립대학교(구. 경남과학기술대학교) 사회적경제 연계전공 커리큘럼



출처: <https://economics.gnu.ac.kr/economics/cm/cntnts/cntntsView.do?mi=10136&cntntslid=5081> 재구성.

## 나. 다양성 확보

앞에서 지적하였듯이 기업의 영리 추구하고 사회적경제의 사회적 가치 추구는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따라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도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교육과정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대표적으로 ESG 경영 확대는 기업의 사회적 가치를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일반기업으로 확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적기업의 가치 확산을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영역에 한정된 인적자원의 양성에서 전체 기업의 영역으로 사회적기업의 가치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미 경영학 관련 학과들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한 교육이 많이 보급되어 있는 상황에서 일반 경제·경영계열의 학과에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핵심교과를 개설,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사업모형의 개발이 필요하다.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이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종사할 사람이나 종사 중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서서 일반 기업의 ESG 경영의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이를 상경제열 학과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3.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연계

### 가.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교육과정 체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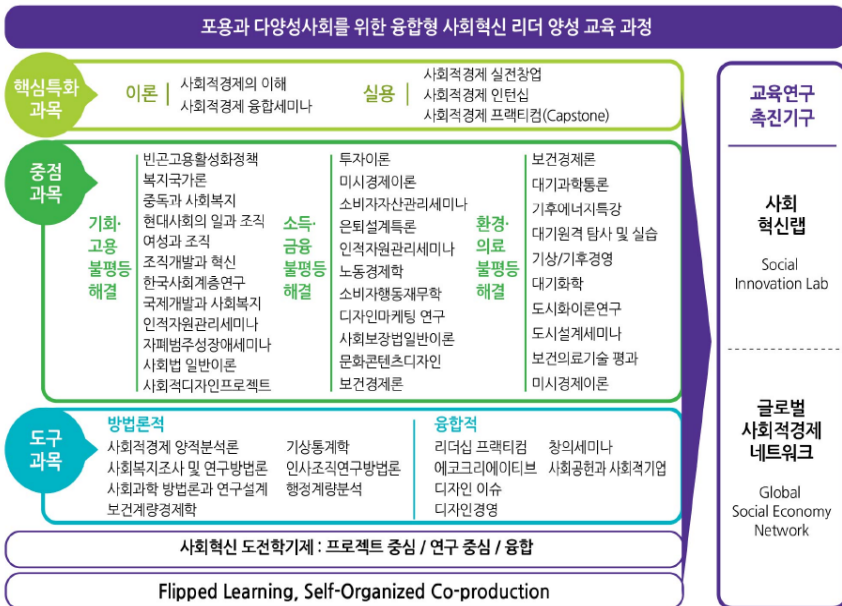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인력은 다학제적 성격을 띠고 있다. 이로 인해 분리된 과정으로 교육을 이수하고 수행하기가 곤란하며, 필연적으로 다학제적 연관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화여대가 2021년에 성과공유회를 통해 제시한 융합형 사회혁신 리더 양성 교육과정은 다학제적 성격의 사회적경제 인력의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구성의 좋은 예를 보여 준다.

이 교육과정의 구성에서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반영하는 핵심교과와 실제 개별 직무 영역에서 필요한 중점 과목, 그리고 방법론에 해당하는 도구 과목을 구분하고 있다. 이러한 구분 방식을 확장하여 지역별 특성에 맞게 재구성한다면, 지역 수준에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표준적인 교육과정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4-3] 이화여대 사회혁신 리더 양성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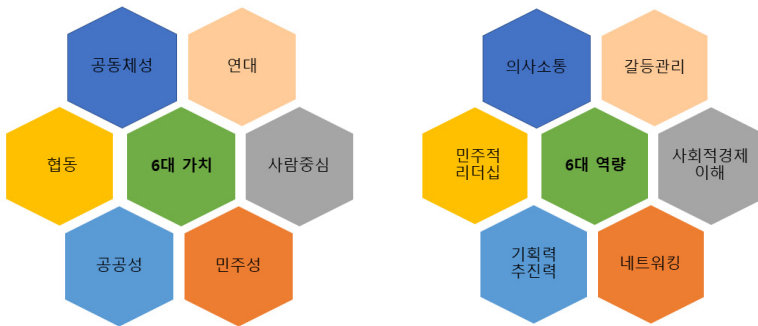
출처: 조상미(2021: 70).

지역별 표준교육과정의 구성에서는 진로를 고려하여 핵심특화 과목을 공통으로 하고, 트랙별로 중점 과목과 도구 과목을 재구성함으로써 트랙별 인력양성 프로그램의 구성이 가능할 것이다.

나. 사회적 가치나 사회적경제 가치에 부합하는 역량 중심의 교육

사회적경제 교육이 마인드, 이론과 실습교육, 전문적인 역량 교육으로서 다학제적 성격을 가진 것이라면, 실제 교육에서는 사회적경제 분야에 진출하려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를 정의하고, 이러한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의 개발·운영이 필요하다. 이 역량은 사회적경제가 추구하는 가치로부터 도출된다.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는 사회적경제 6대 가치에 부합하는 역량을 아래 [그림 4-4]와 같이 정의한 바 있다.

[그림 4-4] 사회적경제의 가치와 역량



출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019: 328, 335). 2019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자료집.

#### 4. 학부-대학원-평생교육의 연계 강화

학부 수준의 인력양성과 대학원 수준의 전문 리더 양성, 그리고 재교육훈련의 과정 등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로 인력의 수요와 필요한 역량, 교육 등에 대한 수요를 파악하고, 이 수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인력양성 체제의 구축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대학중심의 모형과 지역센터 중심의 모형을 고려할 수 있다. 대학중심의 모형은 학위과정과 일반기업의 ESG 경영을 포함한, 보다 넓은 규모의 진로를 상정한다. 반면에 지역센터 중심의 모형은 지역의 사회적경제의 요구를 반영하는 인력의 양성을 요구한다.

이 두 모형을 모두 고려하여, 대학은 학위과정의 교육은 보다 넓은 진로를 고려한 교육을 수행하고,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은 지역센터에서 주관하고 대학은 그 요구에 대응하여 비학위과정 중심의 재교육훈련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다만 대학과 관련하여 사회적경제 교육을 받으려는 일반인들의 학위 수요를 고려하여 학점은행제 방식 등을 활용해 다양한 프로그램들 간의 연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5.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사회적경제 교육은 고등교육인 대학교육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교육은 초·중등 교육과 연계될 때 보다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초·중등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경제 교육의 필요성은 자주 지적된 바 있다(최병영, 2016). 또한 초·중등 학교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도입할 경우, 미래 우수한 인재를 얻어 사회문제 해결력과 기업 경쟁력의 향상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기업가정신을 양양할 기회를 얻는다고 주장하며 사회적경제 교육 도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김혜원, 2015). 현재 초·중등학교의 '사회과' 교육과정과 사회적경제 교육은 교과 수업, 비교과 수업(창의적 체험활동), 방과 후 학교 활동 등의 형태로 이루어질 수 있다. 교과 수업에서는 기존의 교육과정에서 발견되는 공정무역, 착한 소비, 기업가정신 등 사회적경제 관련 내용을 재구성하여 수업시간에 녹여내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이다(주주자·이은주, 2019). 사회적경제 교육은 사회과에서 가장 잘 접목되기 쉬운데, 이는 '사회과' 교육의 목표와 관련성이 크기 때문이다(박도영·김혜원, 2015). 초등학교 '사회', 중등 '사회', 고등학교 '통합 사회' 과목은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사회적경제 내용을 다룰 수 있는 소재를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이들 교과목은 교과 교육학적 입장에서 통합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경제 현상도 하나의 사회현상의 하나로서 정치와 법, 문화 등 다양한 영역과 연계되어야 한다는 원리가 통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박도영·김혜원, 2015). 비교과 수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교육은 '창의적 체험활동'과 관련하여 범교과 학습 주제로 접근하는 것을 들 수 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10개의 범교과 학습 주제 중 특히 민주시민교육, 지속가능발전교육, 환경교육, 진로교육 등과의 연계가 가능하다(김혜원, 2015). 이런 경우 학교 밖 기관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적 경험이 제공되고 있거나, 방과 후 학교나 동아리 활동을 통해 학교협동조합 운영에 참여하여 사회적경제를 체험하도록 하는 것이 흔히 발견되는 형태이다(박도영·김혜원, 2015; 주주자·이은주, 2019 재인용). 이러한 지적들은 사회적경제 교육이 초·중등 교육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제시했지만, 고등교육과의 연계를 다루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과정 체계화와 함께 고교학점제 등을 활용하



여, 이를 초·중등 사회적경제 교육과 접목시키는 교육 프로그램 및 교육과정 개발이 시급해 보인다.

## 6.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연계 강화

2013년부터 추진한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통해 고용노동부는 대학 협의체를 구성하여 정보교환, 성과공유 등을 통해 성과 확산에 기여하였다. 이제는 사업참여대학의 범위를 넘어서서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에 관한 협의체로 확대 발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비록 사회적경제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대학이라도 이 협의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경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으며, 사회적경제 영역 내에서도 다른 분야의 성과를 도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연계가 강화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문제 해결 주체로서 대학의 역할을 더욱 분명하게 하고, 또 특정 사회문제 해결에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과 배출된 인력이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회적경제 분야 특성화대학을 집중 육성할 필요가 있다. 참여 대학별로 특성화가 고도화되면 협력이나 네트워크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더욱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다.



## 제5장

#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제1절 델파이 조사 개요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 제5장 | 정책 평가 및 향후 방향

### 제1절 델파이 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앞 장에서 사회적경제의 인력양성의 실태와 인력양성 정책, 대학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본 장에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한다.

이 델파이 조사는 2018년에 수립,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 7. 3.)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기획하였다.

2018년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은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수행하고 있던 인재양성 정책을 통합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수립되었다. 이 정책을 통해 그동안 사회적경제에 대한 인식의 확산, 대학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력양성의 활성화, 사회적경제 중

간조직에 대한 지원 등 나름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2020년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종합계획의 추진 실적을 평가한 자료에 따르면, 인재 유입 활성화에 6개 과제, 사회적 책임의식과 경영마인드를 겸비한 리더 육성에 9개 과제,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5개 과제,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에 6개 과제, 종합지원체계 구축에 6개 과제 등 모두 32개 과제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보고한다(관계부처 합동, 2021. 2. :2).

하지만 사회적경제 종사자의 관점에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불충분할 수 있고, 인재양성 분야별로 인식하는 성과의 크기가 다를 수 있다. 또한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방향과 전략에서 중요성이 다를 수 있다.

이에 사회적경제 활동가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여 실제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가 인식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성과를 파악하고, 향후 사회적경제에서 주력해야 하는 전략적 분야를 선정하고자 한다.

## 2. 조사 대상 및 방법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델파이 조사는 주로 현장 활동가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조사 대상자는 모두 21명이고, 이 중 대학이나 연구소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가 7명(33.3%), 기업협동조합 소속이 4명(19.0%), 기관단체 소속이 10명(47.6%)으로 중간 지원 조직과 대학 연구기관 소속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표 5-1〉 델파이 조사 대상자

이름	분류	소속
김○○	기업협동조합	도우누리사회적협동조합
김○○	기관단체	신나는조합
김○○	기업협동조합	경남사회금융
김○○	대학연구소	상지대
문○○	기관단체	경기사회적경제지원센터
문○○	기관단체	신나는조합
서○○	대학연구소	한남대학교
송○○	대학연구소	경상대학교
원○○	기업협동조합	코치 레인
윤○○	기관단체	광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	대학연구소	성공회대
이○○	기관단체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임○○	대학연구소	인하대학교
임○○	기관단체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장○○	기관단체	사회가치연대
전○○	대학연구소	인천대학교
전○○	기관단체	사회적경제연구소
주○○	기업협동조합	사회연대경제연구소
최○○	대학연구소	하남시사회적경제지원센터
하○○	기관단체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하○○	기관단체	사회적기업 밴드

델파이 조사는 2회 걸쳐서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2018년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의견과 향후 추가적으로 수립하고 추진해야

할 정책에 대한 의견을 받았고,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취합하여 향후 추진해야 할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10월 25일 ~ 31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하였고, 2차 조사는 11월 3일 ~ 8일에 걸쳐 진행하였다. 이 두 차례의 조사를 통해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방향과 전략을 수립하였다.

### 3. 조사 내용 및 방법<sup>83)</sup>

1차 델파이 조사는 2018년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 비전 세 가지 — 인재유입, 역량강화, 사람 중심 생태계 — 의 2023년 이후의 유효성에 대해 조사하였고, 그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에 대해 달성 정도와 향후 5년간의 추진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세부 전략에 대해서는 하위 과제를 함께 제시하여 전략의 추진 방향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사회적경제의 핵심 비전에 대한 조사는 비전의 유효성에 대한 9점 척도를 통해 향후 지속적 유효성을 파악하였고, 사회적경제의 핵심전략과 세부 전략은 지난 5년간의 추진 성과와 향후 5년간의 추진 필요성을 9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각각의 문항에는 추가해야 할 필요가 있는 비전과 전략 등에 대해 자유응답 형태로 의견을 조사하였다.

---

83) 조사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부록의 설문지 참조.



핵심전략과 세부전략의 현재 성과와 향후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The Locus for Focus의 요구분석 모델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이 분석방법은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을 비교하여 정책이나 방안의 요구수준을 파악하는 방법이다.<sup>84)</sup> 이 분석 방법을 통해 기존 정책의 지속적 유효성을 파악할 수 있다.

---

84)  $\{\sum(\text{필요수준} - \text{현재수준}) \times (\text{필요수준 평균})\} / N$ 으로 표현되는 Borich 요구도 분석의 응용 모델로서 좌표평면상에 필요수준의 평균을 가로축에, '필요수준 - 현재수준'의 평균을 세로축에 설정하고, 각각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한 4사분면을 만들어 필요수준과 양 수준의 차이에 따라 1사분면(HH), 2사분면(LH), 3사분면(LL), 4사분면(HL)으로 결괏값을 분류하여 분석함(Borich, 1980; 조대연, 2009).

〈표 5-2〉 1차 델파이 조사 설문 내용

구분	설문 항목	설문 내용
비전	인재유입 역량강화 사람중심 생태계	2023년 이후 유효성
핵심전략 및 하위전략	1. 인재 유입 활성화	지난 5년간 달성 정도 향후 5년간 필요성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1-2. 신증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2.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2-3.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4-2.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5. 종합지원체계 구축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5-2. 콘텐츠 및 강사 양성 등 인프라 구축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에서 취합된 자유응답식 설문 결과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세부전략을 종합하여 추진전략을 구성하고, 이 전략에 대한 선호도를 9점 척도를 통해 조사하였다.

〈표 5-3〉 2차 델파이 조사 설문 내용

구분	설문 항목
비전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핵심목표	사회적경제 내실화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제고
핵심전략	1.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2.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3.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5.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1.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과거 1-1 전략)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과거 1-2 전략) 일반 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시민·복지·종교단체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신기술 분야 인력 유입 글로벌 진출 필요인력 육성 전문직 은퇴자 인재유입 강화 직업계열 사회적경제인 양성과정 강화 취약계층 맞춤형 인재양성
2.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과거 2-1 전략)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과거 2-2 전략)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과거 2-3 전략)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과거 3-1 전략)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강사·교수 인력 풀 구축 대학 내외, 대학 간 전문교육과정 확대 사회적경제 표준 교과과정 수립 및 운용 고용보험 연계 직무교육 개설 사회적경제 조직 인턴십 강화 사회적경제 종사자 윤리교육 강화
3.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과거 4-1 전략)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과거 4-2 전략)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과거 4-3 전략) 초·중·고와 대학교육 연계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교육 활성화 직업 재교육 연계 강화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교육 기회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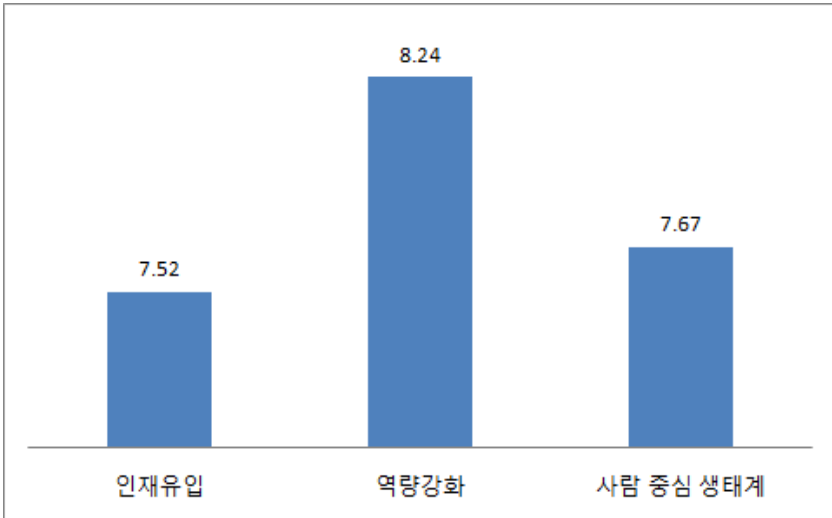
구분	설문 항목
	사회적경제 교사연수지원
	사회적경제 교육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사회적경제 대국민 홍보 주간 운영
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교육의 편익성 제고(과거 3-2 전략)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내실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교육원·대학 설립
	연구자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기관 확대
	해외 대학 교류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도성 강화
	지역단위 학습생태계 구축(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등)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과거 5-1 전략)
5. 종합지원체계 재구조화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과거 5-2 전략)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과거 5-3 전략)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연계성 강화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개설
	공모사업 컨소시엄 장려
	조직 내 학습 소모임 체계적 지원
	협의회, 연합회 등이 관리하는 교육과정 확대

## 제2절 델파이 조사 결과

### 1.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1차 델파이 조사는 각 문항별 응답은 2018년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먼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심비전 세 가지, 즉 인재유입, 역량강화, 사람중심 생태계에 대한 응답을 보면 역량강화를 가장 유효한 요소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5-1] 2018년 비전의 하위 요소별 향후 5년 유효성



다음으로,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에 대한 지난 5년간의 달성 정도와 향후 5년간의 유효성을 살펴보았다. 5개 핵심전략의 달성 정도는 모두 3.4점에서 3.8점에 이르는 수준으로 간신히 낮음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모두 7.7점에서 7.9점의 점수로 향후 5년간의 전략으로서의 가치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표 5-4〉 2018년 핵심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핵심전략	달성 정도 (A)	향후 유효성(B)	요구수준 (B-A)
인재 유입 활성화	3.81	7.90	4.09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3.43	7.85	4.42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62	7.90	4.28
플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3.55	7.71	4.16
종합지원체계 구축	3.40	7.70	4.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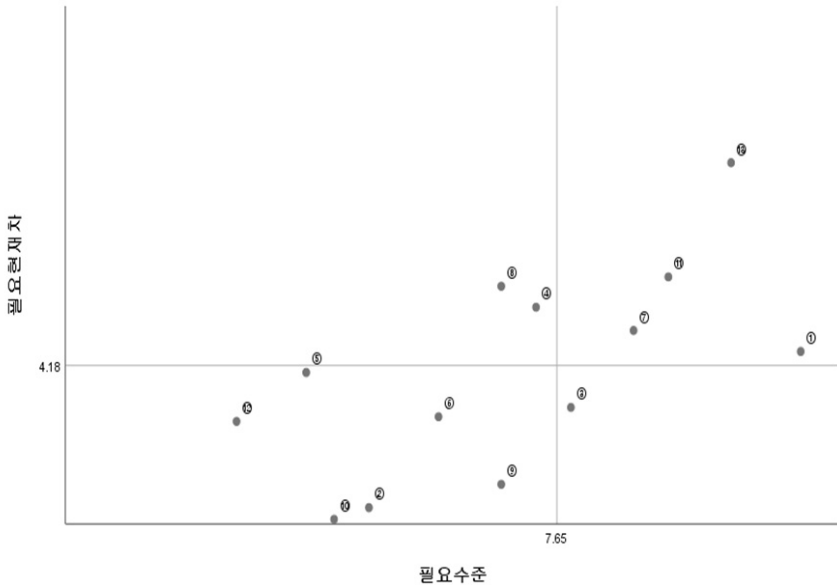
각 핵심전략의 하위전략에 대한 지난 5년간의 달성 정도와 향후 5년간의 유효성에 대한 설문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하위전략 가운데 달성 정도가 가장 낮다고 평가한 것은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2.85점)였으며, 달성 정도가 가장 높다고 평가한 것은 ‘지역 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3.90점)였다. 향후 5년간의 유효성은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8.0점)이 가장 높았고, ‘콘텐츠 및 강사 양성 등 인프라 구축’(7.19점)이 가장 낮았다.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의 차이가 가장 커서 요구수준이 높은 항목은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5.05점)와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4.56점)이었고, 요구수준이 가장 낮은 항목은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3.52점)와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3.57점)이었다.

〈표 5-5〉 2018년 하위전략 달성 정도와 향후 유효성

하위전략	달성 정도 (A)	향후 유효성(B)	요구수준 (B-A)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3.76	8.00	4.24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3.81	7.38	3.57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3.67	7.67	4.00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3.19	7.62	4.43
2-3.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	3.14	7.29	4.15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3.52	7.48	3.96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3.43	7.76	4.33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3.05	7.57	4.52
4-2.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3.90	7.57	3.67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3.81	7.33	3.52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3.25	7.81	4.56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3.25	7.19	3.94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2.85	7.90	5.05

하위전략에 대해 The Locus for Focus의 요구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보면, 현재 수준과 필요 수준의 차이가 크고, 필요수준이 높은 1사분면에 속하는 하위전략은 ①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⑦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⑩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⑬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항목이었다. 다음으로, 2사분면과 4사분면에 속하는 하위전략은 ③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④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⑧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등이었다.

[그림 5-1] The Locus for Focus의 요구분석 모델 적용 분석 결과



- ①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②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③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 ④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⑤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⑥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⑦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⑧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 ⑨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⑩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⑪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 ⑫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⑬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이 결과를 통해 볼 때,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2018년 인력양성 정책의 하위전략에 대한 의견은 신규인력의 장기적인 유입과, 이를 지원하는 인력양성 제체의 구축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 2차 델파이 조사 결과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향후 5년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새로운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



견을 물었으며, 기존의 핵심전략을 수정하여 제시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또한 각 핵심전략에 대해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통해 수집한 하위전략과 2018년 하위전략을 함께 제시하고 각 하위전략에 대한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먼저 비전과 목표에 대한 필요성을 보면, 새로운 비전으로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으로 제시하는 것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이 대다수였다(7.52점). 전략 목표로 제시된 사회적경제 내실화(6.76점)와 사회적경제 효과성 제고(7.29점)에 대해서도 높은 수준의 긍정적 응답을 하고 있다.

〈표 5-6〉 향후 5년간의 비전과 목표의 유효성(9점 만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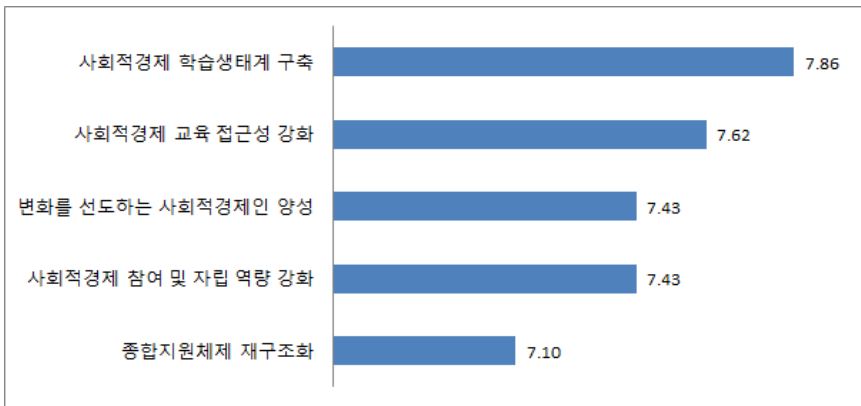
항목	내용	평균	표준편차
비전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7.52	1.08
목표	사회적경제의 내실화	6.76	1.81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제고	7.29	1.68

대체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하여 제시한 새로운 비전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에 대해 적극적인 찬성을 보이고 있어 새로운 비전으로 유효성이 있다. 전략 목표로 제시된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에 대해서도 높은 찬성률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의 내실화에 대해서는 양적 성장을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어 이를 반영할 필요도 있다.

새로운 목표를 ‘사회적경제의 내실화와 효과성 제고’ → ‘사회적경제의 강화와 효과성 제고’로 양적·질적 발전을 포괄하는 용어를 제안하고 싶습니다(2차 델파이 조사 자유의견 중).

다음으로 핵심전략으로 제시한 5가지 전략에 대한 응답 결과를 보면, 모두 7점 이상을 나타내고 있어 적극적인 찬성 입장이 많았다. 세부적으로는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7.86점),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7.62점),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7.43점),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7.43점),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7.10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3]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핵심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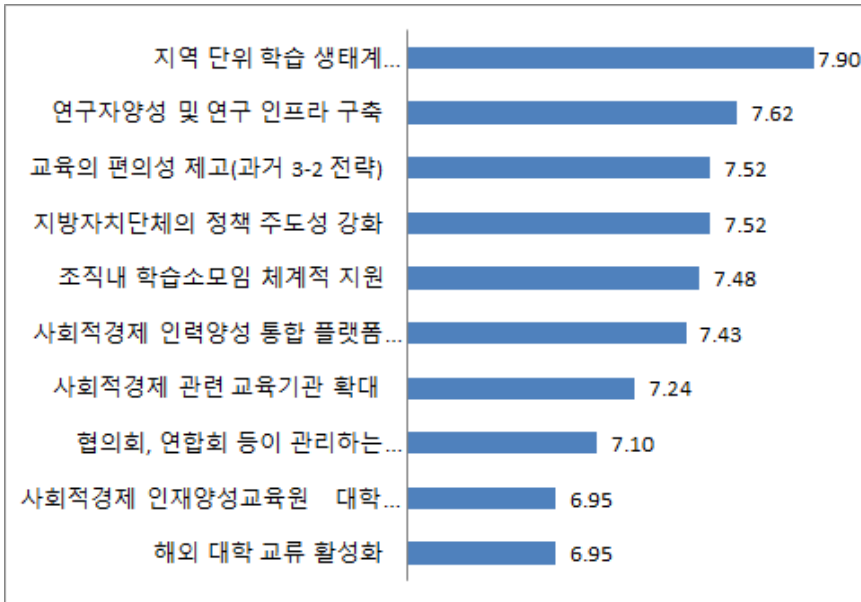
핵심전략별로 하위전략의 우선순위를 보면,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은 학습생태계의 구축이 인력양성보다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즉 장기적인 전략이라는 측면에서 단기적인 인력양성에 앞서 지속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이 전략적으로 우선한다고 보고 있다.

다음으로 핵심전략별로 하위전략의 우선순위를 조사하였다.

먼저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의 하위전략 우선순위를 보면, 지역단위 학습생태계 구축(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등)(7.90점), 연구자 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7.62점), 교육의 편의성 제고(과거 3-2 전략)(7.52점), 지방

자치단체의 정책 주도성 강화(7.52점), 조직 내 학습소모임 체계적 지원(7.48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내실화(7.43점),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기관 확대(7.24점) 등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보이고 있다.

[그림 5-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의 하위전략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의 하위전략은 지자체가 참여하는 통합 플랫폼 하에서 지역단위의 학습생태계가 작동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연구 인프라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의 하위전략을 살펴보면,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과거 4-1 전략)(7.67점), 사회적경제 교사연수 지원(7.43점),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과거 4-2 전략)(7.43점),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과거 4-3 전략)(7.38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사회적경제 접근

성 강화의 하위전략은 2018년에 제시된 하위전략이 그대로 포함되어 있어 향후 내실화 있는 운영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그림 5-5]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의 하위전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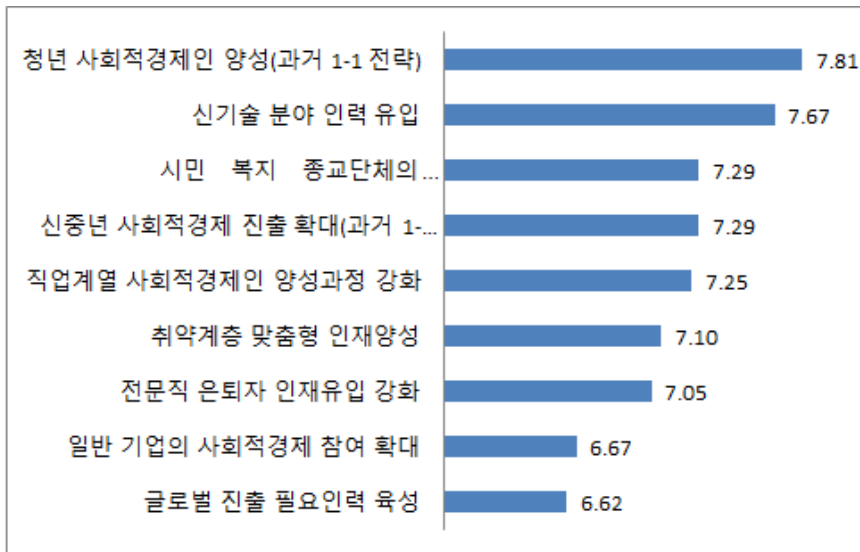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전략은 학교교육 단계에서 내실화 있는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는 결국 국민들의 인식에 달려 있고, 이를 제고하기 위해서는 학교교육에서 교사들의 인식 개선과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의 하위전략을 살펴보면,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과거 1-1 전략)(7.81점), 신기술 분야 인력 유입(7.67점)을 가장 핵심적인 하위전략으로 선택하였다. 주목할 만한 점은 디지털 전환의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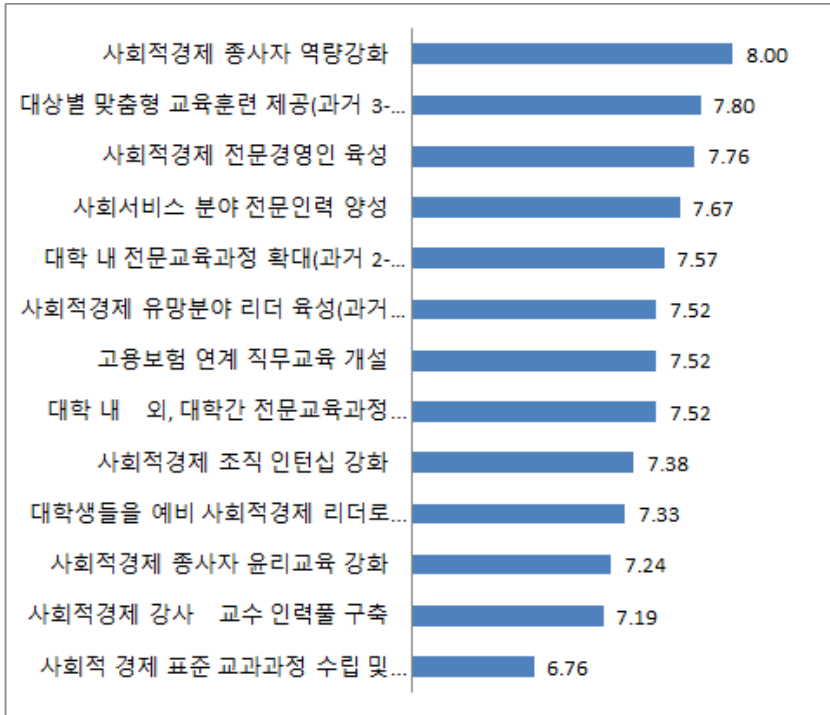
대적 흐름을 사회적경제 영역에서도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인력의 양성과 유입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그림 5-6]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의 하위전략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의 하위전략을 살펴보면,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8.00점),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과거 3-1 전략) (7.80점),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7.76점),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7.67점),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과거 2-1 전략)(7.57점), 사회적경제 유망 분야 리더 육성(과거 2-3 전략)(7.52점), 고용보험 연계 직무교육 개설(7.52점), 대학 내외, 대학 간 전문교육과정 확대(7.52점), 사회적경제 조직 인턴십 강화(7.38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5-7]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의 하위전략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전략에서는 종사자의 역량 강화와 대학의 교육과정 개선, 사회적경제 전문가의 육성 등이 하위전략으로 제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의 하위전략을 보면,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7.0점),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개설(7.76점),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연계성 강화(7.62점),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과거 5-3 전략)(7.62점),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7.57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종합지원체제의 재구조화는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 부문

의 유기적 연계가 가능하도록 전달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문가가 실제 공적 영역에서 작동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림 5-8]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의 하위전략



### 제3절 정책적 시사점과 과제

#### 1. 정책적 시사점

델파이 조사를 통해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은 단기적 인력양성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생태계의 구축이 우선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를 위해 지역 중심의 유기적인 지원체제와 전달체제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타난 구체적인 인력양성 정책에 대한 요구사항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18년에 수립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달성 정도가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회적경제가 현실적으로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흡한 상태에서 그 영역을 확대하고 인력양성 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는 점에서는 성과가 없지 않으나,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와 활동가의 시각에서는 충분하지 않다고 여기고 있다.

둘째, 2018년에 수립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에서 제시된 하위전략이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기존 전략의 유효성이 입증되었다. 따라서 기존 전략을 포함하는 새로운 추진 전략을 구성하여, 기존 전략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셋째, 현장 활동가 및 전문 연구자들의 의견으로는 단기적인 인력양성 방안보다는 장기적인 생태계의 구축이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학교교육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과 지역단위 학습생태계의 구축과 확산, 그리고 이를 지원하는 지자체 중심의 지원조직의 필요성은 단기적인 인력양성 과정보다는 토대의 구축을 통한 장기적인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보여 준다.

넷째, 디지털 전환에 따른 신기술 분야의 인력양성과 교육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경제도 일반 경제와 마찬가지로 디지털 전환의 영향을 받고 있어, 이 분야의 전문인력 양성과 경력전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섯째,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공공 부문의 전문성을 요구하고 있다. 지역단위에서는 개별 조직의 신설과 전문가의 채용 등을 통해 사회적경제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전문적인 지원을 요구한다.

## 2. 정책 과제

델파이 조사를 통해 향후 5년간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비전, 목표, 핵심전략, 하위전략 등을 개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 가. 비전

2018년에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비전은 ‘인재유입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이었고, 본 연구에서 델파이 조사를 통해 제시한 새로운 비전은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이다. 기존의 비전이 생태계 구축에 초점을 두고 있고, 델파이 조사에서도 새로운 비전에 대해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다(〈표 5-6〉 참조).

따라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향후 5년의 비전으로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제시한다.

〈표 5-7〉 2018년과 2023년의 비전 비교

2018년 계획	2023년 계획
인재유입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람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 나. 목표

2018년에 제시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는 전략목표를 제시하지 않았으나, 목표의 구체성을 위해 여기에서는 전략 목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제고’와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제시하고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의 설문 응답과 자유응답 결과를 고려하여, 현재 사회적경제 수준이 양적 성장도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향후 전략목표는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내실화’로 제시하고자 한다.

〈표 5-8〉 2018년과 2023년의 전략 목표 비교

2018년 계획	2023년 계획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의 확산</li> <li>• 사회적경제 내실화</li> </ul>

#### 다. 핵심전략 및 하위전략

2018년에 수립된 핵심전략은 ‘인재유입 활성화’, ‘사회적경제 핵심리더의 육성’을 통합하여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등 인력양성에 치중하고 있다. 2023년에 수립할 새로운 핵심전략은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등 사회적경제가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초적인 토대의 구축에 더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핵심전략의 우선순위도 학습생태계의 구축을 최우선적으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핵심전략의 변화는 델파이 조사를 통해 나타나는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당장의 인력공급보다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이다.

〈표 5-9〉 2018년과 2023년의 핵심전략 비교

2018년 계획	2023년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인재 유입 활성화</li> <li>•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li> <li>•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li> <li>•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li> <li>• 종합지원체제 구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li> <li>•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li> <li>•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li> <li>•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li> <li>•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li> </ul>

다음으로, 핵심전략에 따른 하위전략을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상위 하위전략을 중심으로 제시하면 아래 〈표 5-10〉과 같다.<sup>85)</sup>

85) 하위전략의 선정 기준은 유효성에 대한 응답 설문 결과 7.5점 이상인 경우와 다른 항목에 비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점수를 기준으로 하였음.

〈표 5-10〉 델파이 조사를 통해 선정된 하위전략

핵심전략별 하위전략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li> </ul>	
지역 단위 학습 생태계 구축(평생학습관, 직업훈련기관 등)	
연구자 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도성 강화	제외(통합)
교육의 편익성 제고(과거 3-2 전략)	통합
조직 내 학습소모임 체계적 지원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통합 플랫폼 내실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li> </ul>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과거 4-1 전략)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과거 4-2 전략)	
사회적경제 교사연수지원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과거 4-3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li> </ul>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과거 3-1 전략)	제외(통합)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과거 2-1 전략)	통합
대학 내외, 대학 간 전문교육과정 확대	
고용보험 연계 직무교육 개설	제외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과거 2-3 전략)	제외(통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li> </ul>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과거 1-1 전략)	
신기술 분야 인력 유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종합지원체계 재구조화</li> </ul>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개설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과거 5-3 전략)	
지원기관 등 전달체계 연계성 강화	제외(통합)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	

조정된 결과를 반영하고, 일부 문구를 수정하여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전략과 하위과제를 제시하면 아래 <표 5-11>과 같다.

**<표 5-11>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핵심전략	하위과제
1.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단위 학습생태계 구축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
	학습소모임 체계적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교사연수 지원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3.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연계 전문교육과정 운영 확대
4.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5.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개설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

위의 <표 5-11>에 제시된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이 향후 수립될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 방안에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겠지만, 적어도 현장 활동가와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책 수립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생태계의 구축이 단기적인 인력양성에 우선해야 한다는 점이다.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제1절 요약 및 결론

제2절 정책 제언





## 제6장 | 결론 및 정책 제언

### 제1절 요약 및 결론

창의와 혁신을 위한 비기업·비경제 부문에서의 경제적 가치 창출 노력, 그리고 기업 및 경제적 영역에서의 사회적 가치 도입 움직임을 포괄하는 새로운 흐름을 포괄하고 총칭하는 활동으로서 사회적경제 영역이 대두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사회적경제의 개념을 “투명하고 책임적인 지배구조를 구축하여, 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판매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모든 경제 활동”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으로 정의하였다.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범주에 사회적경제의 대표적 조직 형태인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만이 아니라, 전통적인 비영리·비정부단체와 민간기업 등 영리조직까지 포함하는 다양한 차원의 조직을 포괄하고자 하였다. 이는 사회적경제 정책이나 사업 추진에 있어서, 현재 우리나라의 법률상 체계로 규정된 공식적 사회적경제 조직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 네 가지 유형으로 국한된 조직 형태의 범주를 넘어서는 것으로, 사회적경제의 역동성과 스케일링(규모화) 촉진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였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핵심적인 특징은 수익사업과 비즈니스 모델, 사회적

가치 확장과 사회적 임팩트(social impact), 소유관계와 지배구조(governance)의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전통적인 기업의 비즈니스 방식과 유사한 독자적 비즈니스 모델을 갖추면서도, 조직 자체의 확장보다는 유사 사업의 확산과 타 조직 지원, 그리고 지식과 노하우의 공유 등 일반 영리기업과는 다른 차별적 양상을 보인다. 또한 소유관계와 지배구조 측면에서 사회적경제 조직은 독과점 등 시장 지배력이나 고착효과, 비대칭 정보 등 '시장실패'가 발생하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살피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의 활성화는 시장실패로부터 가장 큰 피해를 안게 되는 거래 관계자들이 해당 영역에서 관련 조직을 설립·소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과 동등한 차원의 사업이 된다.

사회적경제에 있어서 교육·인력 정책은 한편으로는 OECD의 권고안과 같이 다분히 문화적이고 기초(소양)교육적 접근을 통해 널리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문화적 측면과, 사회적경제 조직에 직접 참여하는 사회적기업가 그리고 사회적 기업가정신으로 무장한 종사자 등 관계자의 역량을 제고하는 종합적인 인적자원개발 사안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와 해당 조직의 결과물은 전통적 영리기업의 특성인 수익성 추구하고 전통적 비영리조직의 특성인 사회적 가치 추구라는 두 가지 접근의 조합으로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이를 토대로 개발한 사회적경제 인적자원개발 모형은 사회적경제 자원 활용 방식의 비효율성과 사회적경제 활동 영역의 협소함 문제, 불필요한 정부규제 해소 및 적극적인 스케일링 지원 등 현재 우리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안고 있는 과제를 구조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아가 내부적으로는 조직의 혁신, 그리고 외부적으로는 기업 영역에서의 참여, 기술혁신과 요소비용 감소, 새로운 사회적 임팩트 기제의 도입 등 생산가능곡선의 상향 이동 가능성도 제기하였다.

제3장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민간 부문에서의 인재육성 실태와 과제를 살펴보았다. 정부는 이미 중앙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하여 발표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18년)을 통해 부처별 개별 사업을 전체적인 정책패키지로 묶어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정책이 정부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추진에 있어서도 우선순위를 차지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을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분류하고, 별도의 관리 체계도 갖추었다. 다만 각 부처가 정책 전달체계로 활용하고 있는 각 부처 산하 혹은 유관기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제외하고는 각각의 고유 업무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추가되는 방식이어서, 각 부처 전달체계상의 기관·관계자들 간의 네트워크 형성 및 역량 강화 노력이 과제로 제기되었다.

정부 차원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책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지고 있다. 2021년 10월 현재,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관련 증장기종합·단기추진 계획을 수립, 추진하는 비율은 광역지자체 100%, 기초지자체 35.0%에 이른다. 또한 광역 지자체 단위로 평균 7.6개, 기초 지자체 단위로는 평균 2.5개의 사회적경제 관련 조례가 제정, 운영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인재육성 정책과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정책적 체계가 상당 정도 갖추어진 것이다. 또한 지역에는 중앙부처 및 광역·기초 지자체의 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이 존재한다. 중앙부처의 전달체계와 지자체 차원의 전달체계가 중복될 여지도 있지만, 현장그룹과 긴밀한 소통과 협력체계를 위해 중간지원조직들 간 연계·협력 체계가 갖추어지고 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 수는 2만 8,035개에 달하며, 229개 기초 지자체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포함)별로는 한 지자체당 122.4개에 이른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지역적 분포는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에, 대도시보다 농어촌에 편중되고 있다. 분포 양상도 광역시는 인구 규모가 중위권에 있는 기초지자체에, 그리고 광역도는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 본 연구가 중점으로 파악하고자 한 관내 교육훈련기관과의 관계 및 근접성 여부와 관련하여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 등 모든 유형이 관내 대학 수와 직업훈련기관 수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경제 조직이 관내 대학이나 직업훈련기관 소재 지역을 입지로 선정하고 있거나, 이들 대학 및 훈련기관의 도움을 받아(spill-over) 사회적경제 조직이 설립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리고 지역 정주여건이나 관내 경제활성화 정도, 지자체의 세출 규모 등은 입지 결정에 관계가 없거나, 부정적 관계를 나타낸 것과 대비된다. 전국의 대학과 훈련기관 전반에 대해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한편 사회적경제를 이루는 주요 원천으로서 비영리·민간 부문은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 측면이나 인력 공급 측면에서 그 역할이 작지 않다. 그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 부문 종사자 대상의 프로그램에는 사회적경제와 공유할 수 있는 조직경영기술, 리더십·기업가정신 등의 내용도 적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경제에 대한 비영리·민간 부문의 초창기 관심이나 열기가 현재는 제대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는 비영리·민간 부문의 자체 인력양성에서의 어려움, 표준화된 교육과 인재양성 프로그램의 미흡, 영리적 마인드 형성에 대한 소극성 등 부문의 내부 문제가 적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비영리·민간 부문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나 인재육성 과정이 빈약하다는 점, 그리고 정부의 일자리 정책에

서 비영리·민간 부문을 소외시키고 있다는 점도 주요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제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변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사회적 위기에 직면하여,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정책은 새롭게 중앙과 지역 그리고 민간단위의 정책과 사업체계를 재구조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부의 정책 수립과 추진과정에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 기능과 지역 우수사례의 정책적 확산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 전달체계 측면에서는 각 부처별로 구축하고 있는 중앙단위 중간지원조직의 역량체계와 지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적 관계망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의지와 조례 등 각종 사업추진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정책과 사업기획이 필요하다.

한편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에 사회적경제 조직이 더욱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부정책에서 우선순위는 물론 예산 등 지원 방안에 있어서도 ‘사회적경제 특별지구’ 지정과 같은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과 이전 등 입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무엇보다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접근성이 꼽힌 점도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들 대학과 훈련기관 전반에 대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을 재점검하고, 사회적경제 인재정책과의 효율적인 연계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더불어 비영리·민간 부문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사회적경제와의 연계·협력 정책을 수립하여 사회적경제의 기반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

제4장에서는 사회적경제와 관련한 대학의 역할과 과제를 다루고 있다. 사회적경제는 제2장에서 정의한 맥락과 마찬가지로 ESG 경영의 확산이나 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확대 등으로 그 영역이 크게 넓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적경제를 위한 인력양성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과 같

은 사회적경제 영역에 국한되지 않고, ESG 경영이나 지속가능목표 달성을 추구하는 기업 혹은 비영리기구들에게도 필요로 하는 인력의 양성 및 공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적인 부문으로서 대학의 필요성과 가능성이 생긴 것이다. 과거에 대학원을 중심으로 NGO 전공의 대학원 학위과정이 비영리 부문의 인력양성의 역할을 해 왔다면, 앞으로는 다양한 전공 영역과의 연계·융합을 통해 사회적경제 영역의 취업과 창업을 지원하는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에서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핵심 리더의 양성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대학의 인력양성 실태는 사회적경제 영역의 전공과 NGO 계열 전공으로 구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전공계열의 재적생 수가 1,133명으로 약 70.2%를 점하고 있고, NGO 전공계열이 482명으로 29.8%를 점하고 있다. 또한 전체 인력양성의 74.1%가 대학원 전공으로 대부분이 대학원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다. 인력양성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전체 재적생의 71.5%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중부권 15.5%를 합할 경우 거의 대부분의 인력이 수도권과 중부권에 집중되어 있다. 대학의 비학위과정의 운영은 정부의 지원을 받아 이루어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2020년 대학의 비학위과정 운영 실적을 보면, 357명의 신청을 받아 255명이 수료하여 97.2%의 수료율을 보인다. 그리고 대학의 비학위과정은 주로 사회적경제에 속한 인력에 대한 전문교육의 성격을 띠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지원은 2013년부터 고용노동부가 사회적경제 선도대학사업을 추진하면서 시작되었다. 2018년부터는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4개교를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선도대학에서는 전문적 교육과정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리더 및 관리자급 대상 교육과정

과 대학생 대상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사회적경제 조직과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 및 지역주민 개방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연계사업을 지원한다. 또한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대학이 정기적으로 모여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노하우를 공유하는 사회적경제 선도대학협의체 운영 및 공동교류 행사를 통해 대학 간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있다.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4개 대학에 한정하고 있는 선도대학사업을 적어도 권역별로 1개 대학 이상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학의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을 타 전공과의 연계·융합 등을 통해 다양화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ESG 경영의 확산을 고려한다면, 사회적경제 핵심 교육과정을 구성하여 타 전공과의 연계 운영을 통해 인력양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셋째,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하는 체계화된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표준 교육과정의 구성과 운영이 필요하다. 넷째, 사회적경제의 저변 확장을 위해서는 초·중등교육에서 사회적경제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대학과의 연계 운영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5장에서는 향후 사회적경제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전문가와 활동가를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수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2018년에 수립,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관계부처 합동, 2018. 7. 3.)의 성과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향후 사회적경제 인력양성 정책의 방향과 전략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다. 주로 현장 활동가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전문 연구자 21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는 2018년에 수립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의 성과를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하고 있

는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에 대해 달성 정도와, 향후 5년간의 추진 필요성을 조사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조사에서 취합된 자유 응답식 설문 결과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에서 제시한 세부전략을 종합하여 추진전략을 구성하고, 이 전략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의 달성 정도는 모두 3.4점에서 3.8점에 이르는 수준으로, 간신히 ‘낮음’ 수준을 벗어나고 있어 현장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의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향후 5년간의 전략의 유효성에 대해서는 모두 7.7~7.9점의 점수로 향후 5년간의 전략으로서의 가치도 여전히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The Locus for Focus의 요구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하위전략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①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⑦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⑪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⑬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등 네 가지 항목의 요구수준이 높았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비전과 목표, 핵심전략, 하위전략을 선정하였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의 향후 5년의 비전으로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목표로 ‘사회적경제의 확산’과 ‘사회적경제 내실화’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도출된 핵심전략과 하위전략을 제시하면 아래 <표 6-1>과 같다.



〈표 6-1〉 델파이 조사 결과: 핵심전략과 하위과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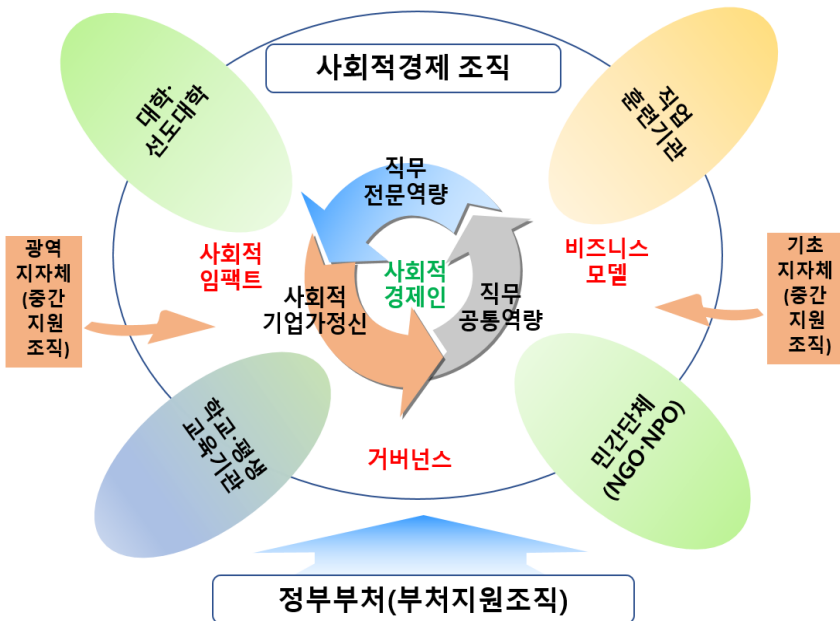
핵심전략	하위과제
1.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지역단위 학습생태계 구축
	인력양성 통합플랫폼 구축
	연구 인프라 구축
	학습소모임 체계적 지원
2. 사회적경제 교육접근성 강화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지역주민의 교육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교사연수 지원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3.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인력 양성
	대학연계 전문교육과정 운영 확대
4.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5.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지자체-대학-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
	공공기관 사회적경제 담당부서 개설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반영한 핵심전략의 변화는 현장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당장의 인력공급보다는 지속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생태계의 구축에 더 중점을 둘 것을 요구하는 것을 반영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결과는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정책이 관련 생태계의 구축 및 활성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본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생태계는 사회적경제 조직을 중심으로 중앙 및 지방정부, 대학 및 직업훈련기관, 학교와 평생교육기관, 그리고 민간단체 등이 참여 혹은 지원하는 체계로서 아래 [그림 6-1]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은 조직 창업자 혹은 종사자의 사회적 기업가정신과 직무역량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경제인으로서의 상(像)이 구현되어야 한다. 그리고 사회적경제 조직은 비즈니스 모델과 거버넌스를 토대로 사회적 임팩트에 지속적으로 도전하는 상을 상징할 수 있다.

[그림 6-1]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생태계



출처: 연구진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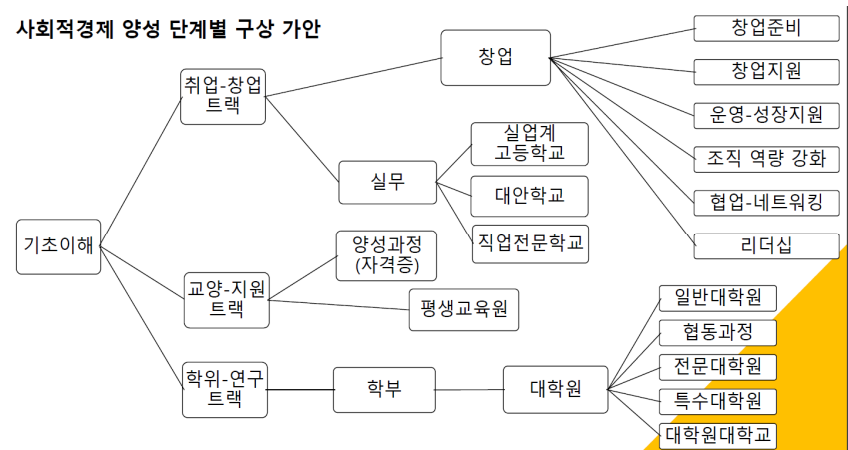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생태계는 본질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의 자치와 자율성에 바탕을 두어야 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지원과 여건 조성의 역할을 담당해야 할 것이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자와 종사자가 사회적 기업가정신 및 전문적인 직무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대학과 직업훈련기관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리고 학교와 평생교육기관은 청소년 및 일반시민 대상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기초소양 및 이해도 제고에 대한 교육을 광범위하게 진전시켜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사회적경제와 그 조직은 비영리·민간 부문을 적극적으로 연계·협력함으로써 사회적경제의 인력 충원과 프로그램 확산의 중요한 근거로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제2절 정책 제안

### 제안 1.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단계별 청사진 마련

[그림 6-1]에 제시한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육성 생태계 체계는 [그림 6-2]와 같은 단계별 체계가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 취업 및 창업 트랙과 교양 트랙, 그리고 학위·연구 트랙으로 나눈 HBM 사회적협동조합(2020)의 체계는 참조할 만하다. 첫 번째 단계로서는 청소년과 일반시민의 전반적인 기초적 이해가 중요하며, 이는 학교와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 대학 평생교육기구 등의 기관에서 담당할 수 있다.

[그림 6-2] 사회적경제 양성 단계별 구상 가안



출처: 지역연계형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화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보고서, HBM 사회적협동조합(2020).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성(자격증)과정과 취창업 과정을 통해 이들 청소년과 시민의 진전된 사회적경제 수요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전국의 평생교육기관과 부처 및 지자체별 중간지원조직이 담당할 수 있다. 그리고 NPO·NGO의 민간 부문 인력이 사회적경제로 입문할 수 있도록 민간단체와 자원봉사센터 등 비영리 부문 중간지원조직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와는 별도로 (전문)대학이 사회적경제 교육 커리큘럼을 광범위하게 제공하는 부분도 두 번째 단계와 관련이 크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였듯이, 전국의 340개 대학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설립 및 성장에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 사업의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대학은 학위·비학위 관련 교육과정을 설치하여 학생과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사회적경제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단계는 조직의 성장단계로서 창업자와 종사자가 조직역량, 협력역량, 비즈니스 역량, 실무역량 등을 갖출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단계이다. 사회적경제에 참여하는 개인으로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혹은 직업훈련기관의 직무과정을 통해, 그리고 중간지원조직이 제공하는 전문적인 컨설팅 과정을 통해 관련 전문역량을 형성할 수 있다.

단계별 체계와 관련하여, 본 연구 제4장 ‘제4절 대학의 인력양성 방안’에서 ‘3. 교육과정의 체계화와 연계’의 다학제적 성격을 반영한 교육과정 체계화, 사회적 가치와 기업가정신에 부합하는 역량중심의 교육, 그리고 ‘4. 학부-대학원-평생교육의 연계 강화’ 및 ‘5. 초·중등과 고등교육의 연계 강화’, ‘6.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연계 강화’ 등은 참고할 필요가 있다.

## 제안 2. 대학연합의 사회적경제 교육·인재양성 기구 설치·운영

본 연구(제4장 제4절)에서 지적하였듯이, 현재의 사회적경제 선도대학 및 대학 지원정책만으로는 사회적경제 이해도 제고 및 교육훈련을 위한 대학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가칭)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아카데미’ 설치와 운영을 통해 대학별 사회적경제 교육(선도대학)의 개별적 분산으로 인한 한계와 지역별 편중의 문제, 배출인력의 수급 문제 등을 해결할 필요가 있다. 여러 대학의 관련 교수와 연구진들이 연합하여 온오프라인 스쿨을 신설하고, 이를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혹은 사회적경제 대학협의체 등에서 운영할 수 있다. 교육과정으로는 비대면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온라인 교육에 활용하며, 대면교육은 지역별로 순회하면서 실습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사례를 경험하도록 할 수 있다. 집중이수제 등이 활용되어 시행할 수 있다.

‘(가칭)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아카데미’에는 대상을 비단 대학생들로만 국한하기보다는, 여러 범주의 청년 그룹을 참여시킬 수 있다. 졸업한 청년들은 학점은행제 등을 통해 학사제도 내에서 각 대학의 규정으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들의 경우 학점이수, 학위 등의 측면에서 대학 간 이질적 학칙규정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교육 차원에서 고등교육 학제 이수의 공유가 가능해진다면 이는 대학의 혁신과도 연결될 것이다.

## 제안 3.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공동체 교육과정 운영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천력 있는 인력양성이라는 점에서, 대학의

사회적경제 교육 확산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지역공동체 교육의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 이 역시 개별 대학 차원에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관련 대학 학과들의 협력적 참여를 바탕으로 대학과 지자체 간 협력을 통해 지역공동체 및 사회혁신 교육, 지역이 필요로 하는 지역인재 양성교육 프로그램을 지역단위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자체-대학 협력 기반의 지역혁신플랫폼 사업<sup>86)</sup>이 실행 중이나, 지역공동체 교육은 찾아보기 힘들다. 울산·경남 지역혁신플랫폼은 현재 예외적으로 지역공동체 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나<sup>87)</sup>, 이마저도 지역공동체 교육이 일부 학과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지자체의 주도성이 약하다는 한계가 있다.<sup>88)</sup> 대학생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인재양성체계 기반 조성의 차원에서도 지역공동체 교육과정을 사회적경제 교육의 핵심으로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는 사회적경제가 지역사회 문제 해결, 넓은 의미의 지역혁신의 역량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

#### 제언 4. 중간지원조직의 역량 강화 및 거버넌스 정비

본 연구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중앙부처와 지방정부의 정책 전달 및 사회적경제 생태계 형성을 위해서는 중앙 및 지역 단위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86) 교육부가 주관하는 지역혁신사업으로서 '20년 1,080억 원/3개, 8개 시도 → '21년 1,710억 원/4개, 8개 시도 → '22년 2,440억 원/6개 확대

87) 경남은 현재 공동체 관련 핵심분야로서 '스마트 공동체'를 운영하며, 스마트시티 건축 및 토목 관련 학과, 인문계 중에는 사회학과 및 일부 법학과 등이 참여하고 있음.

88) 현재 공유대학교육과정은 지역학 교육과정이나 지역공동체 관련 과제가 부재하며, '지역의 산업만 있는 플랫폼 사업'이 되고 있음. 지역 인재들이 왜 지역에서 교육받지 않고, 일하지 않으며, 떠나가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공동체 혁신이 시작될 수 있음. 또한 대학 공동체 혁신 교육은 지역과 사람, 기업, 대학, 공동체를 중심-주변이라는 이분법적, 위계적 관계로 인식하는 틀을 타파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함.

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중앙단위의 부처별 중간지원조직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일부 기관을 제외하면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기관 본연의 업무에 부가된 사항들이다. 기관 고유 업무에 사회적경제 관련 사업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이다. 따라서 각 부처 전달체계상의 기관·관계자들이 관련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례적인 연수와 교육훈련 구조가 요구되며, 이들 기관 담당자들 간의 네트워크 및 협의체 형성도 필요하다.

그리고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한편으로는 중앙부처의 사업을 전달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지역 생태계 형성을 위해 지자체, 대학, 산업체 등과의 네트워킹을 주도한다. 또한 관련 콘텐츠를 개발·운영하며, 기초단위 사회적경제 사업을 지원해야 하는 등 부담이 가중되는 것이다. 그러나 광역단위 중간지원조직은 각 부처로부터의 예산 및 사업을 통합적으로 운영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광역 중간지원조직은 지방자치단체의 전적인 협력과 지원을 구할 수 있기에 지역 생태계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이 가능하다. 따라서 중앙부처의 지역전달을 위한 중간지원조직과 지자체 단위의 중간지원조직 간 역할과 협력망 체계를 지역단위에 맞게 자율적으로 재조정 혹은 재구조화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

기초단위에서의 중간지원조직은 지자체가 시·군·구별로 양상이 달라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광역시 단위에서는 구·군 단위보다 ‘시’ 단위에 정책 집행의 무게가 실리고, 광역도 단위에서는 ‘도’ 단위보다 시·군 단위에 정책 주도성이 형성된다. 특히 광역도의 ‘군’ 단위 지역은 개별적으로 센터 운영이 어려운 경우도 많아, 특정 분야 사업에 대해 인근의 몇 개 지방자치단체가 조합을 구성하여 센터를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sup>89)</sup>

89) 지리산관광개발조합은 10년 전에 전남의 구례·곡성, 전북의 남원, 경남의 산청·함양·하동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운영하고 있음.



## 제언 5.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개발 활성화 ①

현재 사회적경제 조직과 소속 종사자는 모두 특별한 제약 없이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대상에 해당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소기업, 특히 종사자 10인 미만의 영세기업 수준으로서 중소기업 일반이 부딪히는 훈련 부진 현상을 겪고 있다. 이는 ‘사업주훈련’ 측면<sup>90)</sup>과 ‘근로자 훈련’ 측면<sup>91)</sup> 모두에서 그러하다. 따라서 사회적경제 조직과 소속 종사자의 직업훈련 활성화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있어서도 ‘사업주훈련’ 활성화와 소속 종사자의 ‘개인훈련’ 활성화의 두 가지 방향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먼저 사업주훈련 활성화 측면<sup>92)</sup>으로, 중소기업 사업주훈련의 일반적 활성화 방안<sup>93)</sup>에 의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적경제 사업주훈련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구체적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의 경영 전략을 전제로 조직 진단과 종사자 역량 진단을 실시하고, 이를 기초로 한 개인별 역량 개발 계획의 수립을 지원할 수 있다. 최근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공단 지부·지사를 통한 ‘기업훈련 주치의’를 통해 일반기업에 동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그러나 사회적경제 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공단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효과적이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지역 중간지원조직이 동 서비스를 직접 코디네이팅하고 제공

90) 사회적경제 조직의 훈련 부진 중 사업주훈련 측면에서의 부진은 훈련 이후 낮은 기대수익(특히 기업 내부 인프라 부재(학습 전문가 부재 등)와 체계적 학습 설제 불가능으로 훈련 이후 성과 저조, 위탁훈련에 필요한 훈련시간 확보 불가능(특히 만성적 인력난하에서 사전 계획에 따른 훈련시간 확보 어려움) 등에 기인할 것으로 판단됨.

91)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의 훈련 부진은 일반적인 유형을 따르는 것으로 보임. 일반적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훈련 이후 투자 금액에 대한 회수 시간이 짧아 교육훈련에 대한 투자 유인이 낮고, 학력이 낮을수록 교육훈련에 대한 심리적 부담감 때문에 자발적으로 교육훈련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음.

92) 개인훈련 활성화 방안은 ‘제언 6’에서 다룸.

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에서 집체식 교육(자체 및 위탁)의 현실적 어려움을 고려하여 일터에서 체계적 학습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화된 현장훈련’(Structured OJT)의 실시 지원도 요구된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에 공통된 현장훈련 수요에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다수 사회적경제 조직의 공통 업무에 부여되는 S-OJT 가이드라인을 개발, 보급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에 S-OJT 전담자 대상의 교육훈련 통해 전담자를 육성할 수도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내부의 학습조직화를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다. 현재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중소기업의 일상적 학습활동에 대한 지원을 위해 학습조직화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의 현장훈련 활성화와 연계하여 사회적경제 조직 중 학습조직 설치를 희망하는 조직을 발굴하여 학습조직화 지원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다.

끝으로,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일터 외부에서의 교육훈련 수요가 존재할 경우 고용노동부의 사업 분야별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 지원기관 혹은 지원기관이 선정한 교육훈련기관을 컨소시엄 주관으로 하여, 사회적경제 조직들과의 협약하에 운영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복수의 사회적경제 조직에서 발생하는 일터 외부의 교육훈련에 대한 차별화된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특히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저감 등 사회적경제 조직의 새로운 비즈니스 영역 개척에 필요한 교육훈련 수요 대응 차원에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제안 6. 직업훈련을 통한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개발 활성화 ②**

‘제안 5’ 논의의 연장선에서,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의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및 활용 활성화에 초점을 둔 개인훈련 활성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먼저 사회적기업 근로자 대상 경력설계 컨설팅 활성화이다. 이는 사회적경제 지원기관에서 사회적경제 종사자 개인을 대상으로 해당 종사자의 일 경력과 현재 보유 역량 진단을 기초로 향후 경력개발 방향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현재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중장년 새 출발 카운슬링’ 사업의 운영기관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등 사회적경제지원기관이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교육훈련 참여를 직접 지원하는 경우이다. 사회적경제 종사자가 개인훈련에 참여할 경우 소속 조직(기업)에서 훈련 시간을 단축하도록 하고, 단축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 중 5인 미만 극소기업으로서 근로시간당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적극적인 검토가 가능할 것이다.

또한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대상의 교육훈련 과정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전술한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을 활용할 수 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사업은 현업의 사회적경제 종사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미취업자 혹은 일반근로자 중 사회적경제 조직 취업 희망자와 사회적경제 조직 종사자 중 타 분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전직을 희망하는 이들도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을 위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기초 이해, 사회적경제 조직의 미래, 사회적경제 조직 관련 전문역량 과정 등 사회적경제 종사에 필요한 교육훈련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한편 사회적경제 조직의 사업주훈련 및 종사자의 개인훈련에 대한 차별화된 재정지원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적경제 조직이 중소기업의 일반적 특징을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서 영리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할 때 고용보험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사업주훈련

지원 등에서 우대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적경제 조직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서 직접 훈련비용은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학습조직화 사업 참여 시 비용 지원을 우대할 수 있다. 그리고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을 통한 사회적기업 사업주훈련 제공 시에도 훈련기관의 운영 비용 지원을 우대하는 조치도 가능하다. 또한 사회적경제 종사자도 상대적으로 저임금 일자리에 일하거나 사회적 가치 달성을 위해 경제적 이득을 포기하는 점을 고려하여, 사회적경제 종사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참여 시 훈련생 개인자 부담 비율을 낮추는 등의 조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제안 7. 비영리·민간 부문의 사회적경제 인재육성 활성화 방안

비영리·민간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양성 방향은 사회적경제에서 추구하는 방향에 더해 비영리 부문 고유의 특성을 살려 통합·연계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 비즈니스적 사업 마인드와 역량, 기술이 필요한 사회적경제의 특성과 오랜 기간 다양한 영역에서 공익적인 사회문제를 해결해 온 비영리 부문의 장점이 결합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한 첫 번째 방안으로, 비영리·민간 부문 내의 사회적경제 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사회적경제 관련 인재를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영리·민간 부문에서 사회적경제 활동을 확장하는 방안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등이 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하여 법적 실체를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바꾸기보다는, 비영리 내의 영리적 활동을 확대함으로써 비영리 부문 내에서 사회적경제가 구현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단체의 수익사업<sup>93)</sup>을 강

93) 「법인세법」 제3조 등에 의거하여 비영리단체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음.

화하는 방법이 강구될 필요가 있다. 현재 비영리민간단체는 ‘수익사업’이 가능하나, 이는 법인의 설립 목적과 본질에 반하지 않는 정도의 것에 한정되고 있다. 이른바 ‘목적사업<sup>94)</sup>’의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다. 만약 설립 목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사회적 문제 해결에 기여하거나 고용창출 등의 효과가 있는 경우 등으로 완화한다면, 비영리단체의 사회적경제 활동 참여를 실질적으로 활성화하는 효과가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수익사업에 대한 규제를 줄이고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예컨대, 세제혜택이나 사회적경제 조직에 지원하는 현재의 각종 제도를 비영리 수익사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지원은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의 직접지원과 세제감면, 판로지원과 홍보 등과 같은 간접지원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비영리 수익사업에도 이와 동일한 지원을 확대하여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기준으로 비영리공익법인 중 공익목적사업의 수익을 신고한 곳은 6,080개소이다. 이 중 교육(1,078개)과 의료(463개)를 제외한 단체(사회복지, 학술장학, 예술문화, 기타)는 1,135개이다.<sup>95)</sup> 비영리단체 수익사업의 인력규모를 사회적기업 수준으로 판단하더라도, 수익 사업당 5~10명의 인재를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up>96)</sup>

두 번째 방안은 비영리·민간 부문 - 사회적경제 간에 선순환 구조 확립을 통해 사회적경제의 인력 풀을 육성하는 방법이다. 이는 비영리 부문 내에 사회적경제를 확장하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적극적으로 비영리 부문과 사

94) ‘목적 사업’이란 비영리법인의 정관에 명시된 사업임.

95) 통계청(2020).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96) 2020년 말 기준으로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규모는 5인 미만 사업체 비중은 30.5%, 5인 이상 ~ 10인 미만은 28.4%, 10인 이상 ~ 30인 미만 28.2%임[강민정·박세정,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 고용노동부 고용동향브리프(2021. 12.)].

회적경제 부문 간의 선순환 구조를 확립함으로써 비영리 부문에서의 사회적경제 경험을 사회적경제로 유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서는 비영리 부문에서 일한 경험과 역량이 사회적경제 조직의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기획·설계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사회적경제에 관심 있는 청년들이 비영리 부문에서 먼저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스타트업 지원대상 선정 시 비영리 부문에서의 경력을 우대하는 등의 조치를 포함한다(박준 외, 2020).

세 번째 방안으로는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을 강화하는 일이다. 현재 비영리 스타트업은 태동 단계이기는 하나, 창업 후 성장세나 영업상의 안정성 측면에서 전망이 어둡지 않다(박희석·정현철, 2017). 이들 비영리 스타트업이 재원 마련의 원천은 대개 기업의 후원금(지원금) 65%, 정기(일시) 후원금 50%, 자체 사업모델 40%, 정부 후원금(지원금) 30% 등의 순이다.<sup>97)</sup> 사업 모델을 통한 수익창출 비중이 40%인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 스타트업은 사회적경제로의 전환, 성장의 잠재력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현재 '이로운넷'에서 서울시NPO지원센터, 다음세대재단, 아산나눔재단이 제공한 자료를 취합하여 발표한 비영리스타트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팀과 조직은 총 59개소에 이른다(2022년 4월 기준). 이 밖에도 아산나눔재단(2022년 7개, 2021년 3개), 경기도공익활동지원센터(2022년 15개, 2021년 17개, 2020년 6개), 그리고 춘천사회혁신센터 등 다양한 비영리 스타트업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비영리 스타트업의 지원사업 참여 연령 중 2030세대가 각각 83%(서울시NPO지원센터), 80%(다음세대재단), 90%(아산나눔재단) 등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비영리 스타트업 육성은 청년이 사회적경제로 유입될 수 있는 좋은 경로로도 설정될 수 있다.<sup>98)</sup>

97) <매거진 루트임팩트>. '비영리 스타트업 들어 보셨어요?'. 2022년 5월 19일. 중복 응답.

## 제언 8. 학교 및 평생교육기관과의 협력 강화

사회적경제의 가치 확산과 이해 제고를 위해서는 초·중·고 학생 및 일반 시민들 대상의 기초학습 체계가 전국적으로 촘촘하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학생들은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접근이 가능하고, 일반시민들은 시군구별 평생학습센터, 주민센터와 같은 기관을 통해 교육을 접할 수 있다. 평생학습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소관 영역이기 때문에 관련 커리큘럼을 개발하여 이식하는 과정에서 큰 장애물은 없다. 그러나 학교와 교육청은 중앙 부처(교육부) 차원에서의 커리큘럼 개발과 교육청 및 학교 단위에서의 해당 단위별 협력체계 구축이 전제되어야 한다. 먼저, 교육부와 협력하여 청소년(학생) 대상의 사회적경제 역사와 핵심가치, 그리고 각종 사례를 탑재한 교과목 개발이 초·중·고 교육과정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사회적경제 관련 강사의 학교 참여나 ‘창의적 체험활동’이나 동아리 활동 접근이 가능하다. 지역단위에서 학교 및 교육청과의 협력을 위한 단위별 지역학습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으며, 교육청과 함께 학교협동조합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수 있다. 동해삼육고등학교협동조합의 예에서처럼, 학생들은 학교협동조합<sup>99)</sup>을 통해 이론이 아닌 실천적 참여를 경험하게 된다. 학생들의 자율적 동아리 활동은 비단 학교협동조합뿐만 아니라 사회적경제 관련 다양한 실천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다.

한편 지자체에서는 평생학습기관을 통해 시민 대상의 공동체 의식, 사회

98) 이로운넷. 비영리스타트업, 비영리 변화 요구에 응답하다. 2022. 04. 19. 자. (검색일: 2022. 10. 12.).

99) 학교협동조합에서 스마트패드 충전 거치대 발명, 전국 학교로 판매하여 매출 2억 원 달성, 고용 1명 등의 성과를 냈으며, 실천적 IT 교육이 이루어짐.

적 기업가정신 등 다양한 논의와 사례가 소개될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현장 기관에서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평생교육체계에는 일반주민 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 근로자, 은퇴자, 청년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공간인 만큼, 대상별 맞춤형 교육 커리큘럼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최근 평생 학습에서 강화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모임에는 주민과 일반 주부, 청년뿐만 아니라 기업 종사자들의 학습모임까지 확대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간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제안 9. 농어촌 지역을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특별지구’ 지정

본 연구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사회적경제 조직은 인구 소멸이 우려되는 비수도권의 시군 지역에 상대적으로 더욱 활발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는 사회적 임팩트 기회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자체의 판단에 따른 측면과 일반 기업과 인구가 유출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적 판단이 어우러진 결과로 여겨진다. 비교역적 직업군 위주로 운영되는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지역사회의 수요와 지자체의 기대가 만나고 있는바, 이 같은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행스러운 점은, 현재 이들 농어촌 변방지역의 지방자치단체라 하더라도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 의지와 조례 등 각종 사업 추진 환경은 대체로 갖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지역단위에서 사회적경제 정책과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내적 환경은 구축되어 있는 것이다.

또한 이들 농어촌 지역이라 하더라도, 지역에는 평생학습기관과 직업훈련 기관, 그리고 대학 등 교육기관이 관내에 소재한다. 지역 특성상 인근 관내까지 포함하면 관련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잠재력도 예상할 수 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을 사회적경제 정책의 핵심적인 전선(front)으로 인식하



여, 기초지자체 단위로 ‘사회적경제 특별지구’ 지정과 같은 지원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평생학습도시와 같이, 지자체 대상 공모 방식을 활용하여 접근할 수도 있다. 일단 ‘사회적 경제 특별지구’로 지정을 하면, 제주도특별자치도나 세종특별자치시와 같이 행정과 사업에서 자치권과 자율권을 대폭 부여할 필요가 있다.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과 상향식(bottom-up) 의견수렴 기능을 바탕으로, 정부의 에너지는 지역에서의 성과를 정책적으로 확산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데 집중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국내 문헌〉

- 강민정·박세정(2021). 사회적기업 고용현황-인증사회적기업을 중심으로- 고용노동부 고용동향브리프(2021. 12.).
- 경기개발연구원(2012. 11.). 한국의 자본주의와 사회적경제, 제73호.
- 고용노동부(2015). 사회적경제 이슈와 쟁점 연구, p. 112.
- 고용노동부(2022. 2. 20.). 보도자료 사회적경제 핵심인재 연 200명 육성, 대학이 앞장선다.
- 관계부처 합동(2018. 7.).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 관계부처합동(2021. 12.). 문재인 정부 4년 반 사회적경제 활성화 노력과 성과.
- 관계부처 합동(2022). 2022 사회적경제 정책사업 자료집.
- 관계부처 합동(2021. 2.).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2020년 추진실적.
- 기획재정부(2017.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기획재정부(2020. 8.). 사회적경제기업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 김덕원·김영순(2011). 사회적기업가 아카데미 일반과정의 교육과정에 관한 연구. 인문과학연구, 30, 333-361.
- 김봄이 외(2019). 인적자원 역량강화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김세진(2021). 비영리단체를 위한 리더십 교육 프로그램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김수영(2013). 사회운동조직의 사회복지제도화와 미시저항, 한국사회복지학, Vol. 65, No. 2, 2013. 5., pp. 255~285.
- 김승보·김현정(2019). 『마을공동체를 통한 진로교육 활성화 방안』. 인천광역시교육청.
- 김영화(2019). 사회적기업 인적자원개발의 현황과 과제, 평생교육 HRD 연구, 15(1), 29-53.
- 김종호(2014). 우리나라 사회적기업의 과제와 발전방향에 관한 법적 고찰: 유럽의 사회적기업 발전경험과 관련하여, 法學論叢, 제38권 제3호, pp. 351~386.
- 김진영·정석호(2020)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정부의 주요 추진 과제 Pool 선정: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연구보고서, 2020-02.
- 김혜원(2015). 초·중등 학교에서의 사회적경제 교육 방식에 대한 연구, 사회경제평론 2015, vol.28, no.2, 통권 47호 pp. 205~238, 한국사회경제학회.
- 박도영·김혜원(2015). 「사회적경제 교육표준안」 활용 해설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박상희(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영역의 상호협력을 위한 현장의 과제(토론문).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공동포럼: 연대의 힘으로 만드는 변화.
- 박준 외(2020). '비영리 일자리 확충을 위한 전략 방안', "경제·인문사회

연구회 협동연구총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박지훈·배종태·강신형(2018). 사회적기업가의 사회기회 개발과정에 관한 연구, 사회적가치와 기업연구, Vol.11, No.3, pp. 57~93.

박희석·정현철(2017). 서울시 비영리스타트업 현황과 청년일자리. 서울연구원.

배종태·차민석(2009). 기업가정신의 확장과 활성화, The Korean Small Business Review, Vol. 31, No. 1.

서종식(2018).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 뜯어보기, 계간 『생협평론』, 2018 가을 32호.

서진선·박하윤·박임수(2022. 4.). 사회적경제 전공 학부 교과과정 구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경영교육학회.

손혁상·신재은·이주희(2011). 한국 개발NGO 역량현황 기초조사 및 역량강화 방안 연구. 한국국제협력단.

송소연(2021).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토론문), 2021 자원봉사와 사회적경제 공동포럼:연대의 힘으로 만드는 변화.

신명호(2019). 한국 사회적경제의 현주소와 과제, 대구 사회적경제 통합 박람회 자료집.

양광식·권성문·도승연(2021). AHP를 활용한 비영리조직의 운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 분석: 시화호 지속가능 파트너십을 사례로, 도시행정학보 제34집 제3호(2021. 9.): 91-107

엔리코 모레티(2014). 『직업의 지리학』. 김영사. 송철복 옮김.

우천식·김태종(2007). 『한국 경제·사회와 사회적 자본』. 한국개발연구원.

- 이일청(2017). 사회연대경제와 SDGs 17개 목표와의 연계, UN 사회개발연구소.
- 이정현·박현수(2022), 사회적경제와 중간조직, 대통령직속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협의회 정책기획 시리즈 17.
- 일자리위원회(2017. 10.).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 장우찬(2019). '사회연대 원리의 규범적 의미와 그 효력', "법학연구", 2019, vol. 22, no. 4, pp. 115-146 (32쪽).
- 장원봉 외(2021). 『한국사회적경제의 거듭남을 위하여』, 착한책가게.
- 장윤주(2022). '비영리조직 최고관리자 경험에 관한 연구', "시민사회와 NGO", 제20권 제1호, 335-368
- 장홍근 외(2011). 사회적기업과 인적자원전략. 한국노동연구원
- 정선희(2020). 사회적경제기업 우선구매제도 현황과 개선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조대연(2009). 설문조사를 통한 요구분석에서 우선순위결정 방안 탐색. 교육문제연구, 35: 165-187. 고려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 조상미(2021). 이화여대 사회적경제 교육현황 및 사회적경제 교육의 발전 방향, 제2회 사회적경제 대학교육포럼 발표자료, 고용노동부.
- 주성수(2019). 『사회적경제: 이론, 제도, 정책』,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성수(2020). 『시민사회, 제3섹터, 비영리섹터, 사회적경제』, 한양대학교 출판부.
- 주주자·이은주(2019). 사회적경제 교육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 = 사회적경제 동아리 담당교사들을 중심으로, 사회과교육 Vol. 58 No. 1

[2019], pp. 168~181, 한국사회과교육연구학회.

최무현·고은주(2019). 사회적기업가정신이 사회적·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지역사회활용도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vol. 29, no. 2, pp. 37-61, 현대사회와 행정.

최병영(2016). 사회적경제 교육을 위한 '통합사회' 교육과정 재구성에 관한 연구, 사회과교육연구 2016, vol. 23, no. 3, pp. 57~74, 한국사회과교육학회.

최인수·전대욱(2020). 지방자치단체 중간지원조직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최중석·성상현(2016). 사회적기업가 역량 모델링 및 교육체계 수립에 관한 연구: 경영전략 AFI Framework 1)의 구성요소를 중심으로. 韓國協同組合研究, 34(2), 83-116.

피터 드러커(1986). 『새로운 현실』, 한국경제신문. 이재규 옮김.

함병우·전주성(2020). 국제 개발복지 비영리조직 팀원의 역량개발에 대한 교육요구 분석, 역량개발학습연구, 제15권 제1호.

헨리 한스만(2017). <기업소유권의 진화>, 박주희 옮김 / 한국협동조합연구소, 북돋움(2017).

서울시NPO지원센터·공익조합동행(2019). 공익활동가의 지속가능한 삶과 활동을 위한 지원 방안 수요조사.

아름다운재단(2021). 우리는 왜 비영리조직에서 일하는가: 비영리조직의 인적자원관리와 종사자의 경력이동, Giving Korea 2021.

조선일보(2017). <더 나은 미래>, “전체 GDP 중 13% 차지... 종사자 수

만 약 63만 명 달해”. 2017. 8. 29. 자.

통계청(2020). 공익법인의 공익목적사업 수익 세부현황.

한국노동연구원(2017). 2017년 사회적기업 실태조사(I).

한국사회복지사협회(2022).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현황(기준일: 2022. 2. 28.).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5). 사회적기업 가이드북.

([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Q8EhrONhbEBvs7j8vR-nYAU\\_zxh5o5qD-IWQ9\\_WsWf0](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Q8EhrONhbEBvs7j8vR-nYAU_zxh5o5qD-IWQ9_WsWf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18). 사회적경제 대상별 역량 체계.

([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CC80j9IDl\\_8WI20a8mXQziG7sVePVH3ksEYGmKsNIy0](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CC80j9IDl_8WI20a8mXQziG7sVePVH3ksEYGmKsNIy0)).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2020). 사회적경제 기본교육안.

([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nCjoeVrIkFkuhT8RcJypDnUr\\_jdPWJcQdv70Qq\\_49x0](https://www.seis.or.kr/streamdocs/view/sd;streamdocsId=nCjoeVrIkFkuhT8RcJypDnUr_jdPWJcQdv70Qq_49x0)).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2019). 2019 사회적경제 활동가 대회 자료집.

한국산업단지공단(2022). 「전국산업단지현황통계」. 2022년 2분기 전국 산업단지 시도별 현황.

행정안전부(2021).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2021년 자원봉사센터 현황(통계 편).

### 〈국외 문헌〉

Acs, Z., Boardman, M., McNeely, C.(2013). The social value of productive entrepreneurship. Small Business

Economics, 40, 785-796.

Auerswald, P.(2009). Creating Social Value, Stanford Social Innovation Review, 7 (2), pp. 50-55.

Austin, J. E., Stevenson, H. and Wei-Skillern, J.(2006) Social and Commercial Entrepreneurship: Same, Different, or Both? Entrepreneurship Theory and Practice, 30, 1-22.

Borich, G.(1980). A needs assessment model for conducting follow-up studies. J ournal of Teacher Education, 31(1), 39-42.

Carlo Borzaga and Ermanno Tortia(2008).

Coleman, J. S.(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 J. Sociol. 1988, 94, 95-120.

Dart, R.(2004). The Legitimacy of Social Enterprise. Nonprofit management and Leadership, 14, 441-424.

Dees, J.(1998). Enterprising non-profits. Harvard Business Review, 76, 55-67.

EC & OECD(2016). Policy Brief on Scaling the Impact of Social Enterprises.

Hansmann(2012) Cooperative Firms in Theory and Practice, LTA 4/99, pp. 387-403.

Gabriela Vaceková(2016). The nonprofit sector in economic theory : Beyond mainstream explanations, p.105.



- Inthannia Elvaretha Wijaya & Perminas Pangeran(2020).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n Batik's Start-up Develop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Multicultural and Multireligious Understanding, Volume 7, Issue 9, October, 2020, Pages: 370-382
- MAIR, J. & MARTI, I.(2006), Social entrepreneurship research: a source of explanation, prediction, and delight, Journal of World Business, 41, 36-44.
- OECD(2007). The Social Economy: Building Inclusive Economies, OECD LEED programme.
- Porter, M. E. & Kramer, M. R.(2011). The big idea: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89(Jan-Feb), 62-77.
- The Nature Conservancy(2001). INSTITUTIONAL SELF-ASSESSMENT; A TOOL FOR STRENGTHENING NONPROFIT ORGANIZATIONS.
- Wijaya & Pangeran(2020). Business Model Innovation and Its Implications for Indonesian Batik's Start-up Development, Duta Wacana Christian University, Indonesia.
- Weber, C., A. Kröger, & C. Demirtas(2015). Scaling Social Impact in Europe: Quantitative Analysis of National and

Transnational Scaling Strategies of 358 Social Enterprises, Berthelsmann Stiftung, Gutersloh, Germany.  
Yang, Huang, Lee(2014). Building a performance assessment model for social enterprises-views on social value creation, Science Journal of Business and Management, 1-9.

### 〈인터넷 사이트〉

국토교통부의 건설기술정보시스템, 검색일: 2022. 9. 23.

(<https://www.codil.or.kr/codil.do>).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2. 9. 1.

[www.mohw.go.kr/react/index.jsp](http://www.mohw.go.kr/react/index.jsp)

서울시NPO지원센터, 검색일: 2022. 8. 5.

(<https://news.seoul.go.kr/gov/archives/78484>).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홈페이지, 검색일: 2022. 9. 20.

(<https://civilnet.net/>)

아산나눔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9. 25. (<https://asan-nanum.org/>).

(재)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홈페이지, 검색일: 2022. 8. 26.

(<https://www.v1365.or.kr/new/main/main.php>).

지방재정365 홈페이지, 검색일: 2022. 9. 23.

(<https://lofin.mois.go.kr/portal/main.do>).

통계청 홈페이지, 검색일: 2022. 9. 23.

(<https://kosis.kr/index/index.do>).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홈페이지, 검색일: 2022. 8. 2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index.do>).
- 한국자원봉사협의회 홈페이지, 검색일: 2022. 8. 26.  
(<http://www.vkorea.or.kr/>)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직업능력심사평가원, 검색일: 2022. 11. 12.  
(<https://www.ksqa.or.kr/?pid=H>).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검색일: 2022. 10. 13.  
(<https://mois.go.kr/frt/sub/a06/b06/village/screen.do>.)
- 환경재단 임길진 NGO스쿨, 검색일: 2022. 8. 12.  
(<http://www.greenfund.org/m/m54.php?tabno=1>).
- 환경재단 홈페이지, 검색일: 2022. 8. 12.  
(<http://www.greenfund.org/>).

### 〈웹사이트〉

- 강현철(2015). 강현철의 시사경제 쏘개기: 사회적경제 기본법은 자유시장  
경제 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릴 것. 검색일: 2022. 9. 1.  
(<https://sgsg.hankyung.com/article/2015042421721>).
- 경상국립대학교 경제학과, 검색일: 2022. 9. 1.  
(<https://economics.gnu.ac.kr/economics/cm/cntnts/cntntsView.do?mi=10136&cntntsId=5081>).
-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표준 목적별 개별소비지출분류(COICOP-K)」,  
검색일: 2022. 08. 25.

(<https://www.law.go.kr/LSW/admRulLsInfoP.do?admRulSeq=2100000180435>).

국가법령정보센터, [통계청고시 제2019-228호] (목적별 개별 소비지출 분류 및 가구에 봉사하는 비영리단체 목적 분류). 검색일: 2022. 08. 25.

(<https://www.law.go.kr/LSW/admRulInfoP.do?admRulSeq=2100000028790>).

매거진 루트임팩트(2022. 5. 19.). ‘비영리 스타트업 들어 보셨어요?’. 검색일: 2022. 10. 10.

(<https://rootimpact.org/journal/270/>).

세계타임즈( 2021. 8. 27.). [사회적경제의 민낯 ①] ‘경제’ 빠진 사회적경제 ... 9년간 밑 빠진 독에 혈세 붓기, 검색일: 2022. 11. 2. (<http://m.thesegeye.com/news/view/1065574768505478>).

서울시NPO지원센터, 검색일: 2022. 9. 1.

(<http://www.snpo.kr/archive/project18/page1-1.html>.)

유네스코한국위원회, 검색일 2022. 8. 25.

([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64/1094/page/0](https://www.unesco.or.kr/data/unesco_news/view/764/1094/page/0)).

이로운넷(2022). 비영리스타트업, 비영리 변화 요구에 응답하다. 2022. 04. 19. 자. 검색일: 2022. 10. 12.

(<https://www.eroun.net/news/articleView.html?idxno=28050>).

조선일보(2019. 5. 29.). <더 나은 미래>, 소셜 비즈니스 생태계서 밀려난 ‘비영리 조직’ ... “우리 ‘영리’해도 될까?”, 검색일 2022. 9. 25.

(<https://futurechosun.com/archives/41524>).

한국대학신문(2021. 11. 22.). 409개 대학을 연결하는 ‘힘’.

검색일: 2022. 09. 01. (<https://news.unn.net>).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검색일: 2022. 9. 15.

([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https://www.socialenterprise.or.kr/social/econ/concept.do?m_cd=E021)).

British Council(2022). More in common, the global state of social enterprise, 검색일 2022. 08. 25.

([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more\\_in\\_common\\_global\\_state\\_of\\_social\\_enterprise.pdf](https://www.britishcouncil.org/sites/default/files/more_in_common_global_state_of_social_enterprise.pdf)).

Canada's MaRS Discovery District, 검색일: 2022. 9. 02.

(<https://learn.marsdd.com/article/social-enterprise-business-models/>).

HBM 사회적협동조합(2020). 지역연계형 사회적경제 전문가 양성교육 체계화 프로그램 개발 결과 보고서.

([https://sehub.net/wp-content/uploads/2020/12/3-1.HBM%ED%98%91%EB%8F%99%EC%A1%B0%ED%95%A9\\_%EC%9E%A5%EC%A2%85%EC%9D%B5%EA%B5%90%EC%88%98.pdf](https://sehub.net/wp-content/uploads/2020/12/3-1.HBM%ED%98%91%EB%8F%99%EC%A1%B0%ED%95%A9_%EC%9E%A5%EC%A2%85%EC%9D%B5%EA%B5%90%EC%88%98.pdf)).

KRX ESG 포털, 검색일: 2022. 08. 01.

(<https://esg.krx.co.kr/contents/01/01010100/ESG01010100.jsp>)

OECD(2022). OECD Recommendation on the Social and Solidarity Economy and Social Innovation. 검색일: 2022.

10. 02.

(<https://www.oecd.org/cfe/leed/social-economy/social-economy-recommendation/>).

〈원자료〉

교육통계서비스(2022). 원자료. 검색일: 2022. 07. 01.

## 부 록

1. 델파이 조사 1차 설문지
2.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 부록 1. 델파이 1차 설문지

### I.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비전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 7. 3.)에서 제시하는 비전은 “인재유입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 1. 이 비전이 2023년 이후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 비전으로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핵심비전	낮음			보통			높음		
	전혀 유효하지 않음	별로 유효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유효하다	조금 유효하다	유효하다	조금 크게 유효하다	크게 유효하다	매우 유효하다
인재유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람 중심 생태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2. 위에서 제시한 세 가지 요소 이외에 새로 비전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과 이유가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 II.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핵심 전략에 대한 평가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 7. 3.)에서는 **인재유입 활성화,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종합지원체계 구축**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핵심 전략과 하위 전략에 대하여 지난 5년간의 달성 정도를 평가해 주시고,

244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향후 5년간의 추진 필요성을 제시해 주십시오. 이해의 편의를 위해 각 전략에 대한 추진과제를 참고로 제시하였습니다.

1. 인재유입 활성화 전략과 하위 전략

핵심 전략	하위전략	추진과제
인재 유입 활성화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청년 사회적가치창출활동 지원 ②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취업 확대 ③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확대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④ 신중년 사회적경제 교육 및 취업지원 확대 ⑤ 신중년 사회적경제기업 창업 지원 ⑥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

1-1. 지난 5년간의 추진 전략의 달성 정도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매우 크게 미흡	크게 미흡	조금 미흡	매우 조금 충분	조금 충분	충분	조금 크게 충분	크게 충분	매우 충분
1. 인재유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의 필요성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1. 인재유입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1. 청년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2. 신중년 사회적경제 진출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1-3. 향후 5년간 인재유입 활성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하위 전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 2.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전략

핵심전략	하위전략	추진과제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사회적경제 학부 개설 지원 ② 사회적경제 석박사 학위과정 확대 ③ 외국 대학과 교류 지원 및 해외연수 프로그램 확대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④ 희망사다리 장학생 대상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⑤ 사회적경제기업 탐방 프로그램 제공 ⑥ KOICA 등 해외봉사단 사회적경제 교육 및 컨설팅 제공 ⑦ 대학생협 활성화 지원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	⑧ 권역별 사회적경제 리더 포럼 운영 ⑨ 도시재생 등 사회적경제 진출 유망분야 전문리더 육성 지원

### 2-1. 지난 5년간의 추진 전략의 달성 정도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매우 크게 미흡	크게 미흡	조금 미흡	매우 조금 충분	조금 충분	충분	조금 크게 충분	크게 충분	매우 충분
2.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리더로 육성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의 필요성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2.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1.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2.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3.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하위 전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전략

핵심전략	하위전략	추진과제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① 사회적경제기업 중간관리자 대상 회계·마케팅 등 업무분야별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② 훈련비용 지원 등 사회적경제기업 종사자 대상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③ 사회적경제 전용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K-MOOC 강좌 개설 ④ 지역 중심 사회적경제 전문교육 확대 ⑤ 사회적경제기업 훈련 프로그램 개발비 및 인건비 지원

## 3-1. 지난 5년간의 추진 전략의 달성 정도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3.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3-2.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의 필요성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3. 사회적경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3-1.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2. 교육의 편의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3.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에 필요한 추가적인 하위 전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전략

핵심전략	하위전략	추진과제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① 사회적경제 과목개설 지원 및 교원 역량 강화 등 ② 차기 교육과정 개편 시 사회적경제 내용 반영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③ 지역교육센터 등을 활용한 사회적경제 상 시학습 지원 ④ 지역주민의 다양한 사회적경제 활동 지원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⑤ 사회적경제 통합행사 개최 ⑥ 민관협업을 통한 사회적경제 인식 확대

## 4-1. 지난 5년간의 추진 전략의 달성 정도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매우 크게 미흡	크게 미흡	조금 미흡	매우 조금 충분	조금 충분	충분	조금 크게 충분	크게 충분	매우 충분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접근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4-2.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의 필요성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4.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1. 초·중·고 학령기 교육 접근성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2.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3.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3.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하위 전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5. 종합지원체계 구축 전략

핵심전략	하위전략	추진과제
종합지원체계 구축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지역·현장 중심 사회적경제 교육 제공 ② 사회적경제 관련 연구·개발 등 중앙 뒷받침 시스템 구축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③ 사회적경제 교육 콘텐츠 개발 ④ 신재생에너지 등 분야별 사회적경제 전문 강사 양성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⑤ 기능별 특화과정 개설 등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⑥ 공무원 교육과정 내 사회적경제 교육 반영

5-1. 지난 5년간의 추진 전략의 달성 정도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매우 크게 미흡	크게 미흡	조금 미흡	매우 조금 충분	조금 충분	충분	조금 크게 충분	크게 충분	매우 충분
5. 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	---	---	---	---	---	---	---	---	---

## 5-2. 향후 5년간의 추진 전략의 필요성

핵심 전략 및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 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하다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5.종합지원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1.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2. 콘텐츠 및 강사양성 등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3. 공무원 및 지원조직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5-3. 향후 5년간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에 필요한 추가적인 하위 전략이 있으면  
제시해 주십시오.

포함 항목	이유
1.	
2.	
3.	
4.	
5.	

Ⅲ. 사회적경제 인력양성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제시할 핵심전략과 하위 전략이 있다면 제시해 주십시오.

핵심전략 (또는 분야)	하위전략	제시 이유

Ⅳ. 추가적인 제안 사항

추가적인 제안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 부록 2. 델파이 조사 2차 설문지

## I.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의 비전과 목표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7.3.)에서 제시한 비전은 “인재유입과 역량강화를 통한 사람 중심의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입니다. 이제 새로운 비전으로서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을 제시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이 2023년 이후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 비전으로 유효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낮음			보통			높음		
전혀 유효하지 않음	별로 유효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유효	조금 유효	유효	조금 크게 유효	크게 유효	매우 유효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2023년 이후의 사회적경제 인력양성의 핵심 비전으로 “변화와 실천을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으로 할 경우 목표를 “**사회적경제의 내실화와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제고**”로 제시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목표	낮음			보통			높음		
	전혀 유효하지 않음	별로 유효하지 않음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유효	조금 유효	유효	조금 크게 유효	크게 유효	매우 유효
사회적경제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의 효과성 제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I.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 핵심전략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2018.7.3.)에서는 **인재유입 활성화, 사회적경제 핵심 리더 육성,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 및 전문성 강화, 풀뿌리 사회적경제 토대 구축, 종합지원체제 구축** 등 다섯 가지를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였습니다. 이 전략을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구축,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등으로 바꾸고자 합니다. 각 전략을 평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종합계획의 하위 전략을 포함하여 각 하위 전략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목표	낮음			보통			높음		
	전혀 유효 하지 않음	별로 유효 하지 않음	그저 그렇 다	매우 조금 유효	조금 유효	유효	조금 크게 유효	크게 유효	매우 유효
사회적경제 참여 및 자립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2. 변화를 선도하는 사회적경제인 양성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종합계획의 하위 전략을 포함하여 각 하위 전략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 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청년 사회적 경제인 양성 (과거 1-1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신중년 사회적 경제 진출 확대 (과거 1-2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일반 기업의 사회적경제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시민·복지·종교단 체의 사회적 경제 참여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신기술 분야 인력 유입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글로벌 진출 필요인력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전문직 은퇴자 인재유입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업계열 사회적 경제인 양성과정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취약계층 맞춤형 인재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3. 사회적경제 교육 접근성 강화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2018년 종합계획의 하위 전략을 포함하여 각 하위 전략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대학 내 전문교육과정 확대 (과거 2-1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학생들을 예비 사회적경제 리더로 육성 (과거 2-2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유망분야 리더 육성(과거 2-3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상별 맞춤형 교육훈련 제공 (과거 3-1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서비스 분야 전문 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전문경영인 육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종사자 역량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강사·교수 인력 풀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대학 내외, 대학 간 전문교육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 경제 표준 교과과정 수립 및 운용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고용보험 연계 직무교육 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조직 인턴십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종사자 윤리교육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 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초·중·고 학령기 교육 접근성 확대 (과거 4-1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주민의 교육 접근성 강화(과거 4-2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국민의 이해도 및 인식 제고 (과거 4-3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초중고와 대학교육 연계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기업 체험교육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직업 재교육 연계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 소외 계층 대상 교육 기회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교사 연수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교육 대상자 인센티브 제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대국민 홍보주간 운영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4. 사회적경제 학습생태계 구축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신규로 개발된 전략입니다. 각 하위 전략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교육의 편의성 제고 (과거 3-2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인력 양성 통합 플랫폼 내실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인재 양성교육원·대학 설립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연구자양성 및 연구 인프라 구축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관련 교육기관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해외 대학 교류 활성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주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역 단위 학습 생태계 구축(평생 학습관, 직업훈련 기관 등)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조직내 학습소모임 체계적 지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협의회, 연합회 등이 관리하는 교육과정 확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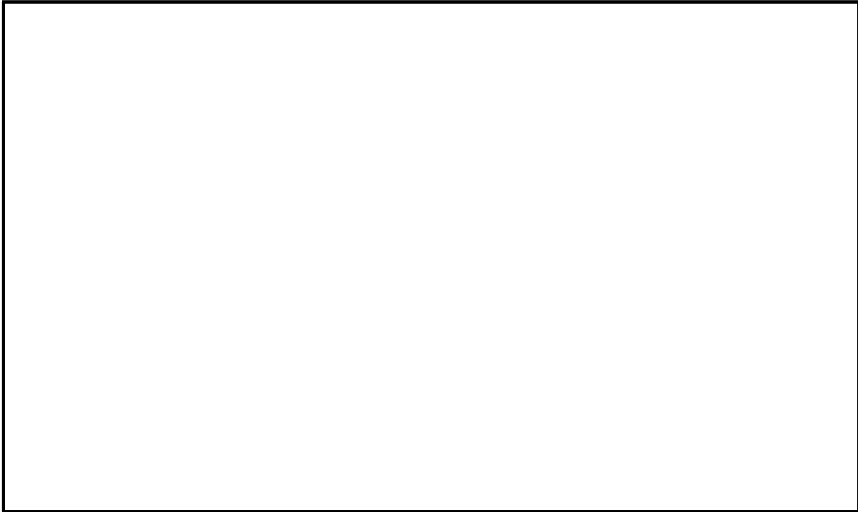


5. **종합지원체제 재구조화** 전략의 하위 전략으로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습니다. 이 전략은 신규로 개발된 전략입니다. 2018년 종합계획의 하위 전략을 포함하여 각 하위 전략의 필요성을 평가해 주십시오.

하위 전략	낮음			보통			높음		
	전혀 필요 없다	별로 필요 없다	그저 그렇 다	매우 조금 필요	조금 필요	필요 하다	조금 크게 필요	크게 필요	매우 필요
인재양성 통합 추진체계 구축 (과거 5-1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콘텐츠 및 강사 양성 등 인프라 구축(과거 5-2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무원 및 지원 조직 역량 강화 (과거 5-3 전략)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자체-대학- 사회적경제의 연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지원기관 등 전달 체계 연계성 강화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사회적경제 공무원 전문가 충원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공기관 사회적 경제 담당부서 개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공모사업 컨소시엄 장려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III.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 사항**

추가적인 의견이나 제안 사항이 있다면 적어 주십시오.

A large, empty rectangular box with a black border, intended for the respondent to write any additional opinions or suggestions. The box is currently blank.

## □ 저자 약력

- 김승보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유한구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김안국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명예위원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교육·인재정책 방안 연구

- 발행연월일 2022년 11월 30일 인쇄  
2022년 11월 30일 발행
- 발 행 인 류 장 수
- 발 행 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사회정책동  
홈페이지: <http://www.krivet.re.kr>  
전 화: (044)415-5000, 5100  
팩 스: (044)415-5200
- 등 록 일 자 1998년 6월 11일
- 등 록 번 호 제16-1681호
- I S B N 979-11-6961-340-8 (93370)
- 인 쇄 처 (사)대한문화체육교육협회 장애인자립지원단



[www.krivet.re.kr](http://www.krivet.re.kr)



값 8000원  
83370



9 791169 613408  
ISBN 979-11-6961-340-8